

연구보고서 2006-11

사회양극화의 실태와 정책과제

강신욱

신영석 이태진 강은정

김태완 최현수 임완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06-11

사회양극화의 실태와 정책과제

강신욱

신영석 이태진 강은정

김태완 최현수 임완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머리말

지난 몇 년간 우리 사회의 가장 뜨거운 쟁점은 단연 ‘양극화’였다. 양극화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모든 영역에서 핵심적 과제였으며, 정책 당국과 학계는 물론 언론과 일상생활의 담론을 지배하여 온 화두였다. 양극화가 이렇게 사회적 논의의 중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극화의 의미와 실태, 대응방안에 대해 체계적인 논의가 드물었다는 것은 정책연구를 담당하는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늦게나마 우리 연구원에서 사회양극화에 대한 체계적 접근을 시도하는 보고서가 나오게 된 것은 무척 다행스럽고도 반가운 일이다.

이 『사회양극화의 실태와 정책과제』 보고서는 적어도 두 가지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앞서 언급했듯이 사회양극화에 대한 체계적이고도 다각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 보고서는 “양극화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에서 출발하고 있는 만큼 개념정의에서부터 진지한 탐색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양극화란 이런 현상을 말한다”고 한정하는 대신 양극화를 구성하는 다양한 계기들에 대해 실증적 검토를 보임으로써 기존의 양극화 논의에 대한 반성과 향후의 연구에 대한 발판 제시라는 두 가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낼 수 있었다고 판단한다.

다른 한 가지 의미는 이 보고서가 우리 연구원의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소득분배의 영역 이외에도 건강·영양이나 의료비 지출 등 보건정책분야의 연구자와 협업을 수행함으로써 학제간 연구에 적합한 환경을 지닌 우리 연구원의 장점을 잘 살렸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사회양극화에 대한 연구는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이다. 이제까지의 논의에서 추상적으로만 언급되었던 양극화의 원인과 효과 등도 면밀한 실증적 검토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 현실에 적합한 정책적 대

옹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그러한 작업이 보다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시의적으로 민감한 주제에 대해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접근하여준 우리 연구원의 강신욱 연구위원과 공동연구진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신영석 연구위원과 이태진, 강은정 부연구위원, 김태완, 최현수 선임연구원, 그리고 임완섭 연구원이 지혜와 노력을 모아 연구를 진행하였다. 물론 연구결과는 우리 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닌 연구진의 견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연구진의 노력과 기여가 과소평가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2006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용문

목 차

Abstract	15
요약	17
제1장 서론	21
제1절 연구목적	2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5
제2장 사회양극화의 의미	28
제1절 양극화 이해를 둘러싼 쟁점과 사회양극화의 의미	28
제2절 양극화 지수의 이해	31
제3절 분배구조 변화의 파악을 위한 다양한 접근의 필요성	41
제3장 빈곤의 변화	44
제1절 빈곤 규모와 심도의 변화	44
제2절 빈곤층 구성의 변화	51
제4장 불평등의 변화	53
제1절 계층간 불평등의 변화	53
제2절 집단간 불평등의 변화	66
제5장 중산층의 규모 변화와 극화의 진행	74
제1절 계층구성의 변화	74
제2절 양극화지수의 변화	82
제3절 다극화지수의 변화	89

제6장 계층간 이동가능성의 변화	98
제1절 계층간 이동가능성 변화양상	98
제2절 계층간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06
제7장 분야별 불평등 실태	113
제1절 소득분위별 건강·영양상태의 분포	113
제2절 주거부문의 불평등	128
제3절 의료비 부담의 불평등	154
제8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74
참고문헌	179
부록	185

표 목 차

〈표 2- 1〉 분배구조 변화 관련 분석내용 및 관련 지표	43
〈표 3- 1〉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45
〈표 3- 2〉 절대적 빈곤율 변화추이	45
〈표 3- 3〉 절대적 빈곤격차비율 변화추이	47
〈표 3- 4〉 경상소득 상대적 빈곤율과 빈곤격차비율	48
〈표 3- 5〉 가처분소득 상대적 빈곤율과 빈곤격차비율	48
〈표 3- 6〉 소비지출 상대적 빈곤율과 빈곤격차비율	49
〈표 3- 7〉 빈곤가구의 구성 변화	51
〈표 4- 1〉 소득 및 소비지출 지니계수 변화추이	54
〈표 4- 2〉 경상소득 기준 분위수 배율 변화추이	55
〈표 4- 3〉 가처분소득 기준 분위수 배율 변화추이	56
〈표 4- 4〉 소비지출 기준 분위수 배율 변화추이	56
〈표 4- 5〉 경상소득 기준 분위별 점유율 변화추이	59
〈표 4- 6〉 가처분소득 기준 분위별 점유율 변화추이	60
〈표 4- 7〉 소비지출 기준 분위별 점유율 변화추이	60
〈표 4- 8〉 경상소득 기준 상·하위계층 분위별 지니계수 변화추이	63
〈표 4- 9〉 가처분소득 기준 상·하위계층 분위별 지니계수 변화추이	64
〈표 4-10〉 소비지출 기준 상·하위계층 분위별 지니계수 변화추이	65
〈표 4-11〉 가구주 성별 엔트로피분해 결과	68
〈표 4-12〉 가구주 연령별 엔트로피분해 결과	69
〈표 4-13〉 가구주 학력별 엔트로피분해 결과	70
〈표 4-14〉 거주지역별 엔트로피분해 결과	71
〈표 4-15〉 Zhang and Kanbur의 지표를 이용한 양극화지수 추이	72

〈표 5- 1〉 계층구성의 변화(경상소득기준)	75
〈표 5- 2〉 계층별 경상소득 점유율변화	76
〈표 5- 3〉 가처분소득 계층별 가구비중의 변화	77
〈표 5- 4〉 가처분소득 계층별 점유율 변화	78
〈표 5- 5〉 소비지출 계층별 가구비중 변화	79
〈표 5- 6〉 소비지출 계층별 점유율 변화	81
〈표 5- 7〉 경상소득 양극화지수 변화	83
〈표 5- 8〉 가처분소득 양극화지수변화추이	85
〈표 5- 9〉 소비지출 양극화지수	87
〈표 5-10〉 경상소득 3극화지수	90
〈표 5-11〉 가처분소득 3극화지수	91
〈표 5-12〉 소비지출 3극화지수	92
〈표 5-13〉 경상소득 4극화지수	94
〈표 5-14〉 가처분소득 4극화지수	94
〈표 5-15〉 소비지출 4극화지수	95
〈표 6- 1〉 2003~2004년 경상소득 계층이동	99
〈표 6- 2〉 2004~2005 경상소득기준 계층이동	100
〈표 6- 3〉 2005~2006상반기 경상소득 기준 계층이동	100
〈표 6- 4〉 2003~2004년 가처분소득계층간 이동비율 변화	102
〈표 6- 5〉 2004~2005년 가처분소득계층간 이동비율 변화	102
〈표 6- 6〉 2005~2006년 가처분소득계층간 이동비율 변화	103
〈표 6- 7〉 2003~2004년 소비지출 기준 계층이동	104
〈표 6- 8〉 2004~2005년 소비지출 기준 계층이동	105
〈표 6- 9〉 2005~2006년 소비지출 기준 계층이동	105
〈표 6-10〉 빈곤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08
〈표 6-11〉 계층이동요인에 대한 다항로짓추정결과(계층하락: 유지)	110
〈표 6-12〉 계층이동요인에 대한 다항로짓추정결과(계층상승: 유지)	112
〈표 7- 1〉 각 연도별 월평균 가구소득의 10분위 분포	115

〈표 7- 2〉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건강수준이 양호한 인구의 비율 (2005년):	
19세 이상	116
〈표 7- 3〉 건강수준이 양호한 인구의 소득분위별 비교: 20세 이상	116
〈표 7- 4〉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연간 침상와병일수 (2005년)	118
〈표 7- 5〉 연간 침상와병일수의 소득분위별 비교	118
〈표 7- 6〉 평균 만성질환 개수의 소득분위별 비교: 20세 이상	120
〈표 7- 7〉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남성 흡연율 (2005년)	121
〈표 7- 8〉 남성 흡연율의 소득분위별 비교: 20세 이상	122
〈표 7- 9〉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지난 2년간 건강검진율 (2005년): 19세 이상 ..	123
〈표 7-10〉 지난 2년간 건강검진율의 소득분위별 비교: 20세 이상	123
〈표 7-11〉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연간 입원이용률 (2005년)	125
〈표 7-12〉 연간 입원이용률의 소득분위별 비교	125
〈표 7-13〉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2주간 외래이용률 (2005년)	127
〈표 7-14〉 2주간 외래이용률의 소득분위별 비교	127
〈표 7-15〉 분석틀	131
〈표 7-16〉 OECD 기준 소득계층별 주택유형	132
〈표 7-17〉 지역별 주택유형	133
〈표 7-18〉 OECD 기준 소득계층별 점유형태	134
〈표 7-19〉 지역별 점유형태	134
〈표 7-20〉 OECD 기준 소득계층별 1인당 주거면적	135
〈표 7-21〉 1인당 주거면적 기준 분위수 배율	135
〈표 7-22〉 지역별 1인당 주거면적	136
〈표 7-23〉 소득계층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136
〈표 7-24〉 지역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137
〈표 7-25〉 소득계층별 전용시설 미구비 가구율	138
〈표 7-26〉 지역별 전용시설 미구비 가구율	138
〈표 7-27〉 소득계층별 3인 이상 단칸방 거주가구 비율	139
〈표 7-28〉 지역별 3인 이상 단칸방 거주가구 비율	140

〈표 7-29〉 소득계층별 자가점유율	140
〈표 7-30〉 지역별 자가점유율	141
〈표 7-31〉 소득계층별 거주위치	141
〈표 7-32〉 지역별 거주위치	142
〈표 7-33〉 주거비 부담 관련 지표	142
〈표 7-34〉 소득계층별 PIR (경상소득 기준)	143
〈표 7-35〉 지역별 PIR (경상소득 기준)	144
〈표 7-36〉 가구주 연령별 PIR (경상소득 기준)	144
〈표 7-37〉 소득계층별 RIR (경상소득 기준)	145
〈표 7-38〉 지역별 RIR (경상소득 기준)	145
〈표 7-39〉 가구주 연령별 RIR (경상소득 기준)	145
〈표 7-40〉 소득계층별 주거비지불능력 미달가구 비율	146
〈표 7-41〉 지역별 주거비지불능력 미달가구 비율	147
〈표 7-42〉 가구주 연령별 주거비지불능력 미달가구 비율	147
〈표 7-43〉 소득계층별 최저주거비부담 과다가구 비율	148
〈표 7-44〉 지역별 최저주거비부담 과다가구 비율	148
〈표 7-45〉 가구주 연령별 최저주거비부담 과다가구 비율	149
〈표 7-46〉 주거용 자산 기준 분위수 배율	149
〈표 7-47〉 소득계층별 주택자산	151
〈표 7-48〉 지역별 주택자산	152
〈표 7-49〉 지니계수 변화 추이	153
〈표 7-50〉 주거면적 및 주택자산 지니계수	153
〈표 7-51〉 치료비용 규모와 재정적 부담간 관계	156
〈표 7-52〉 과부담 의료비 지출에 대한 개념 정의	159
〈표 7-53〉 분석데이터 분포	161
〈표 7-54〉 2001년과 2005년의 최저생계비 규모	162
〈표 7-55〉 의료급여 수급자의 종별 진료비 및 본인부담 실태(2001년)	163
〈표 7-56〉 의료급여 수급자의 종별 진료비 및 본인부담 실태(2005년)	163

〈표 7-57〉 의료급여 수급자의 종별 과부담 의료비 분석자료(2001년)	164
〈표 7-58〉 의료급여 수급자의 종별 과부담 의료비 분석자료(2005년)	164
〈표 7-59〉 건강보험 소득 분위별 진료비 및 본인부담 실태(지역, 2001년) ..	166
〈표 7-60〉 건강보험 소득 분위별 진료비 및 본인부담 실태(지역, 2005년) ..	166
〈표 7-61〉 건강보험 소득 분위별 과부담 의료비 분석자료(지역, 2001년) ..	167
〈표 7-62〉 건강보험 소득 분위별 과부담 의료비 분석자료(지역, 2005년) ..	168
〈표 7-63〉 건강보험 소득 분위별 진료비 및 본인부담 실태(직장, 2001년) ..	170
〈표 7-64〉 소득 분위별 진료비 및 본인부담 실태(직장, 2005)	170
〈표 7-65〉 건강보험 소득 분위별 과부담 의료비 분석자료(직장, 2001년) ..	171
〈표 7-66〉 소득 분위별 과부담 의료비 분석자료(직장, 2005)	171
〈부표- 1〉 계층별 가구구성의 변화 - 가구주 성	185
〈부표- 2〉 계층별 가구구성의 변화 - 가구주 연령	185
〈부표- 3〉 계층별 가구구성의 변화 - 가구주 학력	185
〈부표- 4〉 계층별 가구구성의 변화 - 가구원수	186
〈부표- 5〉 경상소득 양극화지수 관련 통계량	186
〈부표- 6〉 가처분소득 양극화지수 관련 통계량	186
〈부표- 7〉 소비지출 양극화지수 관련 통계량	187
〈부표- 8〉 경상소득 3극화지수 관련 통계량	187
〈부표- 9〉 가처분소득 3극화지수 관련 통계량	187
〈부표-10〉 소비지출 3극화지수 관련 통계량	188
〈부표-11〉 경상소득 4극화지수 관련 통계량(1)	188
〈부표-12〉 경상소득 4극화지수 관련 통계량(2)	188
〈부표-13〉 가처분소득 4극화지수 관련통계량(1)	189
〈부표-14〉 가처분소득 4극화지수 관련통계량(2)	189
〈부표-15〉 소비지출 4극화지수 관련 통계량(1)	189
〈부표-16〉 소비지출 4극화지수 관련 통계량(1)	190

그림목차

[그림 2- 1] 울프슨의 양극화지수	35
[그림 2- 2] 불평등은 감소하나 양극화는 심화되는 경우	37
[그림 2- 3] 빈곤은 감소하나 양극화는 심화되는 경우	37
[그림 2- 4] 집단화를 통해 불평등을 파악하는 데 따른 오차	39
[그림 3- 1] 절대빈곤율 변화추이	46
[그림 3- 2] 절대적 빈곤격차비율 추이	47
[그림 3- 3] 중위 50%기준 상대빈곤율 추이	49
[그림 3- 4] 중위 50%기준 빈곤격차비율 추이	50
[그림 4- 1] 소득 및 지출유형별 지니계수 변화추이	54
[그림 4- 2] 소득 및 소비지출의 분위수배율(P90/10) 변화추이	57
[그림 4- 3] 소득 및 소비지출의 분위수배율(P90/50) 변화추이	58
[그림 4- 4] 소득 및 소비지출의 분위수배율(P80/20) 변화추이	58
[그림 4- 5] 소득 및 소비지출 10분위배율 변화추이	61
[그림 4- 6] 소득 및 소비지출의 5분위배율 변화추이	62
[그림 4- 7] 경상소득 기준 상·하위계층 분위별 지니계수 변화추이	63
[그림 4- 8] 가처분소득 기준 상·하위계층 분위별 지니계수 변화	64
[그림 4- 9] 소비지출 기준 상·하위계층 분위별 지니계수 변화추이	65
[그림 5- 1] 경상소득 계층별 가구비중의 변화	75
[그림 5- 2] 경상소득 계층별 점유율 변화	76
[그림 5- 3] 가처분소득 계층별 가구비중 변화	77
[그림 5- 4] 가처분소득 계층별 점유율 변화	79
[그림 5- 5] 소비지출계층별 가구비중 변화	80
[그림 5- 6] 소비지출 계층별 점유율 변화	81

[그림 5- 7]	경상소득 양극화지수 변화	84
[그림 5- 8]	경상소득 양극화지수 변화추이(1996=100)	84
[그림 5- 9]	가처분소득 양극화지수 변화추이	86
[그림 5-10]	가처분소득 양극화지수 변화추이(1996=100)	86
[그림 5-11]	소비지출 양극화지수 변화추이	88
[그림 5-12]	소비지출 양극화지수 변화추이(1996=100)	88
[그림 5-13]	경상소득 3극화지수 변화 추이(1996=100)	90
[그림 5-14]	가처분소득 3극화지수 변화추이(1996=100)	92
[그림 5-15]	소비지출 3극화지수 변화추이(1996=100)	93
[그림 5-16]	경상소득 4극화지수(1996=100)	94
[그림 5-17]	가처분소득 4극화지수 변화추이(1996=100)	94
[그림 5-18]	소비지출 4극화지수(1996=100)	95
[그림 5-19]	경상소득다극화지수의 변화 비교	96
[그림 5-20]	가처분소득다극화지수의 변화 비교	96
[그림 5-21]	소비지출 다극화지수의 변화 비교	97
[그림 6- 1]	경상소득 계층이동비율 변화	101
[그림 6- 2]	가처분소득 계층이동비율 변화	103
[그림 6- 3]	소비지출 계층이동비율 변화	106
[그림 7- 1]	소득 10분위별 연간 침상와병일수의 변화	119
[그림 7- 2]	소득 10분위별 평균 만성질환 개수의 변화: 20세 이상	120
[그림 7- 3]	소득 10분위별 지난 2년간 건강검진율의 변화: 20세 이상	124
[그림 7- 4]	소득 10분위별 연간 입원이용률의 변화	126
[그림 7- 5]	소득 10분위별 2주간 외래이용률의 변화	128

Abstract

A Study on Social Polarization in Korea

Though social polarization was a hot issues in social policy debate in Korea in recent years, there has not existed a rigorous conception of definition on what polarization means. Many researchers have understood the concept of polarization on their own way with different social indicators. In this study, we tried multiple approach to understand the change of income distribution of Korea, rather than to define the concept of social polarization a priori. We used the raw data of "National Survey of Household Income Expenditure(1996. 2000 by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National Survey of the Actual Conditions of Household Livelihood(2003, by KIHASA)", and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2006 Jan-June, by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All of these data include the rural population and 1 person household in their samples. The main result we could find are as follows.

From 1996 to the first half or 2006, poverty rate and poverty gap ratio have increased continuously, in both absolute and relative term. Though income equality is getting better recently, but it does not go back to the level of 1996. On the contrary, inequality of consumption is worsening since 2000. The ratio of 10th income decile to 1st income decile has been increasing. What is worse, the income inequality in lowest income decile has increased. We could find that the income share of middle class(the household who has more than 50% and less than 150% of median income) is decreasing, from which we can guess 'withering middle class' is going on. The decreasing Wolfson index also verifies that phenomenon. In case of Esteban-Ray's polarization indices, it has moved a little complicatedly.

Compared with 1996 level, these indices show high degree of polarization in the half of 2006, but they went up and down between the years. Tri-polarization trend was more prominent than bi-polarization during that period. According to inter-class mobility analysis during 2003~2006, sex, age, education level of householder and job-holer's ratio are proved to be significant factors in explaining poverty experience and class mobility.

Two main policy implications can be induced from above analysis. First, the social policy to secure basic livelihood of the poor should be enforced. Considering that female, old, low educated, and 1-person households account for large portion of the poor class, anti-poverty policy should specially focus on these groups. Second, middle class household should be included into the target group of social policy. Many of worsening social indicators show that income instability of middle class is getting serious, and which imply that the policy design to protect the falling of middle class and promote their up-going is much required.

요 약

양극화에 관한 최근 논의의 전개양상을 보면 양극화의 의미에 대한 명확한 개념규정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각기 다른 사회지표들을 근거로 양극화를 주장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그 결과 양극화에 대한 논의의 수준이 진전되고 정책적 대안이 모색되기보다는 정치적 책임을 둘러싼 논의의 과잉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양극화에 대한 선협적 규정을 유보한 채, 우리나라의 분배구조 변화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양극화가 실제로 어떤 내용으로 구성 및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양극화의 의미에 대한 이론적 검토부분(2장)과 경상소득, 가치분소득, 소비지출의 다양한 불평등 구조에 대한 분석(3장~6장), 그리고 보건복지정책의 주요 세부분야별 불평등구조 분석(7장)으로 구성된다. 소득과 소비지출에 대한 분석에서는 1996년과 2000년의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 2003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민생활실태조사자료, 2006년 상반기까지의 통계청 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하였다. 이들 자료는 모두 농어촌가구 및 1인가구를 포함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 취약계층의 실태파악을 위해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계층간 이동양상을 분석할 경우에는 2003년부터 2006년 상반기까지의 통계청 가계조사 연결자료를 이용하였다. 또한 분야별 실태분석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2001, 2005),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진료실적자료(2001, 2005)를 이용하였다. 가구규모가 미치는 영향을 상쇄하기 위하여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하였으며, 가구균등화지수는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누는 방식을 이용하였다.

빈곤의 실태에 대한 3장의 분석에는 우리 사회의 빈곤이 규모와 정도 양 측면 모두에서 심화되었음이 나타났다. 최저생계비를 빈곤선으로 한 절대빈곤의

경우 경상소득 기준 절대빈곤이 1996년의 3.09%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6년 상반기에는 11.54%에 이르렀다. 소비지출의 절대빈곤은 2003년까지는 감소하다가, 그 이후 기간동안 다시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다. 경상소득의 절대 빈곤격차비율도 1996년의 0.70%에서 2006년 상반기 4.47%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중위값의 50%를 빈곤선으로 삼은 상대빈곤의 경우에도 그대로 나타났다. 경상소득의 상대빈곤은 1996년 8.97%에서 2006년 상반기 16.62%까지 증가했다. 빈곤층의 구성을 보면 여성가구, 60세 이상가구, 저학력가구, 1인가구의 비중이 전계층 평균에 비해 모든 연도에서 높게 나타났다.

4장에서는 불평등의 변화양상을 분석하였다. 지니계수를 통해서 본 소득불평등은 최근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지만 경제위기 이전의 시점 수준으로는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지출의 불평등의 경우 2000년 이후 오히려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지니계수에 비해 10분위 분배율의 악화경향이 뚜렷하게 관측되었는데, 1분위와 10분위의 경상소득 점유율 비율이 1996년에 6.68배였던 것이 2006년 상반기에는 14.86배까지 약 두 배가량 높아졌다.

전체적으로 5분위 이하의 구간에서는 점유율 하락이, 그 이상의 구간에서는 점유율 상승이 관측되었다. 하위 1, 2분위에서는 점유율의 축소뿐만 아니라 분위 내 불평등도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한편,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집단을 구분한 후 집단간 불평등의 변화양상을 분석한 결과, 집단간 불평등보다는 집단내 불평등이 더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5장에서는 중산층의 축소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소득과 소비의 분포를 중위소득 기준 50%, 70%, 150%선에서 잘라 전체를 네 계층으로 나눈 후 각각 을 빈곤층, 중하층, 중간층, 상류층으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소득과 소비지출 모두에서 중산층의 규모가 축소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중하층과 중간층은 가구의 비중뿐만 아니라 소득 및 소비점유율에서 지속적으로 위축되는 양상을 보였고, 반대로 빈곤층과 상류층의 비중은 계속 증가하였다. 중간층에서 이탈된 계층은 상류층보다는 빈곤층으로 편입되는 비율이 많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러한 중산층의 위축은 올프슨의 양극화지수 변화추이를 통해서도 그대로 확인되었다. 한편 에스테반-레이지수를 통해서 본 극화의 진행양상은 다소 복잡한 모습을 띠었다. 전체적으로 1996년에 비해 2006년 상반기는 모든 지수값과 변수에서 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양극화는 심화와 완화를 반복하는 양상을 보였고, 소득과 소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전체 가구를 양분하여 파악되는 양극화의 경향보다는 전체 가구를 3분했을 때 나타나는 3극화의 경향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에스테반-레이의 양극화지수를 통해 우리나라의 양극화 경향을 파악하려는 시도들이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2003년부터 2006년 상반기까지 계층이동을 분석한 6장에서 빈곤경험 여부와 계층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취업가구원수의 비율, 가구주의 성, 연령, 교육수준 등이 지적되었다. 특히 취업가구원수의 비율이 높을수록 빈곤경험확률과 계층하향화률은 낮아지고 계층상승화률은 높아졌다. 여성가구주와 고령층 가구주는 계층상승화률과 하락화률이 모두 높아 소득계층상 지위가 불안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구주의 종사산업 면에서는 제조업에 비해 건설업, 도소매·숙박업, 민간서비스업이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7장의 분석 결과 저소득 및 저학력 계층의 건강·영양상태가 타 계층에 양호하지 못한 것이 확인되었다. 여성가구와 저학력가구, 저소득 가구의 침상와병일수와 만성질환 개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높은 소득을 지닌 가구일수록 흡연율은 낮고 건강검진율은 높았다. 소득의 불평등이 건강·영양의 측면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거부문의 양적, 질적 비표가 일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층의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이 과다하게 나타났으며 주거비 미달가구나 최저주거비부담 과다가구의 비율도 빈곤층의 경우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비 부담의 측면에서는 소득계층간 양극화경향은 관측되지 않았으나,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고령화가 더욱 진행될 경우 저소득층의 의료비지출이 생계

를 위협하는 정도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상의 연구를 바탕으로 크게 두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하나는 빈곤층에 대한 보호의 강화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00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격차비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초 생활보장제도의 탈빈곤 효과는 물론 빈곤층 생활보호효과도 충분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빈곤층에 대한 보호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빈곤층 구성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가구, 노인가구, 1인 가구, 저학력가구에 대한 대상적 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중산층의 소득불안이 심한 만큼 사회보장정책의 대상영역을 빈곤층에서 더 위로 끌어 올려 중하층까지를 포괄하는 정책으로 설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중산층의 하향이동을 막고 계층상승을 촉진하기 위한 추가적 정책이 필요한 바, 이는 기존의 사회안전망정책의 대상과 내용을 변화시키지 않고는 힘든 일일 것이다.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1. 양극화 논의의 특징

지난 수년간 우리나라의 사회정책과 관련된 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단연 ‘양극화’였다. 양극화는 단지 학술적인 문헌에서뿐만 아니라 언론은 물론 일상적 생활 가운데에서도 빈번하게 접하는 단어가 되었다. 1997년 경제위기 직후 악화되었던 각종 경제지표가 2000년 이후 일시적으로 호전되었으나 다시 우리 경제가 경기침체상태가 지속되면서 양극화는 위기 이후 우리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집약적으로 표현하는 키워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듯하다.

그런데 양극화와 관련된 논의의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두 가지 특징적인 점이 발견된다. 첫째는 양극화에 대한 문제제기가 주로 정부에 의해 제기되었다는 점이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적 구조전환을 위한 필요성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양극화의 심화를 그 근거로 제시하였고, 크고 작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양극화 해소를 표방하였다^{주1)}.

정부가 앞서 양극화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논의의 과급효과는 매우 커졌고, 양극화가 사회 전체를 덮고 있는 문제라는 인식이 공감을 얻게 되었으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도 사실이다. 양극화를 둘러싼 정치적 논의의 과잉이 그 단적인 예이다. 과연 양극화는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양극화가 심화된 것은 정부의 정책실패 때문인가,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법은 경기부양인가 재분배정책인가 등을 놓고 상반된 견해들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구체

주1)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2005), 국민경제자문회의(2006), 대통령자문 정책기획 위원회(2006) 등 참조.

적 쟁점들은 현상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각 견해들은 양극화의 책임과 그 해소를 위한 부담의 귀착에 대해 상이한 정책적 대안을 함의하고 있는데, 바로 이 부분에 관한 논란이 전체 양극화 논의를 지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극단적인 경우, 양극화라는 쟁점을 꺼낸 정부의 정치적 의도를 문제 삼는 경우도 있었는데, 주로 언론에서 발견되던 이러한 경향이^{주2)} 최근에는 학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안종범·석상훈 2006, 최광 외 2006).

그런데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게 된 이유는 양극화 논의전개의 두 번째 특징이 놓여 있다. 그것은 양극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불분명한 채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어떤 경우에는 지니계수의 상승으로 표현되는 불평등의 심화가 양극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소득 상·하위 집단간의 격차가 확대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혹자는 빈곤의 확대를 다른 사람은 중산층의 붕괴를 양극화로 해석하기도 한다. 더 큰 범주에서는 양극화가 기업이나 산업 간의 부문간 격차가 확대되는 현상을 의미하기도 고용이나 소득의 격차 확대를 의미하기도 한다. 최근에 이르러 학계의 연구에서는 이른바 양극화지수로 표현되는 소득분배의 극화(polarization)현상을 양극화의 내용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많이 발견된다(전병유 외 2005, 강혜정 2006, 민승규 외 2006, 윤진호 2005, 2006). 뒤에서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이러한 접근 역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경제·사회적 문제를 정확히 포착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양극화 개념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전제되지 않고 진행되는 논의는 매우 비생산적으로 전개될 위험이 있다. 연구자마다 서로 다른 현상을 양극화로 간주하고 논의를 전개한다면, 결국 서로 다른 현상에 대해 다른 근거를 갖고 갑론을박하기 쉬우며, 그 결과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을 찾기보다는 문제의 핵심은 다른 곳에 있다는 식의 주장을 반복하게 될 뿐이다.

주2) 양극화를 다루는 언론의 접근방식에 대해서는 강신욱(2006)을 참고할 것.

그렇다면 양극화란 도대체 어떤 현상을 지칭하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 한 가지 답을 내리기란 쉽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것이 본 연구의 문제의식이다. 사실 양극화의 근거로 제시되는 다양한 현상들이 현실에서 경험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어느 하나도 중요하지 않거나 부차적인 문제라고 치부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빈곤의 확대나 불평등의 심화, 부익부 빈익빈, 중산층의 붕괴, 빈부의 세습과 계층간 이동가능성의 저하 등의 문제를 생각해보자. 만일 이 모든 현상들이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면, 이중 하나만을 양극화라고 해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만을 마련하는 것은 다른 문제들을 간과하는 우를 범할뿐더러 그 한 가지 문제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게 만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극화를 선형적으로 정의하기 전에 양극화의 현상으로 이제까지 지적되어 온 다양한 문제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확인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이제까지 양극화 논의의 대상이 되었던 사회적 불평등^{주3)}의 다양한 양상들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실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실태에 대한 분석이 뒷받침되지 않는 주장은 공허할 뿐이며 설득력이 갖기 힘들다. 실태분석은 문제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 줄뿐만 아니라 원인 분석이나 대책 마련 등 향후 이어지는 분석의 출발점을 이룬다.

물론 양극화 실태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양극화 실태로 제시된 내용들이 각기 상이한 문제를 상이한 자료를 이용

주3) 양극화 논의, 특히 양극화 지수를 둘러싼 연구가 진행되면서 불평등의 심화를 지니게수의 상승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불평등이란 개념은 훨씬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 개념이며, 따라서 ' $1/n$ 쪽의 균등한 분배상태'를 준거로 하는 지니계수만으로는 불평등의 모든 내용이 정확히 대표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불평등이란 개념은 분배의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하여 상이한 시기를 대상으로 분석된 결과여서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돋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것이 현재의 시점에서 양극화의 다양한 계기들에 대해 종합적 실태분석이 필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특정한 현상만을 양극화로 규정하지 않고 불평등의 다양한 측면들에 대해 분석하는 이유는 앞서 언급했듯이 선형적 개념규정이 갖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각각의 사회적 현상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고, 따라서 대응 방안의 마련에서도 모든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논의에서 양극화의 측면으로 언급되어 왔던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 실태를 분석할 것이다. 즉, 우리 사회에서

- 빈곤의 규모와 심각성이 증가하였는가
- 불평등은 심화되었는가 또한 불평등의 양상은 변하였는가
- 중산층은 축소되었는가
- 극화(polarization)가 진행되었는가
- 계층간 이동가능성(mobility)은 축소되었는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확인 작업은 당연히 대안 마련을 요구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정책대안 제시보다는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우선하도록 한다. 구체적인 정책대안의 제시는 문제의 원인에 대한 깊이 있는 진단이 있어야 가능한 것인데, 본 연구는 원인에 대한 분석보다는 실태에 대한 이해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극화가 일시적인 경기침체에 의해 비롯된 현상이라 기보다는 세계경제의 차원에서 진행되는 구조적 변화의 산물이라는 지적이 다수임을 감안한다면, 정확한 원인과 그 원인의 발현구조를 파악하는 데에도 많은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태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론을 근거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데 국한할 것이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구성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부분은 양극화와 관련된 기존 연구의 검토를 통해 양극화가 어떤 현상들을 지칭하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기존의 연구에서 양극화는 매우 다양한 현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다양한 현상을 하나의 개념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개념의 혼란이 초래되고 양극화 해소에 부여하는 규범적 가치 사이에 상충되는 지점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지적함으로써, 양극화 개념에 대한 선형적 규정을 유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전개할 것이다. 이것이 2장의 내용이다. 여기서는 또한 최근 여러 연구에서 자주 인용되는 양극화지수가 갖는 의미와 한계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두 번째는 본 연구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는 부분으로, 3장에서 6장까지 분석이다. 여기서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경상소득과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등 3개의 변수를 중심으로 분석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빈곤의 변화, 불평등의 변화, 극화의 진행, 계층간 이동양상의 변화 등에 대한 실증분석이 각 장의 내용을 이룬다.

세 번째는 복지 및 보건과 관련된 세부 분야별 불평등 양상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부분으로써 7장의 내용이 이에 해당된다. 구체적으로 건강·영양, 주거, 의료보장 등 세 분야의 불평등 실태를 분석하게 될 것이다. 자료의 한계 상 이 장의 분석방법과 데이터가 3~6장까지의 분석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주로 소득과 소비를 중심으로 분석되던 양극화 경향을 다른 분야까지 확장한다는 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상의 분석에서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주요 정책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마지막 8장의 내용이다.

2. 분석자료 및 방법

실태분석에 있어서 자료의 성격은 매우 중요하다. 자료가 전 인구 구성의 특징을 대표하는지가 분석 결과의 유미함을 크게 결정하기 때문이다. 특히 빈곤이나 불평등과 관련된 실태분석의 경우에는 1인가구와 농어촌가구의 포함여부가 중요하다. 빈곤층이나 차상위층 등 취약계층의 구성에서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주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인가구와 농어촌 가구가 포함된 자료를 이용할 것이다. 이 두 집단을 포함한 통계청 자료로는 과거에는 통계청 자료의 경우 1996년과 2000만 존재했으나, 2006년부터는 가계조사에도 1인가구와 농어촌 가구가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96년과 '00년의 가구 소비실태조사자료와 '06년 상반기 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할 것이다. '06년 자료의 경우, 상반기까지만 제공되고 있다는 한계가 있으나, 최근의 경향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상반기 자료라는 점을 밝히고 이용하기로 한다.

한편 '00년과 '06년 사이의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두 시점 사이의 기간에 대한 분석을 누락한다는 것을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03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기로 한다. '00년과 '06년 사이의 기간에는 소득이나 소비와 관련하여 중요한 변화들이 관측되고 있음을 여러 연구들이 지적하고 있다. 신용카드 남발과 부동산 규제 완화 등 인위적 경기부양의 효과로 인해 경제위기 때 악화되었던 각종 지표가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던 시기가 '00년~'02년이라면, 이 효과가 사라지면서 다시 각종 지표가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 '03년이다. 각기 다른 두 기관에서 생산한 자료를 이용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이나, 이러한 시기적 특성을 감안하여 '03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단, 이 자료의 경우 농어가가구에 대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주4) 예를 들어 정부가 발표한 최저생계비를 빈곤선으로 한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의 경우 1인 가구와 농어촌 가구를 포함한 빈곤율은 9.2%('00)로 추정되나, 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할 경우 7.1%('00)로 추정된다(여유진 외, 2005).

바, 다른 연도 자료들과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 농어가 가구를 제외하고 분석하였다.^{주5)} 요컨대, 3장에서 5장의 분석에서는 '96년 및 '00년 통계청 가구소비 실태조사자료, '03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생활실태조사자료, '06년 상반기 통계청 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하였다.

한편 6장의 계층간 이동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가구ID가 제공되는 자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6장의 분석은 5장까지의 분석과 상이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계층간 이동성에 대한 분석은 '03년부터 '06년 상반기까지 가구ID가 제공된 통계청 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하였다. 단, 앞서 언급하였듯이 '06년부터 1인가구 조사자료가 제공되기 시작하였으므로, 이전 연도 자료와의 연결을 위해 '06년 상반기 자료에서는 1인가구를 제외하였다.

7장의 분석은 분야별로 상이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예컨대 소득계층별 건강·영양의 분포상태를 분석한 7장 1절의 경우, '98년과 '01년 '05년에 각각 실시된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의료비 부담의 불평등에 대한 실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진료실적 자료 2001년과 2005년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세부분야별 분석에서 이용된 자료의 특성에 대해서는 7장의 해당 절에서 자세히 소개하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 경상소득과 소비지출 범주는 통계청의 구분에 따른 변수를 그대로 이용하였고, 가처분소득은 경상소득에서 사회보장부담금(공적연금, 사회보험)과 직접세(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등)를 제한 값으로 정의하였다. 가구별 소득의 비교하는 데 있어서 가구원수의 차이가 미치는 효과를 상쇄하여 주기 위하여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하였다. 그 적용방식은 가구소득(혹은 소비)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누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주5) 여유진(2005) 등의 연구도 '06년 상반기 자료를 제외하고는 본 연구와 동일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몇몇 변수의 경우 본 연구는 여유진 등의 분석 결과와 시기적으로 중복된다. 그러나 자료를 처리하는 세부적 방법의 차이로 인해 같은 시기라고 하더라도 두 연구의 분석결과가 다소 상이할 수 있다.

제2장 사회양극화의 의미

제1절 양극화 이해를 둘러싼 쟁점과 사회양극화의 의미

국내에서 양극화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 전개의 계기가 된 이내황 등(2004)의 연구는 경제양극화를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 산업간 양극화, 기업간 양극화, 고용 및 소득의 양극화 등의 현상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다. '03년 중 수출의 성장세에 비해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는 연속적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양상은 규모의 변화에서뿐만 아니라 GDP 및 최종수요에 대한 기여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산업구조의 측면에서는 중화학공업과 경공업, IT산업과 비IT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도 양극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기업간 양극화를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수익성, 재무구조, 성장성, 자금조달여건, 투자 등의 변수에서 격차가 확대되었다. 또한 우량기업과 비우량기업,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사이의 격차도 확대되었다. 고용 및 소득 양극화의 예로는 비상용근로자의 비중, 중소기업 고용비중, 신규일자리 중 상·하위 일자리의 비중의 상승, 비정규직 비중의 증가, 지니계수 및 5분위 배율의 상승 등이 제시되었다(이내황 외, 2004).

이러한 논지는 정부의 보고서에서도 그대로 수용된다(민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2005). 양극화라는 용어를 사용했던 기존의 연구들이(이우현 1998; 최희갑 2002; 이병훈·김유선 2003) 개별 부문에서 나타는 현상을 주로 다루었던 것과는 달리 이들 2004년 이후의 문헌에서는 양극화의 범위를 산업, 기업, 고용, 소득분배 등의 다양한 영역에 확대하여 적용했다는 특징이 있다. 즉, 양극화는 특정 영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한국경제 전반을 관통하는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경제의 구조에 대한 종합적 진단으로서의 양극화는 경제구조개혁이라는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기에는 효과적이었지만, 이후 구체적인 논의의 전개 과정에서 등장할 많은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었다. 주요 쟁점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양극화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다.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2005)에 따르면 양극화란 “성장부문과 지체부문간에 (성장의) 격차가 벌어지거나 고착화하는 것을 의미”한다.^{주6)} 반면 윤진호(2005)는 양극화의 사전적 의미를 “중간부분이 해체되면서 양 극단으로 모이는 현상”으로 해석한다.^{주7)} 전자의 정의에 따르자면 양극화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비교 집단을 구분이 사전적(事前的)으로 결정되지만 후자의 정의에 따를 경우 중간부분은 전체의 분포 가운데에서 사후적(事後的)으로 결정된다. 지니계수의 상승을 양극화의 근거로 제시하는 문헌들도 많은데, 이 경우에는 집단의 구분이 의미가 없다. 요컨대, 어떤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하고 어떤 지표를 이용하여 양 집단간 격차가 확대됨을 보일지에 대해 견해가 일치되지 않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둘째, 양극화란 새로운 현상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산업간 불균형이나 소득불평등의 심화는 이제까지 계속 존재해왔고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온 문제이다.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발전하는 산업과 침체되는 산업이 있기 마련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도 한국경제의 성장과정에서 누차 지적되어 온 문제이다. 소득불평등과 빈곤도 새로운 문제가 아니며 그 심각성에는 차이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전부터 존재해 왔던 현상이다. 이런 이유로 최광 등(2006)은 정부가 양극화란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계층간 갈등을 유발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불평등과 빈곤은 물론 과거에도 존재하였던 현상이고, 경기순환 과정에서 악

주6)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2005) p.10.

주7) 윤진호(2005), p.111.

화와 개선을 반복하여 왔다. 그렇다고 현재의 빈곤과 불평등이 이전과 완전히 동일한 현상이라고 보기 힘든 측면이 있다. 문제는 최근에 이러한 양상들이 이전시기와 다른 형태를 띠고 있는가가 될 것이다.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양극화의 원인에 대한 견해차와 연결된다. 다수의 문헌들은 최근의 양극화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화들을 지적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대규모 집단이 형성되었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및 근로조건 격차가 확대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아진 1990년대 말 이후에 본격화되었다. 또한 대기업-중소기업, 수출기업-내수기업, IT기반 산업과 전통적 산업간 연관관계가 약화되고 있는 점 등은 이전과 다른 양상이다. 이러한 변화를 초래한 원인으로 무역과 자본이동의 자유화, IT 위주의 기술진보, 노동시장유연화 등 전 세계적 차원의 변화가 지적된다.^{주8)} 양극화를 표현하는 지표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지표의 변화를 초래한 원인이 종전과 다르다는 것이다.^{주9)}

셋째, 양극화의 현상과 원인에 대해 이견이 없더라도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시장경제에서는 경쟁의 결과 승리하는 자와 패배하는 자가 나타나는 것이고, 오히려 경쟁에 대한 철저한 보상이 시장의 규율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인다는 견해가 존재한다. 이런 견해에 입각할 경우 양극화 이슈는 시장에서 발생하는 정당한 격차까지도 문제삼자는 발상으로 치부된다.

이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이 어떤 규범적 가치를 지향하는가에 대한 질

주8) 김홍종 등(2005)은 양극화 문제가 해외 선진국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나 한국에서는 특히 그 속도가 매우 빠르고, 선진국에서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양극화의 여러 측면들이 압축적으로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김홍종 외(2005), p.16.

주9) 양극화의 원인이 구조적 변화 혹은 과거의 성장방식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경기침체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최광 외 2006). 그 근거로 과거 고도성장시기에 각종 불평등 지표들이 양호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구조적 원인론에 대한 적절한 비판이라고 볼 수 없다. 구조적 요인의 효과가 반드시 동시대에 나타나는 것만은 아니며, 전에 없었던 새로운 외적 충격에 의해서도 기존 구조의 대응능력이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문으로 환원될 수 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정책의 영역별로 각기 다른 설명이 필요하다. 먼저 기업간 격차나 산업부문간 격차가 불공정한 경쟁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정부의 개입을 규범적으로 정당화시키기 힘들다. 그러나 부문간의 불균형 성장이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보면 정부의 개입은 효율성의 차원에서 근거를 갖게 된다. 한편 정당한 경쟁의 결과로 발생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빈곤이나 극심한 불평등은 사회통합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효율성과 성장을 중시하는 정책 영역에서의 불균등발전과 사회통합이 중시되는 영역에서의 양극화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접근과 이해가 필요하다.

엄밀한 구분은 아니지만, 기존의 연구에서는 경제정책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격차를 경제적 양극화로, 사회정책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격차를 사회적 양극화로 지칭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즉, 사회적 양극화를 고용정책이나 복지정책, 인적자원 개발 정책의 영역에서 주된 관심 대상인 소득, 소비, 임금, 고용 등의 변수에서 발견되는 경향에 한정된 용어로 이해하기로 한다.

제2절 양극화 지수의 이해

1. 사회양극화를 설명하는 다양한 지표들에 대한 이해

제1절에서 언급하였듯이 양극화를 보여주는 근거로 다양한 지표들이 사용된다. 그런데 이를 지표는 서로 다른 현상을 보여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각기 다른 규범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엄밀한 해석을 요한다.

한 사회의 불평등을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로 지니계수(Gini coefficient)가 사용된다. 지니계수는 한 사회의 모든 가구 또는 개인(이하에서는 가구로 통칭)의 소득 분배가 균등한 분배로부터 얼마나 괴리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소득분포

를 표현하는 모든 지표들은 소득수준과 소득수준별 빈도라는 2차원적 현상을 1차원적으로, 즉, 하나의 수자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정보의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지니계수의 경우 그 값이 0에 가까울수록 균등한 분배상태에 근접한 것이고 1에 가까울수록 극단적으로 불평등한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나 같은 지니계수를 보인다고 할지라도 저소득층의 점유율이 높을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지니계수가 소득분포의 모든 특징을 다 보여주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특히 양극화라는 용어의 사전적 정의와 비교하여 본다면 두개의 집단 구분이라든가 극단 지점의 소득점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다른 한편으로 지니계수는 모든 가구들의 소득이 전 가구 소득의 총합을 $1/n$ 씩 균점하고 있는 상태를 즐거워 한다. 그런데, 이 즐거상태가 과연 바람직한 상태인가는 분배정의론의 관점에서 볼 때 많은 이론의 여지가 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여러 지표들이 동시에 사용된다. 대표적인 것이 빈곤율이다. 빈곤율은 전 가구 수에서 차지하는 빈곤가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그리고 빈곤가구의 정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해진 빈곤선에 의해 판단되는데, 가구소득이 빈곤선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빈곤가구로 분류된다. 그런데 빈곤율은 빈곤층의 양적 규모만을 보여줄 뿐 빈곤층이 겪는 실제의 어려움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빈곤율은 동일하더라도 대부분의 빈곤가구가 빈곤선 바로 아래의 소득수준을 유지하는 사회가 있을 수 있고, 반대의 극단적인 경우로 대부분의 빈곤가구가 0에 가까운 소득을 갖는 사회가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 빈곤격차비율(poverty gap ratio) 또는 소득격차비율(income gap ratio)이란 지표가 사용된다. 개별 빈곤가구의 빈곤격차(빈곤선 - 빈곤가구의 소득)의 합을 전 인구수(빈곤격차비율의 경우) 또는 빈곤 가구수(소득격차비율의 경우)로 나눈 값을 의미하는 이 지표들은, 빈곤의 심각성(depth)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실제 빈곤가구 소득을 빈곤선까지(혹은 그 위로)끌어올리기 위해 한 사회가 부담해야 할 금액의 크기를 나타낸다.

그런데 빈곤율이나 빈곤격차비율 역시 전체 소득분포 상에서 최하위층에 속

하는 집단의 상태를 보여줄 뿐, 다른 집단의 상태를 보여주지는 못한다. 즉, ‘양’극화를 보여주기에는 절반의 정보만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이 지표들을 계측하는 규범적 함의는 국민들의 최저 생활수준을 사회가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이정도의 규범적 함의는 복지제도가 구축된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그다지 적극적인 의미를 갖지 못한다.

소득분포 상의 ‘양’ 극단의 상황을 동시에 보여주는 지표가 10분위배율이나 5분위배율 등 분위별 소득점유율을 이용한 지표이다. 분위별 소득점유율은 전체 가구를 소득기준으로 순위를 매긴 뒤 전체를 동일한 수의 가구가 포함되는 10개의 구간으로 나누었을 때 각 구간이 전체 소득합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양극화를 중간층에서 양 극단으로 이동하는 현상으로 이해할 경우, 분위별 점유율과 10분위 배율은 중간층의 이동이 일어나기 전후의 양 극단의 상태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해준다.^{주10)}

경제위기 이후 소득 5분위 배율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현상이 양극화 심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는 데 대해 안종범·석상훈(2006)은 이 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상위분위의 점유율확대보다는 하위 분위의 점유율 축소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현상을 양극화로 볼 것이 아니라 빈곤화^{주11)}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본 연구는 이것을 10분위 분배율이 현상의 변화를 보여주는 데 갖는 한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10분위나 5분위 분배율은 중간층의 규모변화와 논리적으로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중산층의 규모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10분위 분배율은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로 중간층이 얇아지면서 양극단이 두터운 소득분포로 변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주10) 이런 이유로 인해, 양극화를 분석하는 기존의 연구에서 가장 빈번하게 이용된 지표가 소득분위배율이다. 몇 개의 예를 들자면 민승규 외(2006), 신팽영(2006), 윤진호(2005, 2006), 임병인(2005), 은기수(2005), 정성진(2006) 등이 있다.

주11) 일반적으로 상대빈곤율을 계측할 때 빈곤선이 중위소득의 50%인 점을 감안한다면 소득 1분위의 점유율 축소는 빈곤화라기보다 빈곤의 심화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점유율의 크기와 무관하게 이미 1분위는 상대적 지위 상 빈곤층이기 때문이다.

분위별 분배율의 전체 구조를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한편, 규범적인 해석의 측면에서 본다면 안종범·석상훈(2006)해석은 적절하지 못하다. 10분위 분배율이 갖는 규범적 함의는 양 극단에 놓여있는 집단의 생활조건이 차이가 적을수록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10분위 분배율이 최하위 1분위의 소득악화에 의해 발생한 것이든 최상위 10분위의 개선에 의해 나타난 것이든 계층간 이질성이 확대되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사회적 안정성을 위해 사회구성원간 생활조건이 지나치게 이질적인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10분위 분배율의 확대는 그 자체로서 사회적 갈등의 가능성은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양극화 지수의 이해

양극화의 의미를 둘러싸고 다소 혼란스럽게 전개되던 논의는 전병유 등(2005)이 울프슨(Wolfson 1994)과 에스테반과 레이(Esteban and Ray 1994)의 양극화지수(polarization index)^{주12)}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소득 분포의 양극화 추이를 분석하면서^{주13)} 구체적인 논의로 전환되었다. 무엇보다도 이 연구는 분명히 정의된 양극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후 많은 연구들이 이 지수들이 지시하는 양극화 개념을 사용하게 된 데에는^{주14)} 이런 이유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양극화의 사전적 의미가 중간층이 얇아지고 양 극단이 두터워지는 현상을 의미한다면, 울프슨(Wolfson 1994)의 양극화지수는 중간층이 얕

주12) 전병유 등(2005)의 지적대로 이 용어는 극화지수로 번역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 글에서도 편의상 양극화지수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그러나 극화의 다양한 측면이 분석되는 5장에서는 양극화라는 표현 대신 극화라는 표현을 사용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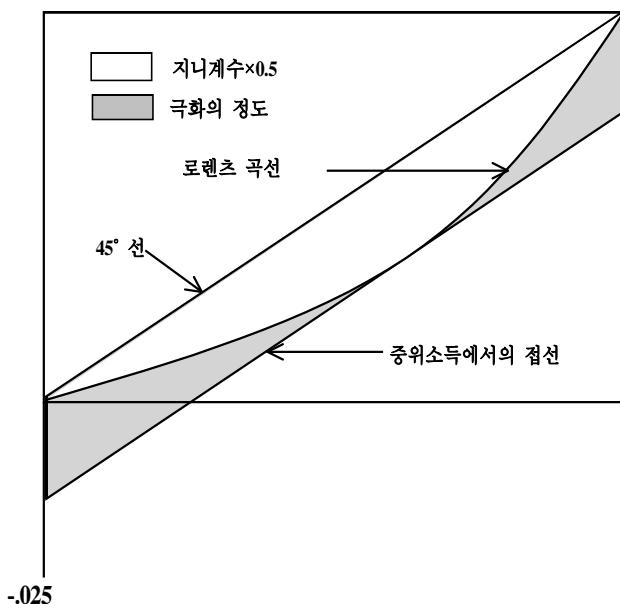
주13) 전병유 등(2005)의 연구에 소개된 울프슨(Wolfson)지수와 에스테반-레이(Esteban and Ray)지수는 최희갑(2002)의 연구에서 이미 소개 및 계측된 바 있다.

주14) 예를 들어 민승규 외(2006), 강혜정(2006)은 각기 다른 자료를 이용하여 양극화지수를 계측하였고, 남찬섭(2006), 최광 외(2006), 안종범·석상훈(2006)들은 기존 연구의 양극화지수 계측결과를 인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아지는 현상에 주목한 지수이고, 전체분포를 양분했을 때 (극단은 아닐지라도) 양측의 분포가 두터운 모양으로 형성되는 정도를 표현하는 것이 에스테반과 레이의 양극화지수이다.

울프슨은 중산층을 중위소득을 가진 인구계층으로 규정하고, 중위소득으로부터의 분산정도가 커질수록, 즉,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여타 계층의 과리도가 커질수록 양극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그는 불평등을 나타내는 전통적 방법인 로렌츠곡선으로부터 양극화 지수를 도출하였는데, 이 지수의 정의는 다음과 (식 2-1) 및 (식 2-2)와 같다(Wofson 1994).

[그림 2-1] 울프슨의 양극화지수



$$P_w^* = [0.5 - L(0.5) - 0.5G] \frac{\mu}{m} \quad \text{---(식2-1)}$$

$$P_w = 4P_w^* = [2 - 4L(0.5) - 2G] \frac{\mu}{m} \quad \text{식 2-2}$$

μ : 평균, m : 중위소득, G : 지니계수,
 $L(0.5)$: 중위소득에서 로렌츠곡선의 높이

울프슨의 양극화지수는 소득분포상 중산층(중위소득 주변 계층)이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보여준다. 위 (식 2-2)에서 P_w 는 지니계수와 같은 범위를 갖게 하기 위하여 (식 2-1)의 P_w^* 에 4를 곱한 값이다. 이 P_w 의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중산의 감소정도가 크고 0에 가까울수록 중산층이 두터운 상태임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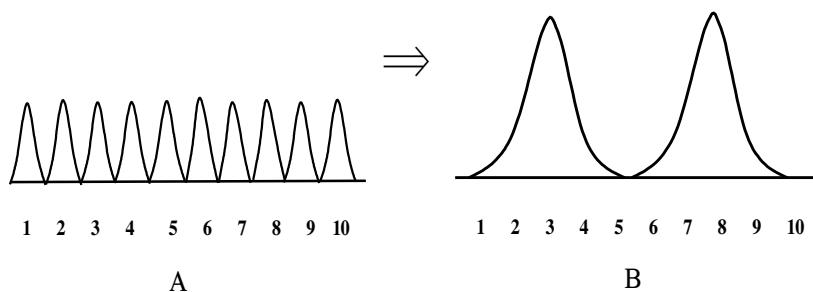
만일 한 사회가 울프슨지수가 0에 가까운 사회를 선호한다면, 그것은 이 사회가 중산층이 두터운 상태를 선호함을 의미한다.

한편 에스테반과 레이(Esteban and Ray 1994)는 양극화를 ‘사회집단이 일정한 특성(소득, 자산 등)에 의해 몇 개의 집단으로 군집화(cluster)되어, 한 집단 내부의 동질성은 강화되는(격차는 줄어드는) 한편 집단 간의 이질성도 강화되는(격차가 확대되는) 현상’으로 정의한다. 이들은 양극화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아래에서 소개되는 양극화 지수를 제시하였는데, 이 지수에 따르면 양극화는 궁극적으로 그 사회의 내적 갈등의 수준을 나타내며, 그 지수 값이 높은 사회 내에서는 집단간 충돌의 가능성성이 크고 그 값이 낮을 때에는 그 가능성은 낮아진다. 즉, 집단간 갈등의 가능성은 (집단 내의 동질성이 강할수록, 집단 간의 이질성이 강할수록, 그리고 상당한 규모를 갖춘 집단의 수가 적을수록 커진다. 이러한 양극화 지수는 불평등 지수와 비교하여 사회 갈등 내지 사회 불안정성을 직접적으로 나타낸다.

이러한 정의에 따를 경우 양극화는 빈곤, 불평등과 무관한 현상이 된다. 아래의 [그림 2-2]는 양극화의 진행과 불평등 진행 사이에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를 보여준다. 소득분포 상태가 A에서 B로 바뀜에 따라 불평등은 감소하였으나(하위소득층과 상위 소득층이 중간으로 이동하였으므로) 두개의 이질적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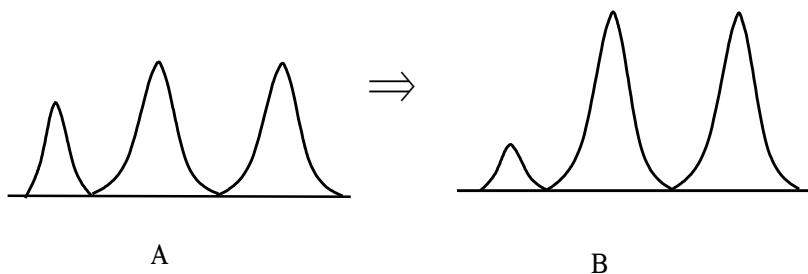
단으로 균집화 되는 양극화가 나타난다.

[그림 2-2] 불평등은 감소하나 양극화는 심화되는 경우



[그림 2-3]은 저소득계층의 상향이동으로 중간층과 고소득층이 모두 증가한 상황을 보여준다. A의 상태에 비해 B의 경우는 빈곤층의 규모가 훨씬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양극화는 오히려 심화되었다. 이런 점에서 양극화는 빈곤율 감소와도 구분되는 현상이다.

[그림 2-3] 빈곤은 감소하나 양극화는 심화되는 경우



Esteban & Ray(1994)의 양극화지수(이하 ER지수)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된다.

$$ER(\alpha, \rho) = \sum_i \sum_j \pi_i^{1+\alpha} \pi_j |\mu_i - \mu_j| \quad \text{----- (식 2-3)}$$

$$\rho = (y_0, y_1, \dots, y_n; \pi_1, \dots, \pi_n; \mu_1, \dots, \mu_n)$$

$$a = y_0 < \dots < y_n = b$$

$$\pi_i = Prob(y_{i-1} < y < y_i) = \int_{y_{i-1}}^{y_i} f(y) dy : \text{특정 소득구간 } i \text{에 속하는}$$

인구 비중

$$\mu_i = E(y | y_{i-1} < y < y_i) = \frac{1}{\pi_i} \int_{y_{i-1}}^{y_i} y f(y) dy : \text{구간 평균}$$

(식 2-3)에서 α 는 양극화 지수의 민감도를 나타내는 패러미터으로, 양극화 지수를 불평등 지수와 차별화 시켜준다. 즉, α 의 값이 크다는 것은 소득분포의 균집화 현상에 대해 사회적으로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한다.^{주15)} 일반적으로 $0 \leq \alpha \leq 1.6$ 이며, $\alpha=0$ 일 경우 ER은 지니계수와 같아짐을 알 수 있다.

전체 소득분포를 평균을 기준으로 2개의 집단으로 구분할 경우 ER지수는 식 (4)와 같은 비교적 단순한 형태로 표현된다.

$$ER = [\pi^\alpha + (1-\pi)^\alpha][\pi - L(\pi)] \quad \text{----- (식 2-4)}$$

π : 평균 이하의 소득을 가진 사람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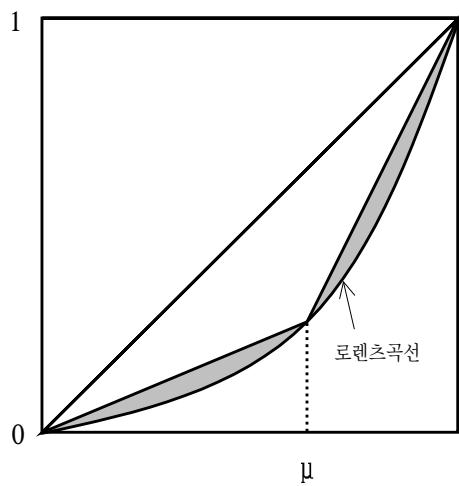
$L(\pi)$: π 에서 로렌쓰곡선의 높이

α : $0 \leq \alpha \leq 1.6$ 의 값을 갖는 parameter.

주15) 이런 점에서 ER지수는 엣킨슨지수와 마찬가지로 사회후생함수적인 성격을 갖는다. 즉, 동일한 현상에 대해 사회가 얼마나 심각 평가하는지를 패러미터의 값을 통해 나타낸다.

한편 Esteban, Gradian & Ray(1999)는 이 양극화지수가 양집단의 극화를 과대평가하는 오차를 최소화하는 개선된 양극화 지수를 제시하였다. 이 오차는 전체 소득의 불평등을 몇 개의 집단 사이의 불평등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써, 아래의 [그림 2-4]에서 빛금 친 부분이 이 오차를 나타낸다. 즉, 전체 소득구간을 몇 개의 집단으로 묶는 과정에서 집단 내부의 이질성(불평등)이 과소평가되며, 그에 따라 상대적으로 집단간의 이질성(불평등)은 과대 평가되므로, 결과적으로 양극화지수 자체가 실제의 양극화 경향을 과대평가하게 되는 것이다.

[그림 2-4] 집단화를 통해 불평등을 파악하는 데 따른 오차



이를 보정한 개선된 ER지수(extended ER)를 EGR이라고 하면, EGR은 식 (5)와 같이 표현된다.

$$EGR(f, \alpha, \beta) = ER(\alpha, \rho) - \beta(G(f) - G(\rho^*)) \quad \text{식 2-5}$$

이때 ρ^* 는 전체 가구를 몇 개의 집단으로 묶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집단내 불평등의 과소평가경향)를 최소화하는 소득구간 구분방법을 말하며, $G(\rho^*)$ 는 그러한 소득구간 구분에 따른 지니계수이다. β 는 이 오차에 대해 부여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parameter이다.

ρ^* 에서 소득구간의 구분값(y_i)은 집단화(grouping)에 따른 오차의 크기, 즉, [그림 2-4]에서 색칠된 부분의 면적을 최소화시키는 값으로써, Aghevli and Mehran(1981), Davies and Shorrocks(1989)에 따라 다음과 (식 2-6)과 같이 구해진다.

$$y_i = \frac{\pi_i \mu_i + \pi_{i+1} \mu_{i+1}}{\pi_i + \pi_{i+1}} \quad \text{----- (식 2-6)}$$

π_i : i 번째 소득구간에 포함되는 가구의 비율

μ_i : i 번째 소득구간의 평균

즉, 소득구간을 구분하는 점은 인접 소득구간 평균의 가중평균이다. 전체 소득구간을 두 구간으로 구분하는 경우, 최적의 구분점은 전체 소득의 평균값이 되며, 이 경우 EGR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EGR = [\pi^\alpha + (1 - \pi)^\alpha][\pi - L(\pi)] - \beta[G - (\pi - L(\pi))] \quad \text{----- (식 2-7)}$$

ER지수나 EGR지수에서 양극화를 규정하는 각 요인들은 극(pole)의 형성(polarization)(집단 내 동질성 강화), 극 간의 거리 확대(집단간 이질성 심화), 각 극점(혹은 구간)에 충분한 수의 인구 분포로 요약된다. 이렇게 파악된 양극화 지수는 계층간 갈등가능성의 크기를 시사한다는 점에서 규범적인 함의를 지닌다.

제3절 분배구조 변화의 파악을 위한 다양한 접근의 필요성

1. 양극화지수를 통한 양극화 이해의 한계

실제로 소득분포의 양상이 앞의 [그림 2-2]나 [그림 2-3]처럼 극단적 양상을 띠는 경우는 거의 없다. ER지수가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서로 분리된 두개의 봉우리 모양의 분포를 떠기보다는 오히려 단일한 봉우리의 분포에서 봉우리의 높이가 낮아지고 봉우리 좌우측의 분포가 두터워지는 양상으로 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앞서 지적하였듯이 이러한 변화가 빈곤율의 변화나 지니계수의 악화, 분위별 분배율의 악화와 병행하여 진행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울프슨이나 에스테반-레이의 양극화 개념은, 그 개념정의의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분포상의 변화를 정확하게 대표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다시 말해, 양극화지수를 중심으로 양극화를 이해하는 것은 논의의 초점을 분명하게 하는 장점이 있으나, 현실에 대한 문제 인식의 폭을 협소하게 만드는 효과도 수반하는 셈이다.

ER지수를 해석하는데 따르는 또 다른 문제점은 집단간 구분의 기준이다. 해당초 ER지수가 인종 간 갈등처럼 뚜렷하게 구분된 특징을 갖는 두 집단 사이의 이질성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것임을 감안한다면 성, 지역, 고용상의 지위(정규직과 비정규직)처럼 외생적 기준에 의해 집단을 구분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 그러나 소득분포 상 평균을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약할 수 있다. 전체 가구의 연평균 소득보다 소득이 1만원 적은 가구와 1만원 많은 가구를 상이한 집단에 위치시키고 이 집단의 이질성을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직관적인 호소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연속적인 값을 갖는 소득분포에서 집단을 몇 개로 구분할 것인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극단적인 경우는 집단을 2, 3, 4개로 나누더라도 모든 경우에 극화가 진행되는 현상이 논리적으로 가능하다. 그렇다면 집단을 2개로 구분하는 것은 자의적 선택일 수밖에 없으며, 양극화지수가 보이는 양극화란 실제의 변화를 해석하는 데 오류의 가능성은 남겨주게 된다.

양극화지수가 빈곤과 불평등 관련 다른 지수들이 보여주지 못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양극화지수 역시 계층간 이동성을 보여주지는 못한다. 만일 한 사회의 소득분포가 [그림 2-2]와 같은 형태를 띤다고 하더라도 양 집단에 속하는 가구의 구성이 수시로 바뀐다면, 즉, 하위 집단에 속하던 가구가 쉽게 상위 집단으로 이동할 수 있다면 문제의 심각성은 덜할 수 있다. 양극화지수의 변화추이를 시계열적으로 보더라도 계층간 이동가능성은 파악할 수 없다. 결국 이동가능성의 변화는 별도의 지수로 측정되어야 하며,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동일 가구의 소득변화를 파악할 추적할 수 있는 패널 자료가 필요하다.

2. 불평등구조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의 필요성

이상의 논의를 종합할 때, 현재 우리가 우리사회의 소득분배구조가 변화하는 양상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표의 변화를 동시에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양극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선형적으로 정의하는 일은 현실에서 진행되는 변화 가운데 일부만을 포착하고 그와 연관된 다른 현상들을 도외시할 위험에 빠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양극화를 먼저 정의하고 그것을 보여주는 지표를 선택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다양한 지표들의 변화를 통해 소득분포의 변화양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려 시도할 것이다. 그렇기 위해 앞에서 언급한 다양한 지표들의 변화추이를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아래의 <표 2-1>은 양극화 관련지표로 기존의 연구들에서 언급된 바 있는 지표들과 본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분석될 지표들을 보여준다. 또한 이들 각 지표들이 소득분배구조의 어떤 측면을 나타내는지를 보여준다. 이하에서는 경상소득과 가처분소득, 소비의 세 변수를 중심으로 각 지표의 변화 추이를 분석할 것이다.

〈표 2-1〉 분배구조 변화 관련 분석내용 및 관련 지표

관련 현상	양극화 관련 기존 국내 연구에서 분석된 내용	본 연구에서 분석될 내용
빈곤의 규모	빈곤율	빈곤율
빈곤의 심각성	-	빈곤격차비율
불평(균)등의 심화	지니계수	지니계수
양극단으로의 쏠림	분위별 점유율	분위별 점유율 상·하위분위내 지니계수
양극단간 격차	10(5)분위배율	분위수배율 10(5)분위배율
중간층의 위축	울프슨지수	울프슨지수 중간층의 규모변화
극화의 진행	ER(EGR)지수(n=2)	ER(EGR)지수(n=3,4)
계층간 이동가능성의 축소	-	계층간 이동확률, 빈곤경험확률 및 결정요인
집단내 불평등과 집단간 불평등	-	엔트로피 분해
기타	-	빈곤층의 구성 중간층의 규모변화 주거, 건강 및 영양, 의료비의 불평등양상

제3장 빈곤의 변화

제1절 빈곤 규모와 심도의 변화

1. 절대빈곤

빈곤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빈곤을 정의하는 일이 필요하다. 빈곤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본 연구의 목적이 아니므로¹⁶⁾ 여기서는 빈곤선의 설정에 대해 잠시 언급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빈곤선을 크게 절대빈곤선과 상대빈곤선으로 구분한다. 절대빈곤선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다. 단, 정부의 공식적인 최저생계비발표는 2000년부터 있었으므로, 1996년의 최저생계비는 추정에 의해 구하는 수밖에 없다. 여기서는 여유진 외(2005)의 방법에 따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994년과 1999년에 계측한 최저생계비를 기하평균한 값을 적용하여 1996년의 최저생계비를 추정하였다. 이 빈곤선은 경상소득, 가처분소득과 소비지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었다. 따라서 절대빈곤율의 경우 경상소득보다는 가처분소득의, 소득보다는 소비지출의 절대빈곤율이 크게 나타난다.

아래의 <표 3-1>에서 보듯이 2000년과 2003년 사이의 최저생계비 증가율에 비해 2003년과 2006년의 최저생계비 증가폭이 크다. 이는 2004년의 계측결과를 반영한 2005년에 최저생계비의 증가폭이 커기 때문으로, 이후 분석하게 될 절대빈곤율 수준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론된다.

주16)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미곤 외(2005) 또는 여유진 외(2005)를 참조할 것.

〈표 3-1〉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단위: 원)

	1	2	3	4	5	6
1994	205,914	355,188	544,439	665,107	763,817	841,450
1996	243,950	414,004	607,680	751,093	859,125	955,579
2000	324,011	536,614	738,076	928,398	1,055,588	1,191,134
2003	355,774	589,219	810,431	1,019,411	1,159,070	1,307,904
2006상	418,309	700,849	939,849	1,170,422	1,353,242	1,542,382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업안내』 각 연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저생계비계측조사연구』 1994,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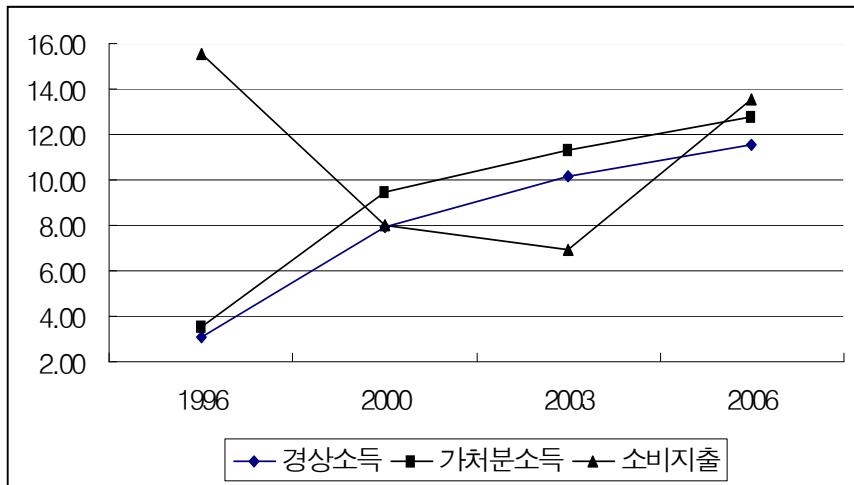
아래의 <표 3-2>에서 보듯이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경상소득과 가처분소득의 절대빈곤인구의 비율은 '96년과 '06년상반기 사이에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경상소득 빈곤율은 3.09%에서 11.54%로, 가처분소득 빈곤율은 3.51%에서 12.76%로 거의 비슷한 폭으로 상승하였다. 은 경제위기를 경험한 '96-'00년에 비해 이후 기간의 증가속도는 둔화되었지만, 이후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소비지출의 경우 '03년까지는 빈곤율이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다가, 이후 다시 상승하고 있다.

〈표 3-2〉 절대적 빈곤율 변화추이

구분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1996	3.09	3.51	15.50
2000	7.94	9.44	7.99
2003	10.13	11.34	6.92
2006상	11.54	12.76	13.55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1996, 2000) 및 가계조사(2006상반기)자료.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국민생활실태조사(2003)자료

[그림 3-1] 절대빈곤율 변화추이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1996, 2000) 및 가계조사(2006상반기)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생활실태조사(2003)자료

빈곤율이 빈곤층의 규모를 나타낸다면 빈곤격차비율은 빈곤의 심도(depth), 즉, 빈곤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빈곤격차비율(poverty gap ratio)은 다음과 같은 (식 3-1)에 의해 표현된다.

$$PGR = \frac{\sum_{i=1}^q (\pi - y_i)}{n \pi} \quad \text{(식 3-1)}$$

여기서 PGR은 빈곤격차비율, π 는 빈곤선, n 은 전체표본수, y_i 는 빈곤가구의 소득(또는 지출)을 의미한다. 빈곤선에 미달하는 개별 빈곤가구의 소득격차($\pi - y_i$)를 빈곤선으로 표준화시킨 뒤 그 총합을 구하면 빈곤층의 소득을 빈곤선까지 높이는 데 필요한 총액이 된다. 빈곤격차비율은 모든 비빈곤층이 빈곤선과 동일한 소득을 갖고 있다고 가정할 때, 빈곤층을 빈곤에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 모든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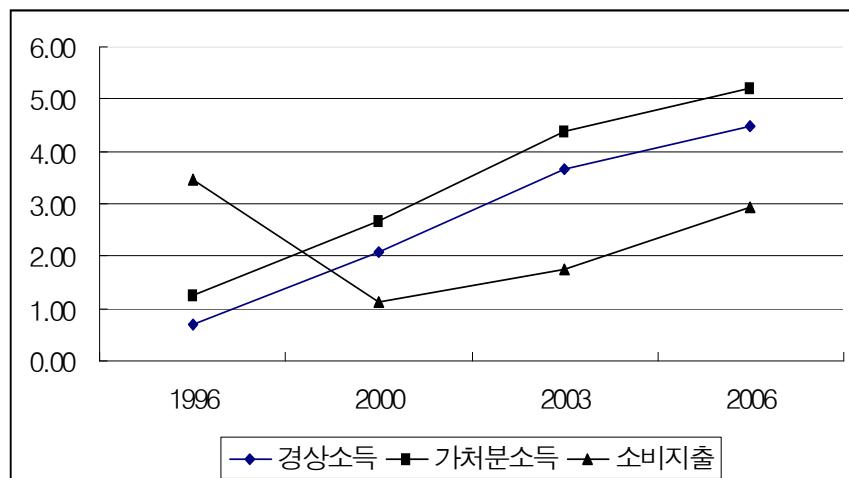
아래에서 보듯이 분석 대상이 되는 기간동안 빈곤격차비율도 함께 증가하였다. 즉, '96~'06상반기의 기간동안 절대적 빈곤선을 기준으로 한 빈곤의 규모와 심도가 모두 증가하였다. 특이한 점은 소비지출의 경우 빈곤율이 감소했던 '00~'03년 기간동안 빈곤격차비율은 반대로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는 이 기간동안 빈곤층 내부에서 소비지출의 불평등도가 증가했음을 시사한다.

〈표 3-3〉 절대적 빈곤격차비율 변화추이

구분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1996	0.70	1.25	3.45
2000	2.09	2.66	1.12
2003	3.64	4.37	1.75
2006상	4.47	5.20	2.93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1996, 2000) 및 가계조사(2006상반기)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생활실태조사(2003)자료

[그림 3-2] 절대적 빈곤격차비율 추이



2. 상대적 빈곤

절대빈곤율이 소득분포와 무관한 일정한 수준을 빈곤선으로 한다면, 상대빈곤율은 소득분포상의 한 지점을 빈곤의 기준으로 삼는다. 따라서 절대적 빈곤율의 경우와는 달리 가처분소득의 빈곤율이 경상소득의 빈곤율에 비해 반드시 크지는 않게 된다. 일반적으로 중위소득(소비)의 50%선을 빈곤선으로 삼는데, 경우에 따라 중위소득의 40%와 60%를 빈곤선으로 삼기도 한다. 아래의 표들은 경상소득과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각각의 범주에서 세 수준을 빈곤선으로 한 상대적 빈곤율을 모두 보여준다.

〈표 3-4〉 경상소득 상대적 빈곤율과 빈곤격차비율

구분	빈곤율			빈곤격차비율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1996	4.59	8.97	14.63	1.39	2.43	3.94
2000	8.12	13.33	19.42	2.67	4.26	6.26
2003	11.22	16.29	22.18	4.57	6.39	8.51
2006	11.93	16.62	22.33	5.48	7.23	9.29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1996, 2000) 및 가계조사(2006상반기)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생활실태조사(2003)자료

〈표 3-5〉 가처분소득 상대적 빈곤율과 빈곤격차비율

구분	빈곤율			빈곤격차비율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1996	4.75	8.73	14.42	1.86	2.82	4.27
2000	8.05	13.02	19.12	2.78	4.31	6.25
2003	11.02	16.00	21.82	4.85	6.56	8.61
2006	11.76	16.37	22.09	5.75	7.41	9.37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1996, 2000) 및 가계조사(2006상반기)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생활실태조사(2003)자료

〈표 3-6〉 소비지출 상대적빈곤율과 빈곤격차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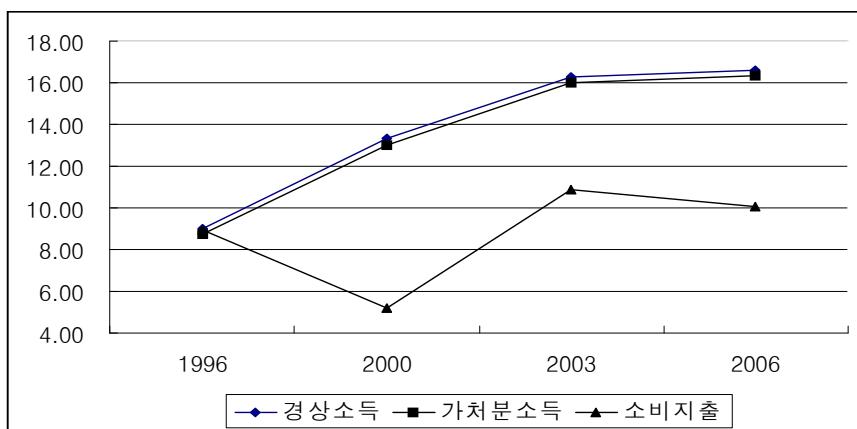
구분	빈곤율			빈곤격차비율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1996	4.15	8.92	15.48	1.01	2.07	3.73
2000	2.18	5.19	10.65	0.39	1.02	2.16
2003	6.38	10.86	17.13	1.50	2.87	4.67
2006	5.60	10.05	16.45	1.53	2.77	4.49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1996, 2000) 및 가계조사(2006상반기)자료.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국민생활실태조사(2003)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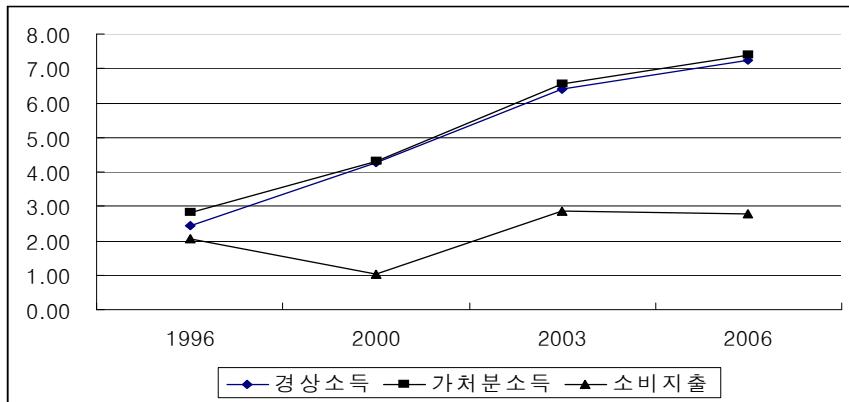
경상소득과 가처분소득의 경우, 중위 40%를 기준으로 한 빈곤율이 절대적 빈곤율에 근접한 수치를 보여준다. 경상소득과 가처분소득의 경우 '96~'00년 사이의 빈곤율 증가가 컸던 것은 절대빈곤율의 경우와 동일하나, '03~'06년 상반기 사이의 빈곤율 증가는 극히 미미하였다.

소비지출의 상대빈곤율의 경우는 '96~'00년 사이에는 감소, '00~'03년 사이에 증가, '03~'06년 상반기 사이에 미약한 감소 식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였으나, '96년과 '06년 상반기를 비교할 때에는 결과적으로 다소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3-3] 중위 50%기준 상대빈곤율 추이



[그림 3-4] 중위 50%기준 빈곤격차비율 추이



경상소득과 가처분소득은 빈곤격차비율도 지속적인 증가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위소득 50% 상대빈곤율을 보면, 빈곤율의 증가가 미미했던 '03~'06상반기의 기간동안에도 빈곤격차비율은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했다.

소비지출의 경우 '00년 빈곤격차비율이 하락했다가 이후 다시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소비지출의 경우 소득에 비해 빈곤격차비율의 큰 변동이 작게 나타났다.

소득범주의 빈곤율과 빈곤격차비율 모두 중위 40%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수치가 50%와 60%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수치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한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빈곤이 확대되고 심화되는 과정에서도 빈곤층 내부의 불평등이 커졌음을 의미한다.

제2절 빈곤층 구성의 변화

〈표 3-7〉 빈곤가구의 구성 변화

(단위: 가구, %)

구분		1996	2000	2003	2006상	빈곤층 평균	전계총 평균
가구주 성	남여	48.9 51.1	54.9 45.1	58.1 41.9	52.6 47.4	53.6 46.4	74.4 25.6
가구주 연령	29세 이하	12.3	7.0	2.8	4.8	6.8	9.0
	30~39세	17.3	16.8	11.4	13.2	14.7	25.5
	40~49세	15.0	18.2	19.0	19.0	17.8	27.2
	50~59세	13.7	13.1	14.0	15.5	14.1	17.5
	60세 이상	41.6	44.8	52.7	47.4	46.6	20.8
가구주 학력	초졸 이하	49.3	47.2	50.4	40.8	46.9	21.0
	중졸 이하	14.8	16.4	14.3	17.4	15.7	13.9
	고졸 이하	26.3	24.5	25.6	28.9	26.3	37.0
	전문졸 이하	3.1	5.6	1.9	3.6	3.5	6.9
	대학 이상	6.6	6.3	7.7	9.2	7.5	21.1
가구원 수	1인	30.9	33.9	34.8	33.3	33.2	16.9
	2인	27.6	26.6	30.5	31.0	28.9	21.4
	3인	17.0	16.1	16.5	16.8	16.6	22.0
	4인	16.7	16.7	13.5	12.8	14.9	28.7
	5인	5.7	5.2	3.5	4.8	4.8	5.8
	6인	1.7	1.2	1.0	1.0	1.2	1.6
	7인 이상	0.5	0.3	0.2	0.4	0.3	0.4
취업 가구원 수	0인	44.7	50.3	51.2	50.8		
	1인	45.3	39.9	41.7	39.7		
	2인	9.4	9.2	6.7	9.0		
	3인	0.5	0.6	0.5	0.5		
	4인	0.0			0.0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1996, 2000) 및 가계조사(2006상반기)자료.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국민생활실태조사(2003)자료

위 〈표 3-7〉은 가구 및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별로 본 빈곤층(중위 경상소득 50% 이하)의 구성 변화를 보여준다. 가구주 성별의 경우, 여성가구주의 비

율이 전 계층 평균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전 기간의 전계층 평균 여성가구 주의 비율이 25.6%인데 비해 빈곤가구의 이 기간 평균은 46.4%로 약 1.8배에 달한다. 여성 빈곤가구주의 비율이 다소 감소추세를 보이다 '06년 다시 상승하긴 하지만, 이는 다른 계층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임을 감안한다면, 여성빈곤의 심각성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구주의 연령층을 볼 경우, 6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빈곤층이 낮은 구성비를 보이고 있으나, 빈곤층에서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46.6%로 전 계층 평균 20.8%의 2.2배에 달한다. 고령화 추세에 따라 그 비중도 전반적인 증가추세에 있다.

가구주의 학력을 비교하면, 저학력 가구주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특히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가구주의 경우, 전체 평균 21.0%의 두 배가 넘는 46.9%를 보이고 있다. 전체평균과 빈곤층 사이의 학력 구성은 고졸이상부터 역전된다. 특이한 점은, 다른 계층에서 대학 이상의 비중이 다소 감소하는 '03~'06 상반기 기간동안 빈곤층의 대학이상 학력 비중은 증가한다는 점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학력을 지닌 가구에서도 소득불안에 따른 빈곤화의 위협이 심해지고 있음을 추정케 하는 것이다.

가구원수의 구성을 비교하여 볼 때, 빈곤층에서 1, 2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특히 1인가구의 비율은 전체 가구의 두 배에 달한다. 표에는 나타나있지 않지만, 1인가구의 비율은 중위소득 150% 이상의 가구에서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고, 중위소득 50%~150%의 가구에서는 미약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빈곤가구 가운데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구, 고령가구, 저학력가구, 1인가구가 빈곤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기초생활 보호정책이나 탈빈곤정책이 보다 더 대상 적합성을 높여가야 함을 시사한다.

제4장 불평등의 변화

제1절 계층간 불평등의 변화

1. 지니계수의 변화

경제위기 이후 지니계수의 악화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연구에서 지적된 바 있다. 아래의 <표 4-1>은 1인가구와 농어촌을 포함한 표본의 지니계수 변화추이를 보여준다. 경상소득 지니계수의 경우 '03~'06 상반기 기간에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경제위기 이전인 '96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은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본 지니계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경상소득 지니계수와 가처분소득 지니계수의 차이는 사회보험과 직접세가 소득의 균등분배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이 가처분소득 대비 지니계수 개선비율^{주17)}은 차이는 '96년 0.37%에서 '00년 0.85%, '03년 1.08%, '06년 상반기 1.25%로 매우 소폭이지만 개선되는 추이를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선진국의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는 정도이다.^{주18)}

소비지출의 지니계수 변화는 소득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인다. '00년 개선되었던 지니계수는 '03년 이후 다시 악화되어 '06년 상반기에는 '96년 수준으로 다시 높아졌다.

주17) $100 \times (\text{경상소득지니계수} - \text{가처분소득지니계수}) / \text{가처분소득지니계수}$ 를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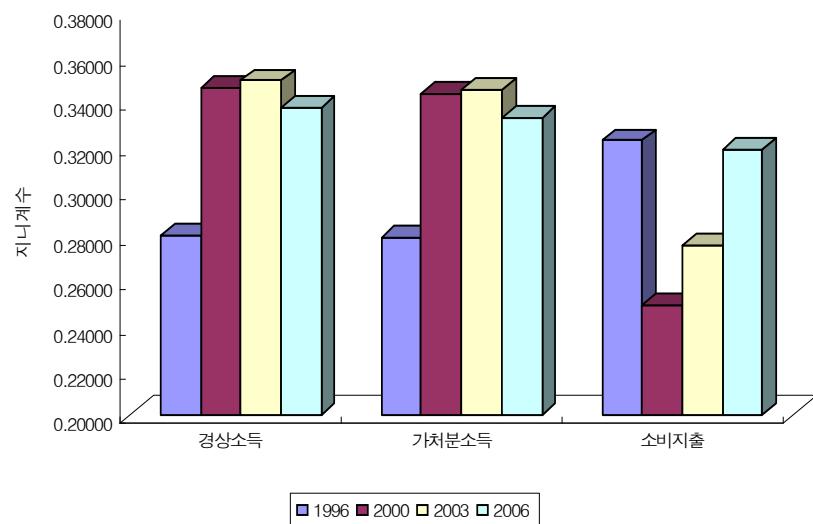
주18) 박찬용 외(2002), 유경준·김대일(2003), 박기백 외(2004) 등 참조.

〈표 4-1〉 소득 및 소비지출 지니계수 변화추이

구분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1996	0.28039	0.27963	0.32246
2000	0.34594	0.34301	0.24896
2003	0.34914	0.34542	0.27579
2006상	0.33707	0.33291	0.31861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1996, 2000) 및 가계조사(2006상반기)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생활실태조사(2003)자료

[그림 4-1] 소득 및 지출유형별 지니계수 변화추이



2. 분위수 배율과 분위별 점유율

지니계수는 소득의 구간별 분포를 표현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분위수배율과 분위 분배율과 분위별 점유율, 10분위 분배율 등은 이런 문제를 보완해준다. 분위수배율은 전체 소득구간을 동일한 수의 가구(또는 개인)를 포함하는 10개(또는 5개)의 구간으로 나눈 뒤, 각 구간을 구분하는 값들의 비율을 구한 값이다. 아래의 <표 4-2>, <표 4-3>과 <표 4-4>는 경상소득과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각각에 대해 P90/10, P90/50, P80/20의 값을 보여주고 있다. 이때 P90은 전체 소득구간을 10 구간으로 나눈 경우 최고위인 10분위와 그 바로 아래 분위인 9분위를 구분하는 선이고, 반대로 P10은 1분위와 2분위를 구분하는 선이다. 따라서 P90/10은 소득분포의 양 극단간의 차이를 보여준다.

같은 방법으로 이해할 때, P90/50은 중간층과 상위층의 격차를 보여준다.

<표 4-2> 경상소득 기준 분위수배율 변화추이

(단위: 배)

구분	경상소득		
	P90/10	P90/50	P80/20
1996	3.491	1.828	2.200
2000	4.449	1.965	2.540
2003	5.556	2.062	2.880
2006상	5.513	1.982	2.852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1996, 2000) 및 가계조사(2006상반기)자료.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국민생활실태조사(2003)자료

〈표 4-3〉 가처분소득 기준 분위수 배율 변화추이

(단위: 배)

구분	가처분소득		
	P90/10	P90/50	P80/20
1996	3.475	1.815	2.187
2000	4.367	1.940	2.499
2003	5.395	2.031	2.820
2006상	5.412	1.949	2.786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1996, 2000) 및 가계조사(2006상반기)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생활실태조사(2003)자료

〈표 4-4〉 소비지출 기준 분위수 배율 변화추이

(단위: 배)

구분	소비지출		
	P90/10	P90/50	P80/20
1996	3.697	1.917	2.288
2000	2.991	1.758	2.003
2003	3.654	1.801	2.250
2006상	3.868	1.930	2.3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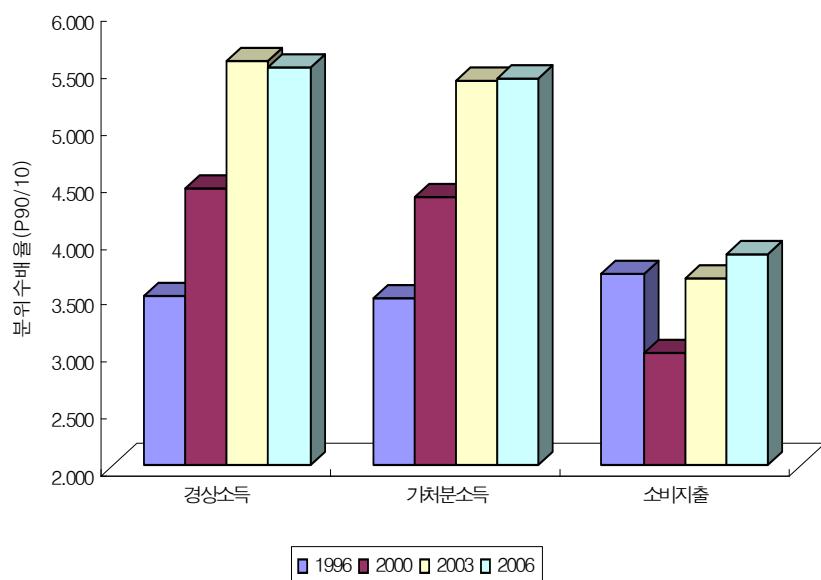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1996, 2000) 및 가계조사(2006상반기)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생활실태조사(2003)자료

경상소득과 가처분 소득은 P90/10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P90/50, P80/20 모두 96년 아래 '00년까지는 상승하다가 이후 약간 하락하는 추이를 보인다. 전체적으로 소득분포의 양 극단간 격차는 확대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소비지출은 '00년까지 줄어들던 분위수배율이 '00년 이후부터 다시 높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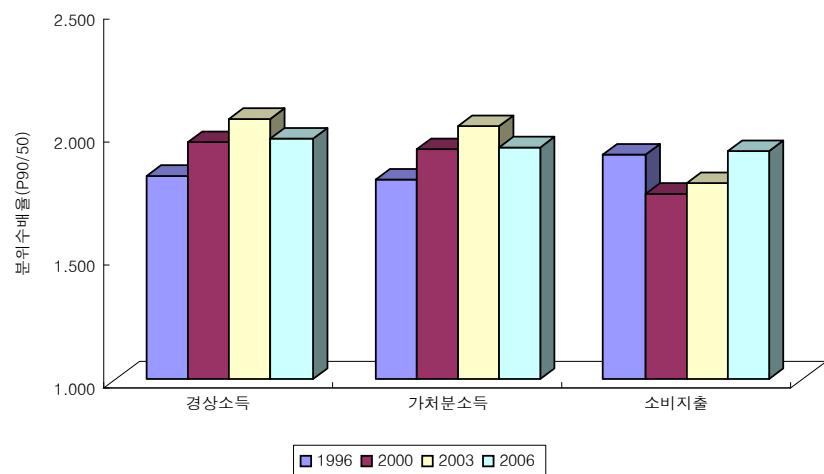
아래의 [그림 4-2]부터 [그림 4-4]까지는 은 위의 <표 4-2>부터 <표 4-4>까지를 재구성한 것으로 분위수 배율의 종류별 변화의 추이를 보여준다. 세 개의 그림 모두 각 변수별로 유사한 변화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증가의 속도 면에서는 P90/10이 가장 빨라 소득 최상위와 최하위의 격차가 더욱 빨리 확대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P90/10의 경우 '03년 이후 기간동안 경상소득은 감소하였으나 가처분소득은 미약하게 증가한 것이 특징적이다. 반면 P80/20의 경우는 가처분소득과 경상소득이 같은 변화추이를 보여준다. 한편 경상소득과 가처분소득의 P90/50 차이는 시기애 관계없이 미미하여 사회보험과 직접세가 중간층과 상위층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데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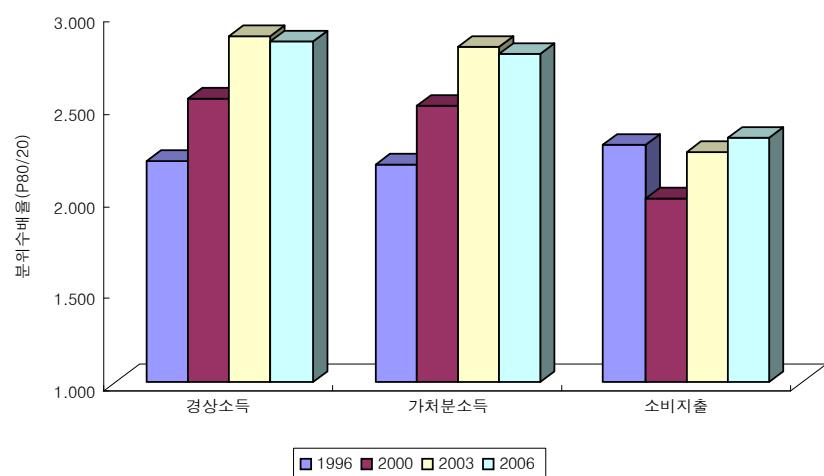
[그림 4-2] 소득 및 소비지출의 분위수배율(P90/10) 변화추이



[그림 4-3] 소득 및 소비지출의 분위수배율(P90/50) 변화추이



[그림 4-4] 소득 및 소비지출의 분위수배율(P80/20) 변화추이



아래의 <표 4-5>는 10분위별 점유율을 보여준다. 위에서 설명한 분위수 배율과 분위별 점유율이 다른 점은, 분위수 배율의 경우 분위 내의 불평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9분위와 10분위를 구분하는 구분선이 동일할지라도 10분위 안에서 P90에서 멀리 떨어진 쪽에 고소득자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을 수도 있고 구분선(P90) 바로 위 부분에 고소득자들이 분포하고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위의 P90/10과 아래의 경상소득 10분위 분배율을 보면, P90/10의 경우 '06년 상반기에 5.513배였으나 십분위 분배율은 14.485로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는 1분위와 10분위 내의 불평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차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표 4-5> 경상소득 기준 분위별 점유율 변화추이

(단위: %, 배)

구분	1/10 분위	2/10 분위	3/10 분위	4/10 분위	5/10 분위	6/10 분위	7/10 분위	8/10 분위	9/10 분위	10/10 분위	10분위 배율	5분위 배율
96	3.36	5.36	6.46	7.49	8.41	9.33	10.56	12.26	14.32	22.45	6.678	4.216
00	2.49	4.45	5.67	6.72	7.82	8.99	10.22	11.90	14.57	27.17	10.900	6.014
03	1.91	4.05	5.50	6.89	7.87	9.26	11.89	11.69	15.68	25.25	13.248	6.877
06상	1.65	4.13	6.09	6.67	8.27	9.59	11.09	13.07	15.52	23.92	14.485	6.823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1996, 2000) 및 가계조사(2006상반기)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생활실태조사(2003)자료

경상소득 10분위별 점유율의 변화를 보면 '96~'06년 상반기 기간동안 10분위 분배율과 5분위 소득배율(하위 1, 2분위 소득점유율 대비 상위 9, 10분위의 소득점유율 비율) 모두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0분위 분배율의 경우 두배 이상 상승하였다. 5분위 배율의 경우, 증가속도가 덜하고, '03~'06기간동안 다소 개선된 점이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경

향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양극화의 근거로 제시된 바 있다. '96년과 '06년 상반기 두 시점을 비교할 경우, 1~5분위까지는 하락, 6분위 이상은 상승의 경향을 보여 양측의 변화방향이 대조적으로 나타난다.

가처분소득의 변화도 경상소득의 변화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특히 지난 10년간 10분위배율과 5분위 배율을 비교할 경우 경상소득과 가처분소득 모두 증가율이 2.2배, 1.6배로 동일하여, 사회보장지출과 직접세가 분위배율의 증가추세에 미치는 효과가 거의 없었다.

〈표 4-6〉 가처분소득 기준 분위별 점유율 변화추이

(단위: %, 배)

구분	1/10 분위	2/10 분위	3/10 분위	4/10 분위	5/10 분위	6/10 분위	7/10 분위	8/10 분위	9/10 분위	10/10 분위	10분위 배율	5분위 배율
1996	3.32	5.38	6.50	7.45	8.41	9.39	10.60	12.15	14.43	22.36	6.732	4.226
2000	2.49	4.49	5.75	6.81	7.85	9.00	10.23	11.87	14.44	27.06	10.857	5.944
2003	1.89	4.13	5.59	6.87	8.10	9.23	10.84	12.69	15.55	25.12	13.285	6.755
2006상	1.63	4.20	5.80	7.11	8.33	9.66	11.13	13.00	15.58	23.57	14.477	6.717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1996, 2000) 및 가계조사(2006상반기)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생활실태조사(2003)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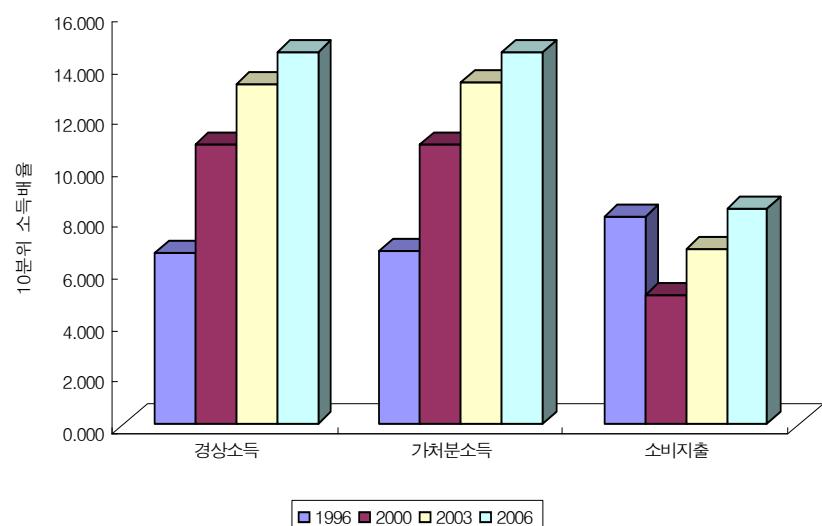
〈표 4-7〉 소비지출 기준 분위별 점유율 변화추이

(단위: %,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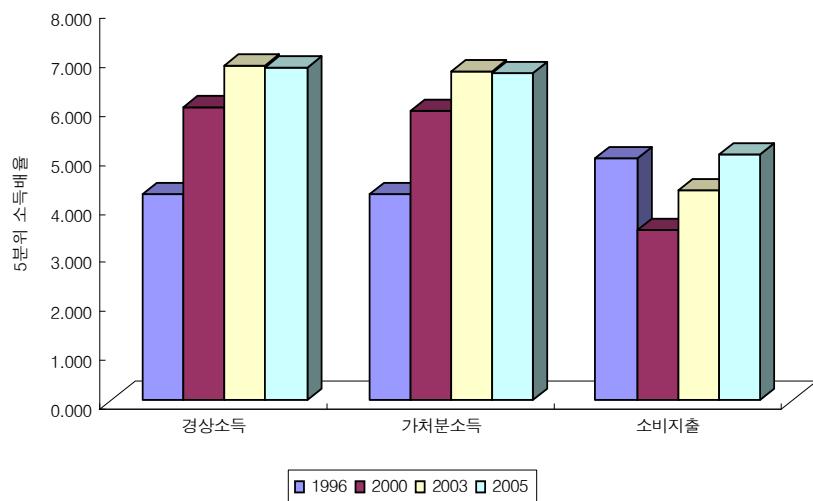
구분	1/10 분위	2/10 분위	3/10 분위	4/10 분위	5/10 분위	6/10 분위	7/10 분위	8/10 분위	9/10 분위	10/10 분위	10분위 배율	5분위 배율
1996	3.31	4.92	5.97	6.88	7.82	8.83	9.99	11.55	13.99	26.73	8.082	4.949
2000	4.21	5.87	6.81	7.68	8.49	9.42	10.51	11.91	14.00	21.08	5.009	3.479
2003	3.11	5.26	6.57	7.57	8.58	9.66	10.82	12.37	14.77	21.29	6.839	4.307
2006상	3.06	4.89	6.00	7.00	7.95	9.00	10.21	11.80	14.31	25.77	8.421	5.042

소비지출의 분위별 배율의 경우는 소득과는 다소 상이한 양상을 띤다. 10분위 배율과 5분위 배율은 '00년과 '03년의 경우 개선되었으나 이후 다시 악화되었다. 분위별로는 1, 2, 4분위의 점유율과 10분위의 점유율이 다소 하락하였고, 다른 분위의 점유율은 상승하였다. 전체적으로는 하위분에서는 하락 경향이, 상위 분위에서 증가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그 변화폭은 미미하였다.

[그림 4-5] 소득 및 소비지출 10분위배율 변화추이



[그림 4-6] 소득 및 소비지출의 5분위배율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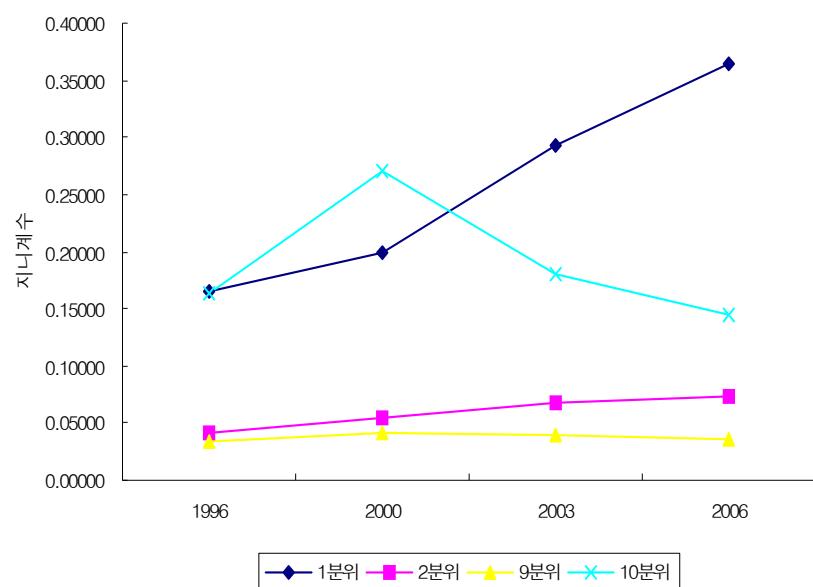


위의 [그림 4-5]를 보면 10분위 배율의 경우, [그림 4-2]에서 경상소득의 분위 수 배율 P90/10이 06년에 다소 떨어졌던 것과는 달리 지속적인 상승경향을 보인다.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분위수배율의 크기와 분위배율(분위별 점유율비)의 크기의 차이, 그리고 양자의 변화속도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에는 집단내의 불평등 변화추이가 작용한다. 아래의 <표 4-8>은 이와 같은 집단내 불평등의 변화경향을 보여주는데, 1, 2분위의 분위 내 지니계수는 절대적인 크기는 작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하였고, 9분위의 지니계수는 상승후 하락을 반복하였으며, 10분위의 지니계수는 전체적으로 하락하였다. 특히 경상소득 1분위 내의 불평등도 두 배 이상 상승하여, 1분위는 점유율의 하락과 함께 불평등도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하위분위에서는 집단내 소득불평등이 확대되고 반대로 상위 분위는 집단내 불평등이 완화되고 있다. 상위분위의 불평등 완화, 하위분위의 불평등 확대라는 경향은 경상소득과 가처분 소득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표 4-8〉 경상소득 기준 상·하위계층 분위별 지니계수 변화추이

구분	1996	2000	2003	2006상
1분위	0.16612	0.19982	0.29379	0.36394
2분위	0.04061	0.05370	0.06783	0.07290
9분위	0.03432	0.04041	0.04028	0.03649
10분위	0.16336	0.27014	0.18115	0.143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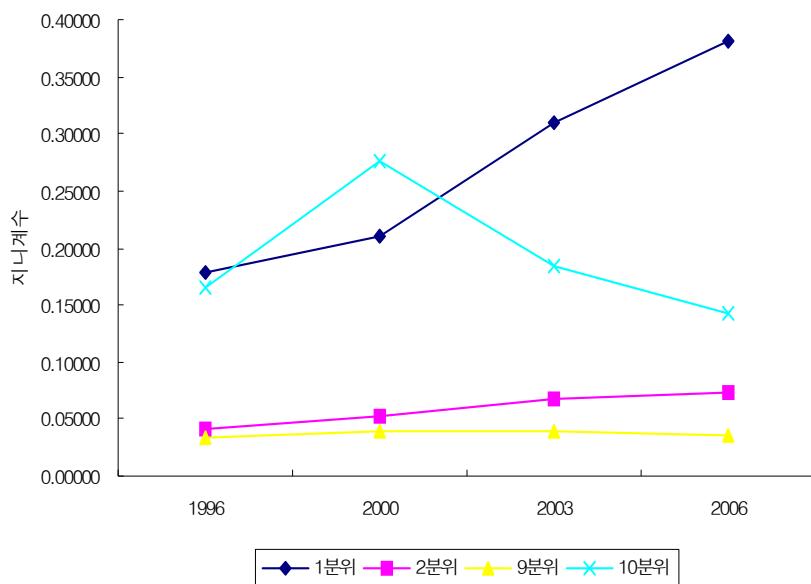
[그림 4-7] 경상소득 기준 상·하위계층 분위별 지니계수 변화추이



〈표 4-9〉 가치분소득 기준 상·하위계층 분위별 지니계수 변화추이

구분	1996	2000	2003	2006상
1분위	0.17917	0.20997	0.30978	0.38200
2분위	0.04092	0.05343	0.06725	0.07335
9분위	0.03392	0.03965	0.03868	0.03563
10분위	0.16438	0.27641	0.18478	0.142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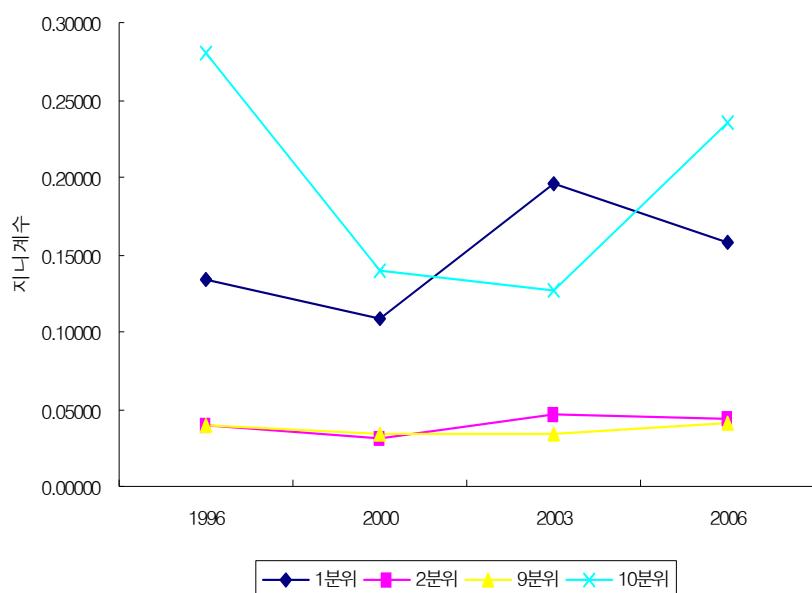
[그림 4-8] 가치분소득 기준 상·하위계층 분위별 지니계수 변화



〈표 4-10〉 소비지출 기준 상·하위계층 분위별 지니계수 변화추이

구분	1996	2000	2003	2006
1분위	0.13423	0.10775	0.19632	0.15738
2분위	0.03928	0.03105	0.04644	0.04298
9분위	0.03923	0.03375	0.03404	0.04090
10분위	0.28009	0.13986	0.12679	0.23457

[그림 4-9] 소비지출 기준 상·하위계층 분위별 지니계수 변화추이



소비지출의 분위 내 불평등경향은 소득과는 상반되게 나타난다. 1, 2분위 내의 불평등정도는 최근 개선되는 추세인 반면, 9, 10분위 내의 불평등은 다소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변동폭은 최상위분위와 최하위 분위에서 더욱 크게 나타난다.

이와 같이 분위배율로 살펴본 양극화는 지속적인 확대추세와 함께 하위층의 점유율 하락과 불평등 심화, 상위층의 점유율 상승과 불평등 축소를 동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2절 집단간 불평등의 변화

1절에서는 소득이나 소비지출의 분포상에서 각 분위가 차지하는 비중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런데 소득이나 소득수준에 따라 구분한 계층간의 불평등 이외에도 소득 외적 가구 특성에 따른 집단 사이에서도 불평등의 변화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이 절에서는 가구주의 주요 특성에 따라 구분되는 집단 간에 불평등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일반화된 엔트로피 지수의 변화를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일반화된 엔트로피 지수는 다음 (식 4-1)로 표현된다.

$$GE(\alpha) = \frac{1}{\alpha^2 - \alpha} \left[\frac{1}{n} \sum_i \left(\frac{y_i}{\mu} \right)^\alpha - 1 \right] \quad \text{---(식 4-1)}$$

여기서 y 는 개인(혹은 가구) i 의 소득을 의미하며, μ 는 평균소득을 의미한다. 또한, α 값은 각 소득계층에 대한 가중치이다. 일반적으로 엔트로피지수 함수에서 0, 1, 2의 α 값이 주로 사용되는데, $\alpha=0$ 이면 소득이 낮은 계층의 소득변화에 보다 더 큰 비중이 주어지게 되고, $\alpha=1$ 이면 모든 소득분포에 고르게 비중이 주어지게 된다. $\alpha=2$ 이면 소득이 높은 계층의 소득 변화에 보다 더 큰 비

중이 주어진다는 의미를 지닌다(여유진 외, 2005). 위의 일반화된 엔트로피 지수는 다시 아래와 같은 식으로 분해된다.

$$GE(0) = \sum v_k GE_k(0) + \sum v_k \log\left(\frac{1}{\lambda_k}\right) \quad \text{식 4-2}$$

$GE_k(0)$ = k 집단 내의 불평등

$$v_k = k \text{ 집단이 모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율} (\equiv \frac{n_k}{n})$$

$$\lambda_k = k \text{ 집단 평균의 모평균에 대한 비율} (\equiv \frac{\mu_k}{\mu})$$

아래의 <표 4-11>부터 <표 4-13>까지는 가구주의 성, 연령, 학력, 거주지역에 따라 구분된 집단에서 경상소득의 집단 내 불평등의 경향과 집단간 불평등의 경향을 보여준다.

가구주의 성별을 기준으로 할 경우, 남성이 가구주인 가구와 여성이 가구주인 가구 사이의 불평등은 '96년 0.0039에서 '03년 0.0083까지 확대되다가 '06년 상반기에 다소 축소되었다. 한편 가구주 성별로 구분한 결과 집단 내의 불평등은 '96년 0.1549에서 '06년 상반기 0.4313으로 계속 확대되었는데, 남성가구주의 경우보다 여성가구 내의 집단 간 불평등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다.

가구주 연령에 따라 구분한 집단 간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관측된다. 집단 간, 집단 내 불평등을 모두 감안한 전체 불평등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집단 내 불평등은 계속 증가하였고, 집단 간 불평등은 '03년까지 증가하다가 '06년 상반기에 감소하였다. 전체 불평등의 크기 및 변화 폭에 집단 내 불평등이 미치는 영향이 집단 간 불평등의 영향보다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집단 내 불평등은 30대 미만의 가구에서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되었고 50대 이상의 중고령 층 가구에서도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1〉 가구주 성별 엔트로피분해

구분		전체 불평등도	집단 k 비중 ν_k	집단내 불평등도	집단간 불평등도
				GE(0)k	$\log(1/\lambda k)$
1996	남성	0.1588	0.8653	0.1456	-0.0320
	여성		0.1347	0.2148	0.2343
	전체		1.0000	0.1549	0.0039
2000	남성	0.2429	0.8505	0.2344	-0.0415
	여성		0.1495	0.2516	0.2758
	전체		1.0000	0.2369	0.0059
2003	남성	0.4082	0.8713	0.3904	-0.0439
	여성		0.1286	0.4646	0.3624
	전체		0.9999	0.3999	0.0083
2006상	남성	0.4370	0.8136	0.4001	-0.0472
	여성		0.1864	0.5676	0.2367
	전체		1.0000	0.4313	0.0058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1996, 2000) 및 가계조사(2006상반기)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생활실태조사(2003)자료

〈표 4-12〉 가구주 연령별 엔트로피분해 결과

구분		전체 불평등도	집단 k 비중 ν_k	집단내 불평등도	집단간 불평등도
				GE(0)k	$\log(1/\lambda k)$
1996	29세 이하		0.1588	0.1050	0.1151
	30~39세			0.3652	0.0267
	40~49세			0.2882	-0.0310
	50~59세			0.1654	-0.1348
	60세 이상			0.0761	0.1703
	전체			1.0000	0.0036
2000	29세 이하		0.2429	0.0673	0.1371
	30~39세			0.2973	0.0781
	40~49세			0.3343	-0.1014
	50~59세			0.1836	-0.1184
	60세 이상			0.1175	0.2700
	전체			1.0000	0.0085
2003	29세 이하		0.4083	0.0467	0.0422
	30~39세			0.2900	-0.0513
	40~49세			0.3363	-0.0605
	50~59세			0.1804	-0.0824
	60세 이상			0.1465	0.4155
	전체			1.0000	0.0128
2006상	29세 이하		0.4370	0.0381	0.0471
	30~39세			0.2704	0.0151
	40~49세			0.3663	-0.0676
	50~59세			0.1895	-0.0979
	60세 이상			0.1357	0.3419
	전체			1.0000	0.0090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1996, 2000) 및 가계조사(2006상반기)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생활실태조사(2003)자료

〈표 4-13〉 가구주 학력별 엔트로피분해 결과

구분		전 체 불평등도	집단 k 비중 ν_k	집단내 불평등도	집단간 불평등도
				GE(0) _k	$\log(1/\lambda_k)$
1996	초졸 이하		0.1268	0.2052	0.3008
	중졸 이하		0.1610	0.1294	0.1206
	고졸 이하		0.4396	0.1294	0.0266
	전문대졸 이하		0.0622	0.1240	-0.0169
	대학 이상		0.2104	0.1579	-0.2571
	전체		0.1588	1.0000	0.0141
2000	초졸 이하		0.1459	0.2287	0.3792
	중졸 이하		0.1383	0.2085	0.1968
	고졸 이하		0.4099	0.2084	0.0403
	전문대졸 이하		0.0964	0.1872	-0.0349
	대학 이상		0.2095	0.2471	-0.3355
	전체		0.2429	1.0000	0.0254
2003	초졸 이하		0.1414	0.4027	0.5336
	중졸 이하		0.1211	0.3839	0.2404
	고졸 이하		0.3997	0.3695	0.0698
	전문대졸 이하		0.0586	0.3267	-0.0789
	대학 이상		0.2792	0.3595	-0.3232
	전체		0.4083	1.0000	0.0376
2006상	초졸 이하		0.1131	0.5439	0.4581
	중졸 이하		0.1191	0.5321	0.1974
	고졸 이하		0.4160	0.4144	0.0501
	전문대졸 이하		0.0837	0.4167	-0.0696
	대학 이상		0.2681	0.3074	-0.2531
	전체		0.4370	1.0000	0.0225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1996, 2000) 및 가계조사(2006상반기)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생활실태조사(2003)자료

〈표 4-14〉 거주지역별 엔트로피분해 결과

구분		전체 불평등도 ν_k	집단 k 비중 ν_k	집단내 불평등도	집단간 불평등도
				GE(0)k	$\log(1/\lambda_k)$
1996	서울	0.1588	0.3082	0.1347	-0.1166
	기타지역		0.6918	0.1648	0.0567
	전체		1.0000	0.1555	0.0033
2000	서울	0.2429	0.2405	0.2745	-0.1404
	기타지역		0.7595	0.2284	0.0489
	전체		1.0000	0.2395	0.0034
2003	서울	0.4083	0.2334	0.4534	-0.1182
	기타지역		0.7666	0.3916	0.0390
	전체		1.0000	0.4060	0.0023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1996, 2000)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생활실태조사(2003)자료

가구주의 학력별로 집단을 구분하여 본 엔트로피 분해결과에도 전체 불평등은 계속 확대되었다. 집단 내 불평등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집단간 불평등은 확대되다 '03~'06 기간에 완화되었다. 집단 내의 불평등과 집단간의 불평등 모두 초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가구에서 가장 높았다. 한편 집단 내 불평등의 증가폭은 초졸 이상~중졸 이하의 가구에서 가장 컸다.

지역별 격차의 경우, 자료의 한계상 서울과 서울 외 지역으로 구분하였으며, '06년의 분석을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다른 집단구분에서와는 달리 집단간 불평등이 '00년 이후 하락하였다. 집단 내 불평등은 물론 계속 확대되었다. 집단 내 불평등도 서울이 기타지역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볼 때, 가구주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집단을 구분 했을 때 집단간 불평등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다 최근 다소 완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집단간 불평등과 상이하게 집단내 불평등은 계속 증가하였으며, 그 증가폭도 더 컸다.

한편 장과 캔버(Zhang and Kanbur 2001)는 일반화된 엔트로피 지수를 변형하여 다음과 (식 4-3)같은 집단 간 극화 지표를 제시하였다. 지표 P는 집단간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의 합과 집단 내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의 합 사이의 비율로 정의되는데, 이 P의 값이 클수록 집단간 불평등이 집단내 불평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짐을 의미한다. 한다. 이들은 이 지표를 이용하여 중국의 도농간 양극화와 내륙-해안간 양극화를 분석한 결과, 절대적으로는 도농간 양극화가 속도에 있어서는 내륙-해안간 양극화가 매우 심각함을 보였다.

$$P = \sum v_k \log \left(\frac{1}{\lambda_k} \right) / \sum v_k GE_k \quad \text{----- (식 4-3)}$$

〈표 4-15〉 Zhang and Kanbur의 지표를 이용한 양극화지수 추이

	성		연령		학력		지역	
	P	증가율	P	증가율	P	증가율	P	증가율
1996	0.025178	-1.08	0.023196	56.33	0.097443	19.85	0.021222	-33.11
2000	0.024905	-16.67	0.036263	-10.75	0.116782	-13.15	0.014196	-60.09
2003	0.020755	-35.21	0.032364	-35.04	0.10143	-46.48	0.005665	
2006	0.013448		0.021023		0.054282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1996, 2000) 및 가계조사(2006상반기)자료.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국민생활실태조사(2003)자료

마찬가지의 방법을 이용하여 위의 각 엔트로피 분해결과를 분석한 결과가 위의 〈표 4-15〉에 나타나 있다. 경상소득의 분포를 통해 본 집단간 극화의 정도 면에서는 학력간 극화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연령간 극화가 크게 나

타났다. 한편 변화의 속도 면에서는 차이가 컸는데, 성별 양극화의 경우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추세이다. 연령별 극화는 '96~'00년간에 56.3%가 상승하였다가 이후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학력간 극화의 경우도 '00년까지 상승하였다가 이후 빠른 속도로 감소하였으며, 감소의 속도도 지역 변수를 제외하고는 가장 빨랐다. 집단간 극화지수의 이와 같은 개선양상은 집단내 불평등의 빠른 증가추세에서 비롯된 것이다. 적어도 경상소득의 경우 인구학적 특성에 집단간 양극화는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제5장 중산층의 규모 변화와 극화의 진행

제1절 계층구성의 변화

1. 중산층의 규모 변화

양극화 논의와 관련하여 쟁점이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과연 중산층이 해체 또는 축소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앞 장에서 살펴본 분위수 배율이나 10분위별 점유율의 경우, 분위별로 소득과 소비의 분포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자세히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구분의 기준이 일반적인 계층구분의 기준(상, 중, 하류층 또는 상, 중간, 중하, 빈곤층)과 달라 중산층의 규모 변화를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소득과 소비지출의 상대적 구분 기준을 달리하여 중산층의 규모 변화 추이를 살펴보도록 한다.

계층은 OECD(1995)와 유경준·김대일(2002)의 방법대로 4개로 구분한다. 즉, 중위소득의 50% 이하를 빈곤층으로, 50~70%를 중하층(modest income class), 70~150%를 중간층(middle income class), 150% 이상을 상류층(high income class)으로 구분한다. 소비지출에 대한 계층분석에서도 이러한 구분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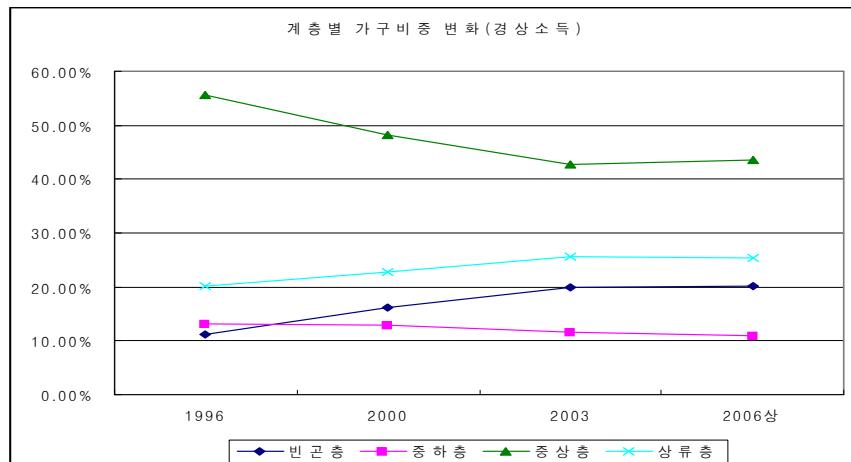
〈표 5-1〉 계층구성의 변화(경상소득기준)

(단위: %)

구분	가구비율			
	1996	2000	2003	2006상
빈곤층	11.19	16.12	19.98	20.05
중하층	13.19	12.84	11.69	10.93
중간층	55.54	48.27	42.76	43.68
상류층	20.08	22.77	25.56	25.34
계	100.00	100.00	100.00	100.00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1996, 2000) 및 가계조사(2006상반기)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생활실태조사(2003)자료

[그림 5-1] 경상소득 계층별 가구비중의 변화



위의 〈표 5-1〉과 [그림 5-1]은 경상소득을 이용하여 구분한 각 계층별 가구비중의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 상류층과 빈곤층의 비율은 계속 증가하는 반면 중간층과 중하층의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간층의 경우 '96-'03기간동안 12.78%p 감소하였으며, 중간층과 중하층을 더한 경우 15.04%p

로 감소폭은 늘어난다. 가구수의 비율로 본 중산층 감소경향은 뚜렷하다고 볼 수 있다. 단 '03년~'06년 기간동안 중간층의 비율은 0.92%p 정도 미약하게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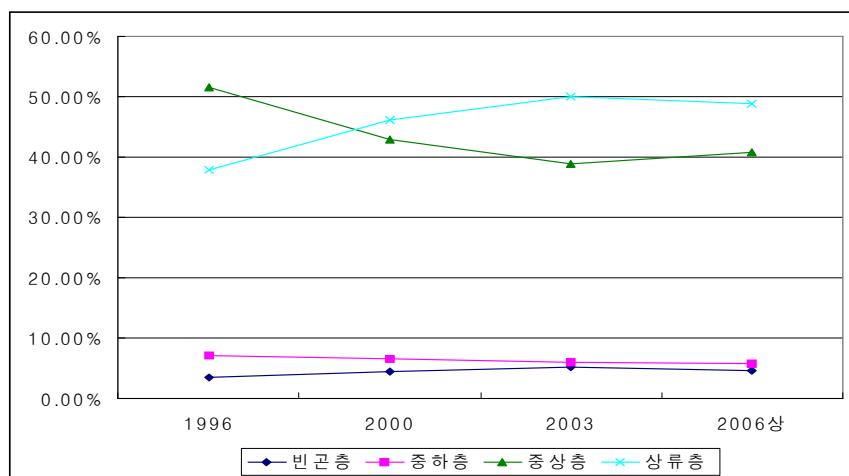
〈표 5-2〉 계층별 경상소득 점유율변화

(단위: %)

구분	점유율			
	1996	2000	2003	2006상
빈곤층	3.38	4.38	5.10	4.68
중하층	7.12	6.53	6.00	5.77
중간층	51.61	42.97	38.82	40.70
상류층	37.89	46.11	50.07	48.85
계	100.00	100.00	100.00	100.00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1996, 2000) 및 가계조사(2006상반기)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생활실태조사(2003)자료

[그림 5-2] 경상소득 계층별 점유율 변화



중산층의 축소는 계층별 소득점유율에도 확연히 나타난다. 계층별 경상소득 점유율의 변화를 보여주는 위 <표 5-2>와 [그림 5-2]에서 알 수 있듯이 상류층의 점유율이 크게 증가하였고 중간층의 점유율이 크게 감소하였다. 빈곤층의 점유율은 다소 증가하였다. 대체로 중하층의 점유율 감소폭과 빈곤층의 점유율 증가폭이 비슷한 크기이고 상류층의 점유율 증가폭과 중간층의 감소폭이 비슷한 수준이다. 상류층을 제외하고는 전 계층에서 가구비율보다 소득점유율이 낮게 나타났다. 전가구의 약 1/4에 해당하는 상류층 가구가 전체 경상소득의 약 1/2를 점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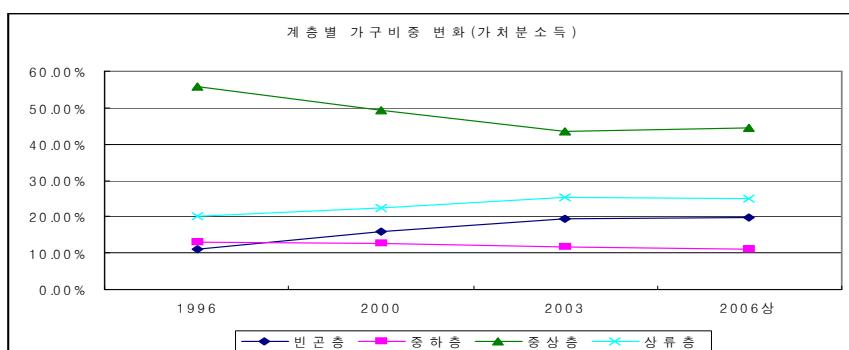
<표 5-3> 가처분소득 계층별 가구비중의 변화

(단위: %)

구분	가구비중			
	1996	2000	2003	2006상
빈곤층	11.09	15.74	19.53	19.70
중하층	13.03	12.61	11.83	10.90
중간층	55.86	49.27	43.46	44.44
상류층	20.03	22.38	25.17	24.96
계	100.00	100.00	100.00	100.00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1996, 2000) 및 가계조사(2006상반기)자료.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국민생활실태조사(2003)자료

[그림 5-3] 가처분소득 계층별 가구비중 변화



가처분소득을 이용하여 계층구분을 한 결과도 경상소득과 비교해보면 추세나 절대적 크기에 있어서 매우 유사하다. 상류층과 빈곤층의 가구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중간층과 중하층의 비율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계층별 가처분소득점유율을 보더라도 그대로 확인된다. '96년의 중간층과 중하층의 점유율을 합한 값을 '06년 상반기와 비교하여 보면 59.09%에서 47.57%로 약 11.5%p가 감소했다.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보아도 중산층의 축소 경향은 분명히 관측된다.

한편 경상소득의 계층별 점유율과 가처분소득의 계층별 점유율을 비교하여 보면, 가처분소득이 경상소득에 비해 빈곤층과 상류층의 점유율이 다소 작고 중간층과 중하층의 점유율은 다소 크나 그 차이는 미미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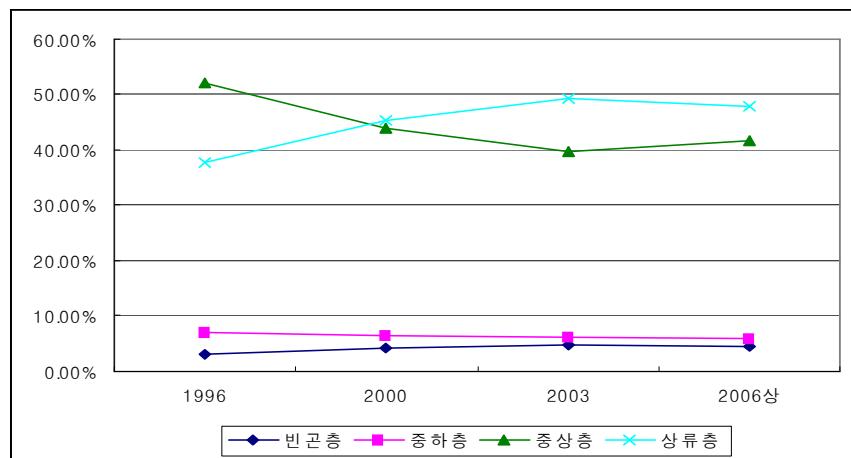
〈표 5-4〉 가처분소득 계층별 점유율 변화

(단위: %)

구분	점유율			
	1996	2000	2003	2006상
빈곤층	3.17	4.26	4.92	4.50
중하층	7.06	6.45	6.12	5.80
중간층	52.03	44.05	39.75	41.77
상류층	37.74	45.25	49.22	47.93
계	100.00	100.00	100.00	100.00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1996, 2000) 및 가계조사(2006상반기)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생활실태조사(2003)자료

[그림 5-4] 가치분소득 계층별 점유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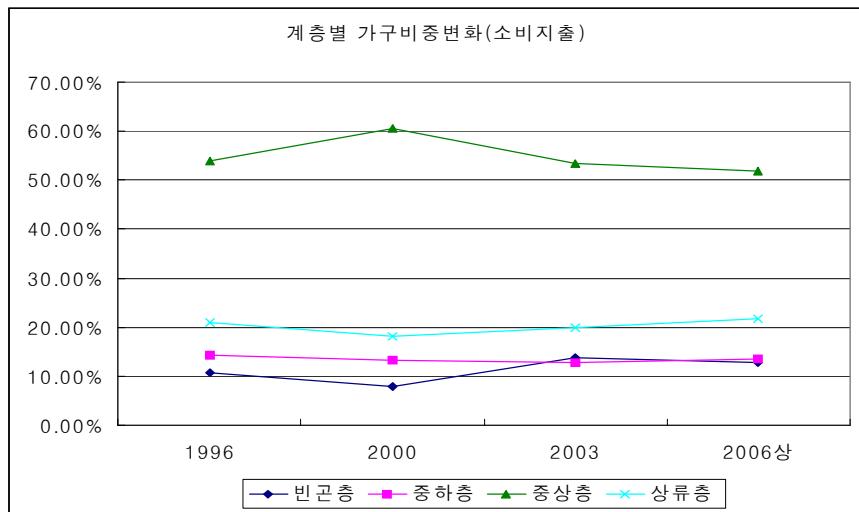


〈표 5-5〉 소비지출 계층별 가구비중 변화

(단위: %)

구분	가구수			
	1996	2000	2003	2006상
빈곤층	10.61	7.94	13.74	12.87
중하층	14.34	13.25	12.87	13.53
중간층	54.00	60.57	53.43	51.78
상류층	21.06	18.24	19.97	21.82
계	100.00	100.00	100.00	100.00

[그림 5-5] 소비지출계층별 가구비중 변화



중간층의 경우 소득에 따른 계층구분에서는 지속적으로 비중이 줄어들고 있었으나 소비에 따른 구분에서는 '00년에 비중이 증가하였다가 이후 줄어들고 있다. 상류층은 '03~'06상반기의 기간에 소득기준으로는 가구비중과 점유율이 모두 약하게 감소하였으나 소비기준으로는 모두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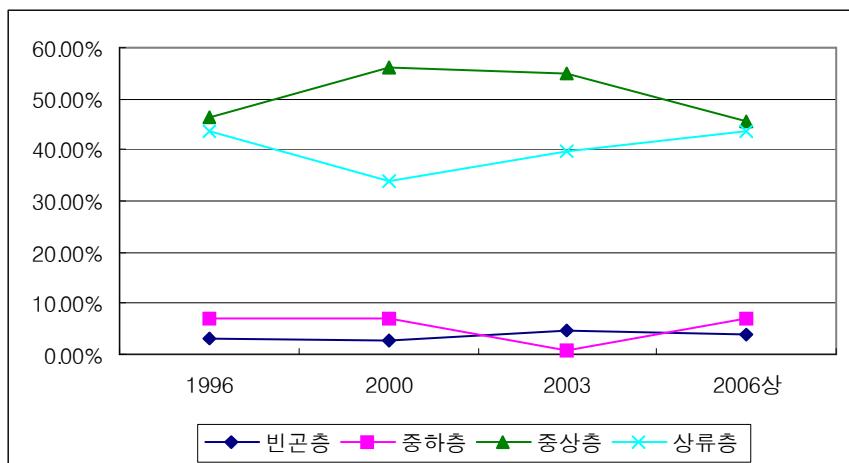
계층별 점유율의 변화폭은 가구비율의 변화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 특징적인 점은, '00~'03년 기간동안 중하층의 점유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여, 7.20%에서 0.76%까지 떨어진 것이다. 이는 같은 기간 가구비중의 감소 폭에 비해 현격하게 큰 폭의 변화이다. 이러한 현상은 이 기간 동안의 신용불량자 급증과 그에 따른 가계신용 억제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5-6〉 소비지출 계층별 점유율 변화

(단위: %)

구분	점유율			
	1996	2000	2003	2006상
빈곤층	3.16	2.75	4.54	3.76
중하층	7.12	7.20	0.76	6.88
중간층	46.24	56.26	54.84	45.72
상류층	43.48	33.79	39.86	43.64
계	100.00	100.00	100.00	100.00

[그림 5-6] 소비지출 계층별 점유율 변화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계층간 구성으로 본 중산층의 감소경향은 뚜렷하게 나타났다. 중간층을 중심으로 보던 중간층과 중하층의 합을 보면 이는 마찬가지이다. 또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경상소득 및 가처분소득으로 구분한 계층과 소비지출로 구분한 경우 공히 중산층의 감소 경향이 나타났다. 빈곤층과 상류층의 비중이 늘어난 점으로 보아 이는 중산층의 분해라고 추정할만한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주19)

제2절 양극화지수의 변화

이 절에서는 양극화 지수의 변화추이를 살펴본다. 앞의 2장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양극화지수를 이용하여 양극화의 경향을 보이려는 시도가 최근의 연구에서 지배적으로 나타난다(전병유 외 2005, 강혜정 2006, 민승규 외 2006).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때 말하는 양극화라는 것이 10분위배율이나 5분위 배율처럼 소득분배의 ‘양’ ‘극단’에 놓여있는 집단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양극화지수에서의 극이란 극단(極端)의 의미라기보다는 축(軸)의 의미에 가깝다. 따라서 양극화지수는 소득분포 상의 양축(꼭 극단일 필요는 없다)에서 축(pole)이 형성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양극화지수가 분위수배율이나 분위간 배율을 대체한다기보다 이들이 제공하지 못하는 다른 차원의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이다.

2장에서 자세히 소개한 양극화지수 가운데 앞 절의 내용과 연관이 많은 것이 울프슨의 양극화지수(이하에서는 울프슨지수로 표현)이다. 울프슨 지수는 전체의 분포가 중위값의 주변에 밀집해 있지 않고 퍼져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앞절에서 본 중산층의 위축 현상과 관련성이 있다.

아래의 <표 5-7>에서 <표 5-9>까지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울프슨지수는 경상소득, 가처분소득에서 상승경향을, 소비지출에서는 감소 후 상승경향을 보여주고 있어, 앞절의 계층 간 구성변화에서 드러난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있다. 즉, 중산층은 계속 얇아지고, 양 방향의 분포가 두터워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에스테반과 레이의 양극화지수(이하 ER지수)와 이를 보정한 에스테반,

주19) 각 계층별 가구구성의 변화에 대해서는 여기서 따로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빈곤층의 구성변화에 대해서는 3장을, 나머지 계층의 구성변화에 대해서는 부표를 참고할 것.

그레딘, 레이의 양극화지수(이하 EGR지수)^{주20)}는 소득분포 상 극화의 진행(즉, 축의 형성) 경향을 보여준다. 소득 또는 소비분포를 두개의 구간으로 구분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오차의 크기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구분기준이 평균 값이라는 점은 앞의 2장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아래의 <표 5-7>은 각 경상 소득의 평균을 기준으로 양분한 집단간의 극화 경향을 보여준다. ER지수의 경우 폐러미터값과 무관하게 '00년까지 상승, 그 이후 완화 추세를 보여준다. 이는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총소득을 기준으로 분석한 전병유 등(2005)의 연구와 다소 다른 결과인데, 전병유 등에 따르면 '01년에 비해 '02년 ER지수가 다소 하락하였지만 전체적으로 '00년에 비해서는 '03년이 상승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주21)}

반면 EGR의 경우 '96~'00기간 동안 상승한 후 '00~'03기간 동안 감소하는 것은 ER과 동일하지만, '03~'06상반기 기간동안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다는 점이 다르다. 전체적으로 경상소득의 양극화는 '96년에 비해 악화되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악화라기보다는 개선과 악화를 반복하는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표 5-7> 경상소득 양극화지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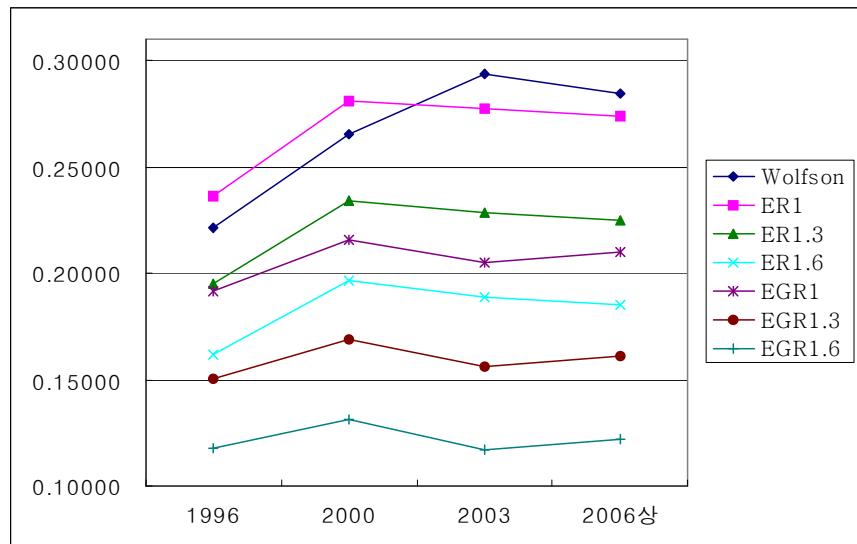
	Wolfson	ER1	ER1.3	ER1.6	EGR1	EGR1.3	EGR1.6
1996	0.22137	0.23606	0.19486	0.16195	0.19173	0.15053	0.11762
2000	0.26504	0.28094	0.23381	0.19650	0.21594	0.16881	0.13150
2003	0.29403	0.27729	0.22819	0.18885	0.20521	0.15612	0.11677
2006상	0.28413	0.27358	0.22466	0.18537	0.21009	0.16117	0.12188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1996, 2000) 및 가계조사(2006상반기)자료.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국민생활실태조사(2003)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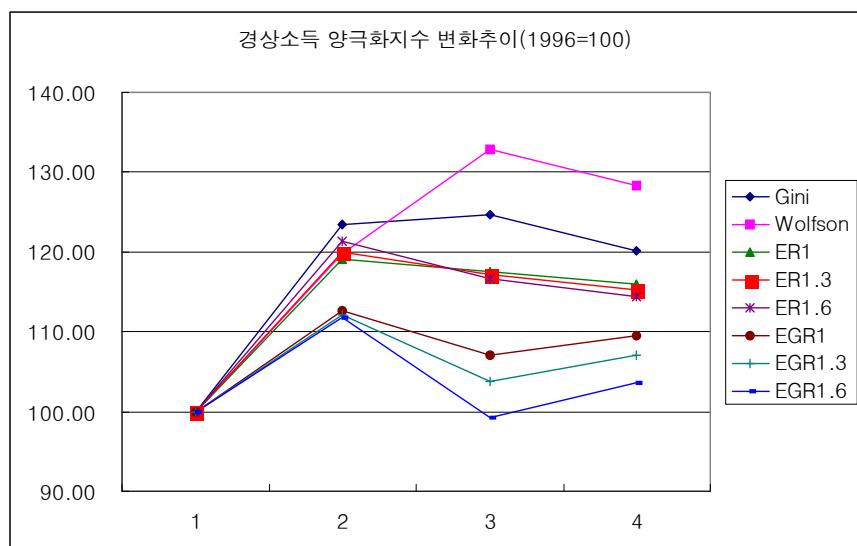
주20) 원래 필자들이 붙인 이름은 확장된(extended) 양극화지수이다. 이 때 확장이란 기술적 표현의 확장, 혹은 개념적 확장을 의미하지만 실제의 내용은 ER 지수의 보완이다. 여기서 EGR지수로 표현하는 것은 오직 표기의 편의를 위해서이다.

주21)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분석되어 있지 않다. 자세한 내용은 전병유 외(2005) 참조.

[그림 5-7] 경상소득 양극화지수 변화



[그림 5-8] 경상소득 양극화지수 변화추이(1996=100)



위의 [그림 5-8]은 양극화지수간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1996년의 각 지수값을 100으로 하여 추세를 비교한 것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듯이 ER지수의 변화는 패러미터 값에 무관하게 매우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울프슨 지수의 변화방향은 지니계수의 변화방향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00~'03년의 기간동안은 ER과 EGR지수의 변화방향이 지니 및 울프슨지수의 방향과 일치하지 않았고 '03~'06년 기간동안은 EGR지수의 변화방향이 나머지 지수의 변화방향과 다르게 나타났다.

아래의 <표 5-8>과 [그림 5-9]가 보여주는 가처분소득의 양극화지수 변화 역시 경상소득의 변화와 매우 유사하다.^{주22)} 양극화지수값의 절대적 크기 면에서도 경상소득과 가처분소득의 양극화지수가 매우 유사하다. 이는 사회보험료와 직접세가 양극화의 완화에 미치는 효과가 거의 없음을 의미한다. 통상적인 추측과는 달리 소득변수들의 양극화 추이는 적어도 ER지수와 EGR 지수로 보았을 때 확대되고 있지는 않았다. 다만,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1996년에의 수준으로 회복되지는 않아 경제위기 이전에 비해 극화현상이 심하다고 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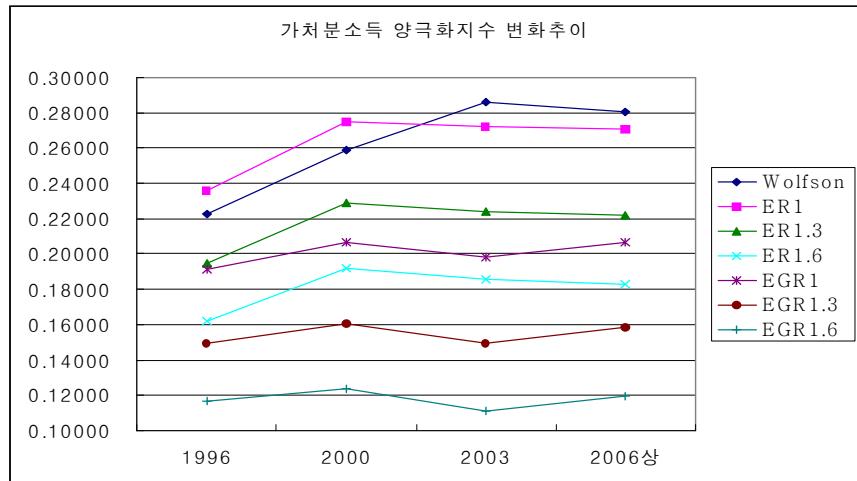
〈표 5-8〉 가처분소득 양극화지수변화추이

	Wolfson	ER1	ER1.3	ER1.6	EGR1	EGR1.3	EGR1.6
1996	0.22278	0.23608	0.19479	0.16180	0.19105	0.14976	0.11677
2000	0.25888	0.27510	0.22872	0.19197	0.20692	0.16054	0.12379
2003	0.28628	0.27247	0.22418	0.18547	0.19797	0.14968	0.11096
2006상	0.28043	0.27042	0.22187	0.18283	0.20696	0.15841	0.119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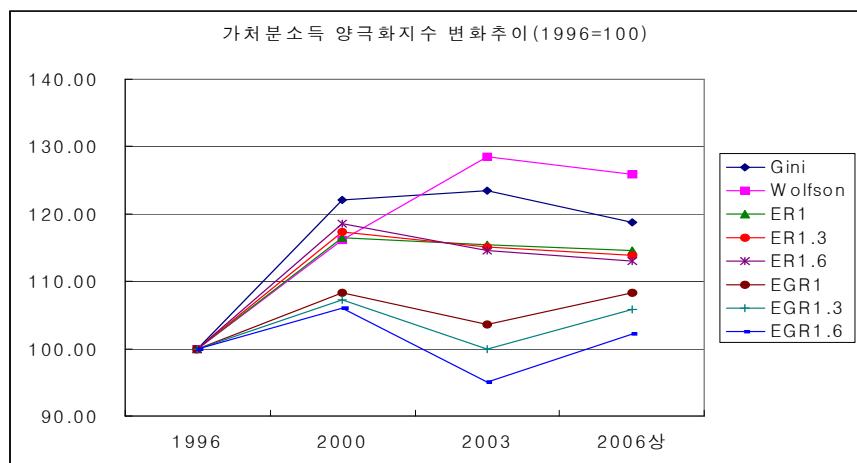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1996, 2000) 및 가계조사(2006상반기)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생활실태조사(2003)자료

주22) 각 양극화지수를 도출하는 데 사용된 관련 통계량은 <부표>로 뒤에 첨부하였다. 이때 물가상승에 따른 각 연도별 소득금액의 변화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중위값의 크기는 평균으로 나눈 비율로 나타냈다.

[그림 5-9] 가치분소득 양극화지수 변화추이



[그림 5-10] 가치분소득 양극화지수 변화추이(1996=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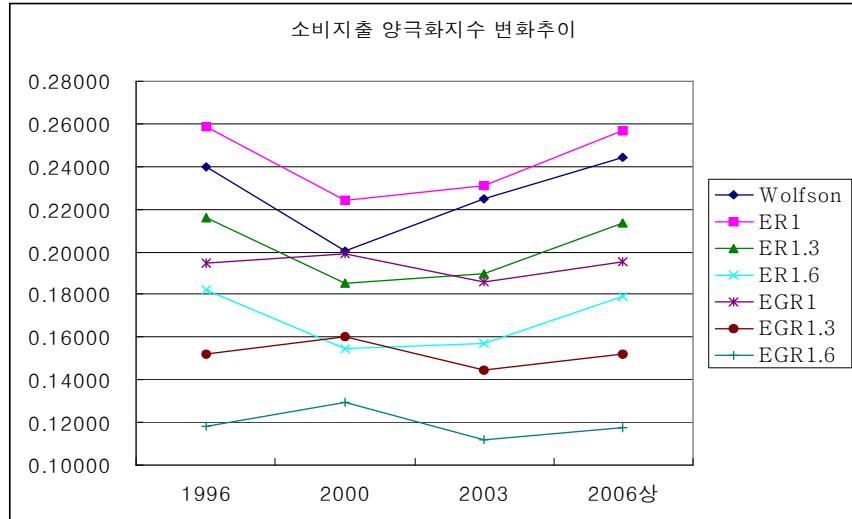
소비지출의 ER 및 EGR 지수 변화 양상은 다소 복잡한 모습을 띠고 있다. 전체적으로 '96~'00기간에는 다른 지표들은 개선되었으나 EGR지표는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바로 다음 기간에는 이렇게 나뉜 두 집단의 지수가 이전 기간과 정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 양상을 보였다. 최근 3년간의 경향에서는 모든 지표들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96년과 '06년 상반기를 비교할 때에는 전체적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요컨대, 소비지출의 양극화지수는 경제위기 시 개선되었다가 최근에 이르러 다시 악화되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한편 1996년을 기준으로 한 각 지표간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지니계수와 올프슨지수, ER지수의 변화방향이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9〉 소비지출 양극화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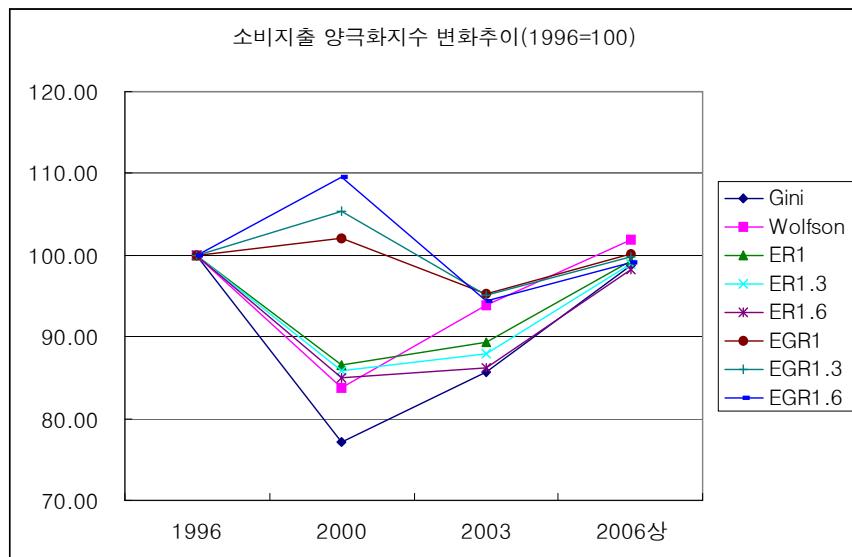
	Wolfson	ER1	ER1.3	ER1.6	EGR1	EGR1.3	EGR1.6
1996	0.23956	0.25871	0.21585	0.18203	0.19496	0.15210	0.11828
2000	0.20058	0.22400	0.18536	0.15458	0.19903	0.16039	0.12961
2003	0.22503	0.23097	0.18986	0.15689	0.18570	0.14460	0.11162
2006상	0.24426	0.25695	0.21345	0.17894	0.19529	0.15179	0.11728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1996, 2000) 및 가계조사(2006상반기)자료.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국민생활실태조사(2003)자료

[그림 5-11] 소비지출 양극화지수 변화추이



[그림 5-12] 소비지출 양극화지수 변화추이(1996=100)



제3절 다극화지수의 변화

제2절에서 분석한 ER과 EGR지수는 전체 집단을 2등분하여 집단내의 동질성과 집단간의 이질성 강화 경향을 나타낸 것이다. 문제는 전체 집단을 몇 등분하는가에 대한 사전적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2등분 하는 것이 자의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에 극화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양극화인가 하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남을 수 있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전체 집단을 3분 및 4분하여 구분된 집단 간에 극화현상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해보기로 한다. 물론 전체 집단을 3, 4분 하는 것도 자의적이다. 그러나 이때의 결과를 2분한 경우의 극화경향과 비교해봄으로써 전체 분포변화의 특징을 좀더 자세히 추정할 수 있다.

집단을 구분하는 경우, 구분기준점이 문제가 된다. 앞의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임의의 구분에 따른 오차를 최소화하는 점은 인접한 구간의 (집단의 인구비율을 가중치로 이용한) 가중평균이 되는 점이다. 두 집단으로 구분하는 경우는 이 구분점이 평균값이 됨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지만, 3개 이상의 집단으로 구분하는 경우 구분점은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식으로는 구할 수 없다. 예를 들어 3개의 집단으로 구분하는 경우 1집단과 2집단을 구분하는 점을 c_1 , 2집단과 3집단을 구분하는 점을 c_2 라고 하면 c_1 과 c_2 는 각각 다음과 같은 세 개의 식으로 표현된다.

$$c_1 = \frac{\pi_1}{\pi_1 + \pi_2} \mu_1 + \frac{\pi_2}{\pi_1 + \pi_2} \mu_2 \quad \text{----- (식 5-1)}$$

$$c_2 = \frac{\pi_2}{\pi_2 + \pi_3} \mu_2 + \frac{\pi_3}{\pi_2 + \pi_3} \mu_3 \quad \text{----- (식 5-2)}$$

$$\pi_1 + \pi_2 + \pi_3 = 1 \quad \text{----- (식 5-3)}$$

여기서 각 π 값은 집단에 속하는 인구비중을, 각 μ 값은 각 집단의 평균값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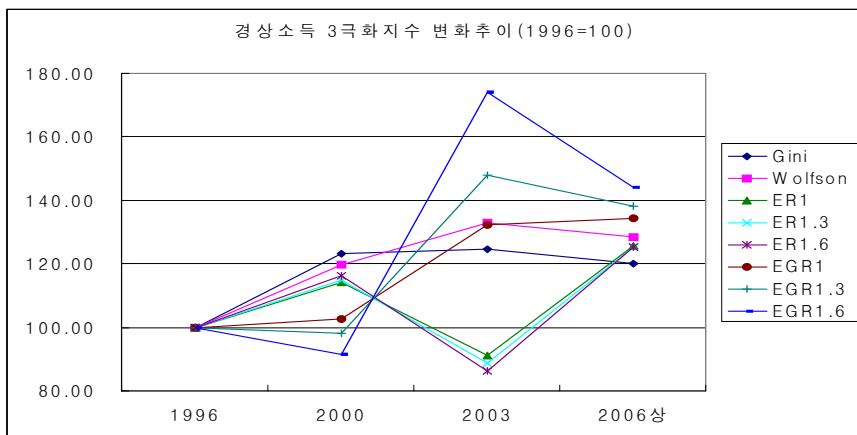
전체 평균으로 표준화한 값을 의미한다. 위 세 식을 이용하여 8개의 변수값을 구해야하므로, 위 방정식체계만으로는 c_1 과 c_2 를 구할 수 없어 Aghevil & Mehran(1981)과 Devies & Shorrocks(1989)의 방법에 따라 집단간 구분점을 구하였다.^{주23)} 그 결과 '96년의 c_1 과 c_2 는 각각 평균의 0.722, 1.232배였다.^{주24)} 3극화의 ER과 EGR지수를 계산한 결과가 아래의 <표 5-10>과 [그림 5-13]이다.

<표 5-10> 경상소득 3극화지수

	ER1	ER1.3	ER1.6	EGR1	EGR1.3	EGR1.6
1996	0.16163	0.11713	0.08530	0.14120	0.09670	0.06487
2000	0.18440	0.13465	0.09902	0.14478	0.09503	0.05940
2003	0.14732	0.10392	0.07370	0.18661	0.14320	0.11299
2006상	0.20303	0.14696	0.10684	0.18970	0.13363	0.09351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1996, 2000) 및 가계조사(2006상반기)자료.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국민생활실태조사(2003)자료

[그림 5-13] 경상소득 3극화지수 변화 추이(1996=100)



주23) 구분값의 크기 및 기타 3극화관련 통계량은 부표 참조.

주24) 자세한 내용은 <부표 8> 참조.

경상소득의 경우 3극화 ER지수는 분석의 대상이 되는 기간동안 증가-감소-증가경향을 보여 '96년에 비해 높은 값을 보여주었다. 반면 EGR의 경우 패러미터의 값이 1인 경우는 계속 증가하는 경향을, 1.3과 1.6인 경우 감소-증가-감소를 차례로 반복하는 감소경향을 보였다.^{주25)} 모든 경우 '96년에 비해 '06년 상반기의 값이 높아 전체적으로는 이 기간동안 3극화 현상도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으로 구분한 ER지수와 세 집단으로 구분한 ER지수를 비교해보면 '96-'00년 기간동안은 양극화와 3극화가 동시에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극화 지수의 해석상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오류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양극화지수의 증가 자체가 곧바로 소득분포가 낙타등 모양의 두개 봉우리(twin peak) 형상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상소득에서 나타난 3극화의 경향은 가처분소득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1996년의 수준을 100으로 놓고 비교한 [그림 5-14]에서도 경상소득과 가처분소득 모두 '96년에 비해 '06년 상반기의 3극화가 심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연도별 변화추이를 면 ER과 EGR 모두 매퍼미터값과 무관하게 경상소득의 3극화지수와 가처분소득의 3극화지수 값이 유사하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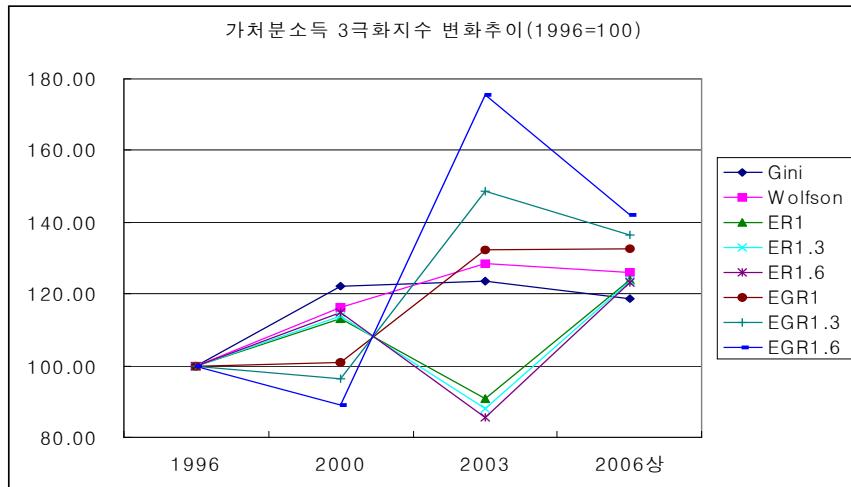
〈표 5-11〉 가처분소득 3극화지수

	ER1	ER1.3	ER1.6	EGR1	EGR1.3	EGR1.6
1996	0.16150	0.11711	0.08536	0.13994	0.09554	0.06379
2000	0.18256	0.13332	0.09805	0.14141	0.09218	0.05691
2003	0.14643	0.10320	0.07311	0.18524	0.14200	0.11191
2006상	0.20031	0.14482	0.10512	0.18570	0.13020	0.09050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1996, 2000) 및 가계조사(2006상반기)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생활실태조사(2003)자료

주25) 일반적으로 EGR이 ER에 비해 값이 작게 나타나야 하지만, 2003년의 경우 EGR이 ER에 비해 크게 나타난다. 이는 2003년의 경우 로렌츠곡선이 강오목한 형태가 아님을 의미한다.

[그림 5-14] 가치분소득 3극화지수 변화추이(1996=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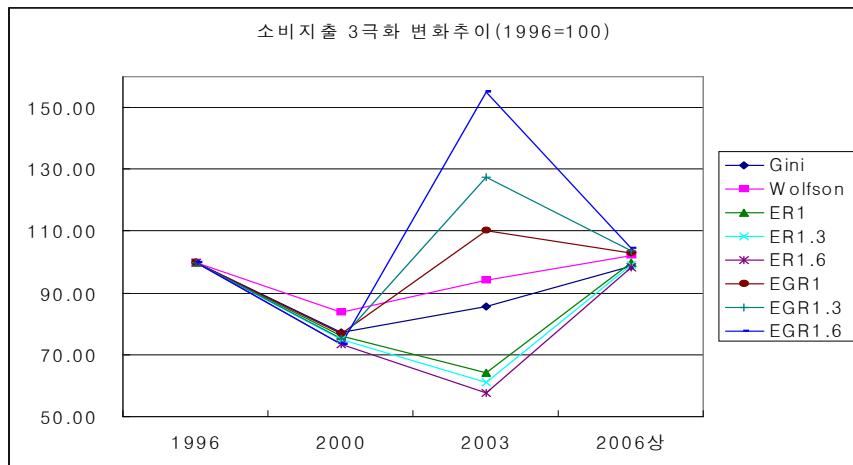
소비지출의 3극화 추이를 보면, '96~'00년에는 모든 지수들이 감소하였다. 이후 '00~'03년간에는 ER지수는 감소, 다른 지수들은 증가를, 이후 기간에는 그 반대 양상을 띠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1996년 수준에 비해 '06년 상반기의 3극화 지수는 증가하여, 3개의 집단으로 본 소비지출의 극화 경향을 강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표 5-12〉 소비지출 3극화지수

	ER1	ER1.3	ER1.6	EGR1	EGR1.3	EGR1.6
1996	0.18327	0.13523	0.10077	0.15330	0.10526	0.07080
2000	0.13964	0.10133	0.07392	0.11776	0.07945	0.05203
2003	0.11740	0.08242	0.05810	0.16917	0.13419	0.10987
2006상	0.18267	0.13391	0.09898	0.15774	0.10898	0.07404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1996, 2000) 및 가계조사(2006상반기)자료.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국민생활실태조사(2003)자료

[그림 5-15] 소비지출 3극화지수 변화추이(1996=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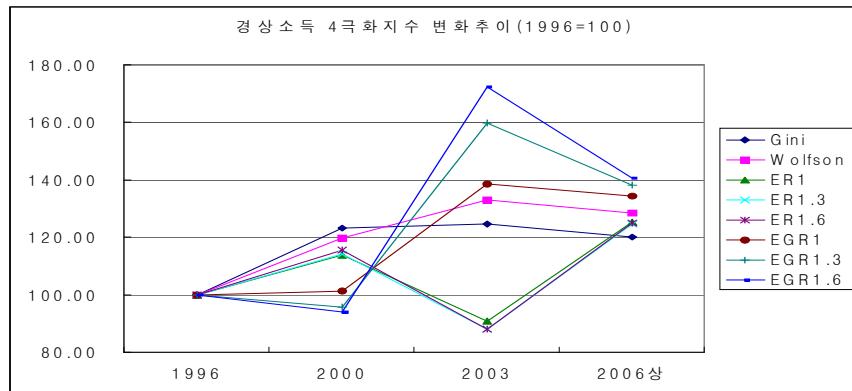
아래는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분포를 4개의 집단으로 구분한 뒤 집단간 극화 현상의 변화추이를 분석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모든 지표에서 '96년에 비해 '06년까지 극화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극화지수와 3극화지수의 값과 비교해보면, 구간의 수(극의 수)가 늘어날수록 지수의 절대적 크기는 작아지고 있다. 특이한 점은 4극화지수의 변화양상이 양극화지수보다는 3극화지수에 가깝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표 5-13〉 경상소득 4극화지수

	ER1	ER1.3	ER1.6	EGR1	EGR1.3	EGR1.6
1996	0.12960	0.08675	0.07439	0.12738	0.08453	0.07217
2000	0.14736	0.09903	0.08603	0.12916	0.08082	0.06783
2003	0.11756	0.07628	0.06543	0.17644	0.13516	0.12431
2006상	0.16231	0.10815	0.09283	0.17106	0.11690	0.10158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1996, 2000) 및 가계조사(2006상반기)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생활실태조사(2003)자료

[그림 5-16] 경상소득 4극화지수(1996=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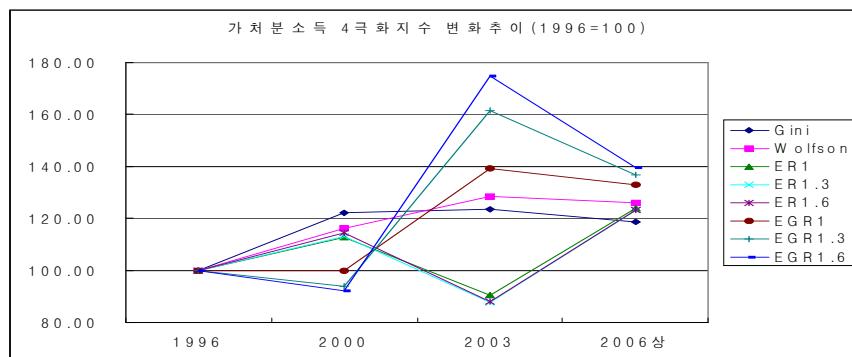


〈표 5-14〉 가처분소득 4극화지수

	ER1	ER1.3	ER1.6	EGR1	EGR1.3	EGR1.6
1996	0.12954	0.08670	0.07425	0.12619	0.08335	0.07091
2000	0.14597	0.09810	0.08504	0.12618	0.07832	0.06525
2003	0.11717	0.07609	0.06542	0.17561	0.13453	0.12386
2006상	0.16033	0.10676	0.09156	0.16772	0.11414	0.09894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1996, 2000) 및 가계조사(2006상반기)자료.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국민생활실태조사(2003)자료

[그림 5-17] 가처분소득 4극화지수 변화추이(1996=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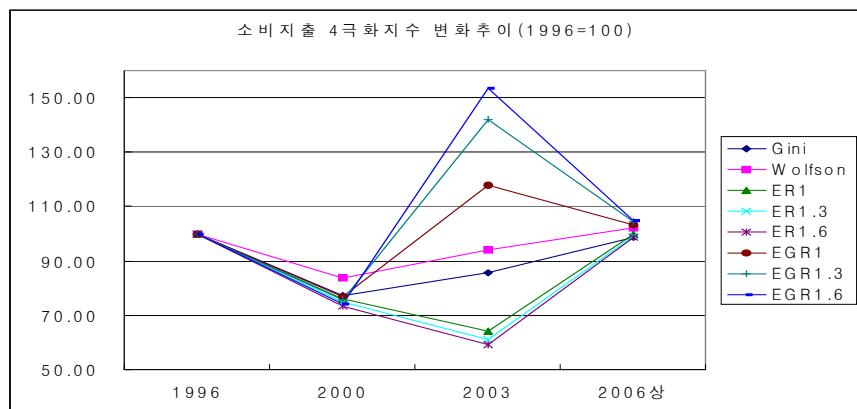


〈표 5-15〉 소비지출 4극화지수

	ER1	ER1.3	ER1.6	EGR1	EGR1.3	EGR1.6
1996	0.14652	0.09959	0.08698	0.13735	0.09042	0.07782
2000	0.11156	0.07447	0.06373	0.10544	0.06836	0.05762
2003	0.09391	0.06067	0.05154	0.16174	0.12850	0.11937
2006상	0.14624	0.09874	0.08583	0.14208	0.09458	0.08168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1996, 2000) 및 가계조사(2006상반기)자료.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국민생활실태조사(2003)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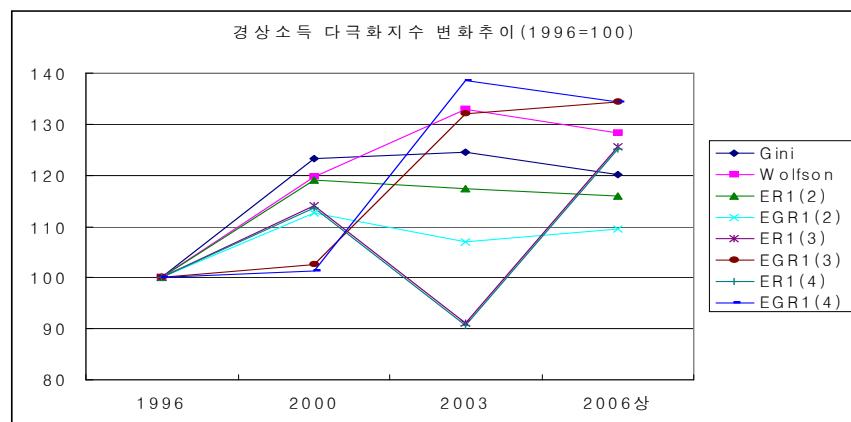
[그림 5-18] 소비지출 4극화지수(1996=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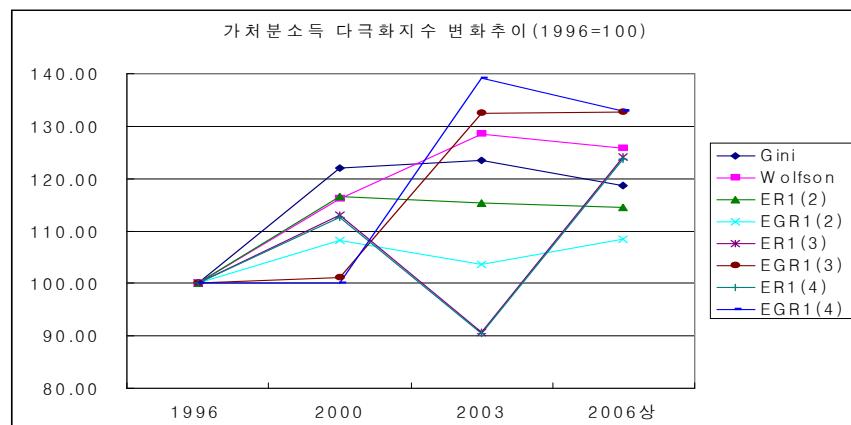
아래의 [그림 5-19]부터 [그림 5-21]까지는 각 변수별로 지니계수, 울프슨지수, 양극화지수, 3극 및 4극화지수의 변화를 비교한 것이다. 1996년을 100으로 보았을 때, 지니계수의 변화는 울프슨 지수의 변화와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패러미터의 값을 1로 한 3극화 ER지수와 4극화 ER지수의 변화양상이 매우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난다. 이는 소득구간을 3개의 집단에서 4개의 집단으로 구분함에 따라 극화에 대한 추가적 설명력이 부가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극화의 진행속도를 보면 양극화에 비해 3, 4극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는 모습이다. 즉, 양극화보다는 다극화가 더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EGR 3

극화지수의 경우 지속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의 소득분포는 평균값을 기준으로 구분된 양 집단으로 균집화되고 있다기보다는 상·중·하 계층으로 균집화되고 있음을 추정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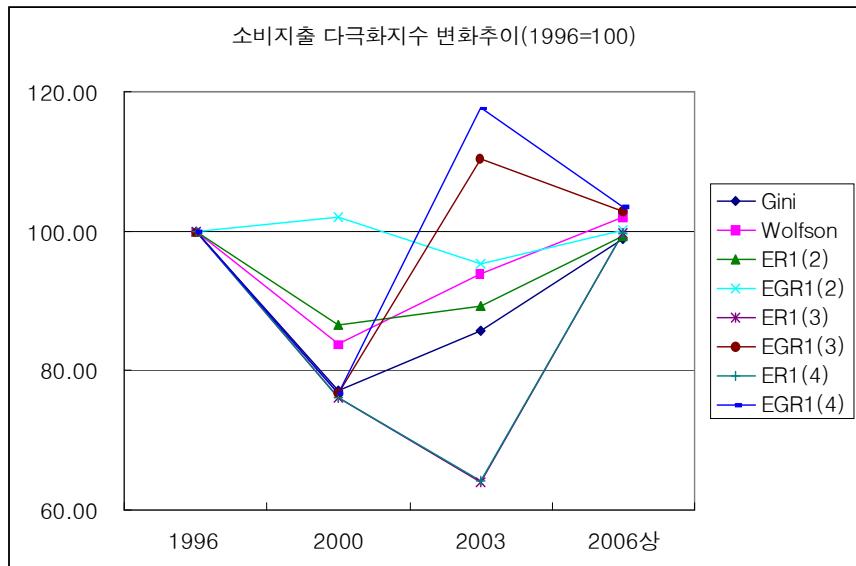
[그림 5-19] 경상소득다극화지수의 변화 비교



[그림 5-20] 가치분소득다극화지수의 변화 비교



[그림 5-21] 소비지출 다극화지수의 변화 비교



소비지출의 경우 극화경향이 완화되다가 최근 들어 강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96년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소득의 극화에 비해 진행정도가 심하지 않다. 또한 소득의 경우와 달리 양극화와 다극화의 진행속도 차이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제6장 계층간 이동가능성의 변화

제1절 계층간 이동가능성 변화양상

앞장에서는 계층간 구성비율로 본 중간층의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올프슨 지수를 통해서도 중간층이 얇아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양극화지수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계층간 군집화 경향(특히 3, 45개의 계층)이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는 본질적으로 비교정태분석을 통해 얻은 결론이다. 중간층의 상대적 규모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간층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어느 계층으로 이동했는지, 중간층에 속한 사람들이 이전에는 어떤 계층에 속해있던 사람인지 확인할 수 없다. 군집화가 계층간 이동가능성의 감소를 의미하는지도 불확실하다. 물론 앞장의 분석이 전체 소득분포의 변화를 파악하는 데 의미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양극화를 논의할 때 있어서 검토해보아야 할 중요한 측면 가운데 하나는 소득의 이동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는지 여부이다.

이를 위해서는 앞장까지의 분석에 사용된 자료를 이용할 수 없다. 개별 가구나 개인의 계층이동변화를 추적할 수 있도록 표본가구와 개인의 ID가 부여된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계층간 이동을 추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자료의 한계로 인해, 계층간 이동가능성을 분석하는 이 절에서는 다른 자료를 사용하기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03년부터 '06년 상반기까지 통계청의 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한다. '06년 상반기자료의 경우, 앞장까지 이용한 자료와 같지만 '03~'05년간 자료에 1인가구가 제외된 점을 감안하여 '06년 가구에서 1인가구를 제외하고 분석했다는 점이 앞장까지의 분석과 차이가 있다. 이러한 자료의 한계상 본 장의 연구결과를 앞장까지의 분석과 연계시킬 수는 없다. 시기적으로도 본장의 연구는 '03~'06년까지의 기간에만 해당되며 '03년의 자료도 앞장까지 분석한 자료와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장의 연구결과는 전체 연구의 결론을 내리는

데 있어 매우 제한적 역할밖에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비교적 최근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연도별 계층간 이동비율이 어떻게 변하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인접한 2개연도씩 폐널화된 자료를 구축하였다. 그 결과 '03~'04년간에는 5039가구가, '04~'05년간에는 3082가구가, '05~'06년 상반기에는 3048가구가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

아래의 <표 6-1>부터 <표 6-3>까지는 각 연도별로 계층간 이동상황을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보여주고 있다. 계층구분의 기준은 앞의 5장과 동일하다.

먼저 계층상승비율을 보면 '03~'04년간 전체의 14.3%가 계층 상승이동을 하였고, '04~'05년간에는 12.7%가, '05~'06년 상반기 간에는 16.8%가 상향이동을 하였다. 전체적인 상향이동은 감소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계층하락가구의 비율은 14.2%, 13.3%, 9.7%로 점차로 낮아지고 있다.

계층별 상향이동 확률도 전체의 확률변화와 동일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중하층이 계층과 하락 모든 면에서 활발한 이동을 보여주고 있다.

<표 6-1> 2003~2004년 경상소득 계층이동

연도 백분율 행 백분율 칼럼 백분율	빈곤층	중하층	중간층	상류층	계	계층상승비율		계층하락비율	
						계층내	전체내	계층내	전체내
빈곤층	8.22	2.36	1.21	0.08	11.87	30.77	3.65	-	-
	69.23	19.9	10.2	0.67					
	64.49	18.83	2.38	0.33					
중하층	2.96	5.38	4.49	0.1	12.92	35.49	4.59	22.89	2.96
	22.89	41.63	34.72	0.77					
	23.21	42.88	8.8	0.42					
중간층	1.49	4.64	40.42	6.09	52.65	11.57	6.09	11.65	6.13
	2.83	8.82	76.78	11.57					
	11.68	37.03	79.35	25.63					
상류층	0.08	0.16	4.82	17.5	22.56	-	-	22.42	5.06
	0.35	0.7	21.37	77.57					
	0.62	1.27	9.47	73.62					
계	12.74	12.54	50.94	23.77	100	평균	합계	평균	합계
						25.943	14.33	18.987	14.15

자료: 통계청 가계조사 연결자료

〈표 6-2〉 2004~2005 경상소득기준 계층이동

빈도 백분율 행 백분율 칼럼 백분율	빈곤층	중하층	중간층	상류층	계	계층상승비율		계층하락비율	
						계층내	전체내	계층내	전체내
빈곤층	8.89	2.34	1.42	0.11	12.76	30.3	3.87	-	-
	69.69	18.35	11.13	0.82					
	65.89	19.47	2.81	0.44					
중하층	2.84	5.44	4.08	0.08	12.44	33.4	4.16	22.83	2.84
	22.83	43.76	32.77	0.63					
	21.05	45.3	8.07	0.33					
중간층	1.71	4.16	40.61	4.71	51.18	9.2	4.71	11.46	5.87
	3.34	8.12	79.34	9.2					
	12.67	34.57	80.37	19.65					
상류층	0.05	0.08	4.42	19.07	23.62	-	-	19.26	4.55
	0.22	0.33	18.71	80.73					
	0.39	0.66	8.75	79.58					
계	13.49	12.02	50.53	23.96	100	평균	합계	평균	합계
						24.3	12.74	17.85	13.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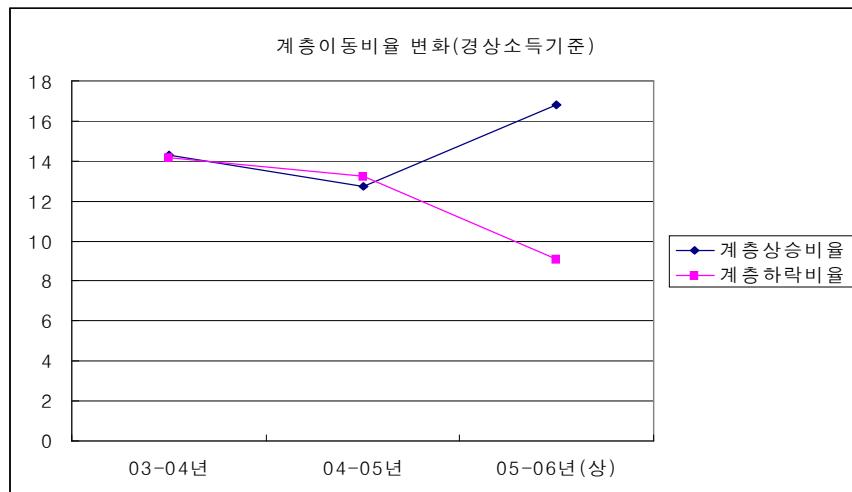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가계조사 연결자료

〈표 6-3〉 2005~2006 상반기 경상소득 기준 계층이동

백분율 행 백분율 칼럼 백분율	빈곤층	중하층	중간층	상류층	계	계층상승비율		계층하락비율	
						계층내	전체내	계층내	전체내
빈곤층	8.5	3.22	1.28	0.1	13.09	35.08	4.6	-	-
	64.91	24.56	9.77	0.75					
	69.07	29.17	2.61	0.36					
중하층	2.33	4.99	4.99	0.1	12.4	41.00	5.09	18.78	2.33
	18.78	40.21	40.21	0.79					
	18.93	45.24	10.16	0.36					
중간층	1.48	2.76	40.39	7.12	51.74	13.76	7.12	8.18	4.24
	2.85	5.33	78.06	13.76					
	12	25	82.29	25.8					
상류층	0	0.07	2.43	20.28	22.77	-	-	10.95	2.5
	0	0.29	10.66	89.05					
	0	0.6	4.95	73.48					
계	12.3	11.02	49.08	27.59	100	평균	합계	평균	합계
						29.947	16.81	8.9867	9.07

자료: 통계청 가계조사 연결자료

[그림 6-1] 경상소득 계층이동비율 변화



위의 [그림 6-1]에서 보듯이 계층하락경험가구의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계층 상승경험가구의 비율은 증가하는, 바람직한 양상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림 6-2]의 가처분소득 기준 계층이동비율 변화를 보면 양상이 정 반대로 나타난다.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 중하층과 빈곤층의 계층상승비율은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비해 높다. 중하층의 계층하락비율도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낮다. 반면 중간층과 상류층의 계층하락비율은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가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높다. 이는 계층이동의 측면에서 직접세와 사회보험료의 재분배효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6-4〉 2003~2004년 가처분소득계층간 이동비율 변화

백분율 행 백분율 칼럼 백분율	빈곤층	중하층	중간층	상류층	계	계층상승비율		계층하락비율	
						계층내	전체내	계층내	전체내
빈곤층	8	2.22	1.29	0.12	11.63	31.22	3.63	-	-
	68.77	19.11	11.09	1.02				-	-
	64.07	17.69	2.47	0.52				-	-
중하층	2.72	5.36	4.56	0.1	12.74	36.61	4.66	21.34	2.72
	21.34	42.06	35.83	0.78					
	21.78	42.65	8.75	0.44					
중간층	1.71	4.82	41.16	6.37	54.06	11.78	6.37	12.08	6.53
	3.16	8.92	76.14	11.78					
	13.67	38.39	78.89	27.96					
상류층	0.06	0.16	5.16	16.19	21.57	-	-	24.94	5.38
	0.28	0.74	23.92	75.07					
	0.48	1.26	9.89	71.08					
계	12.48	12.56	52.17	22.78	100	평균	합계	평균	합계
						26.53	14.66	19.45	14.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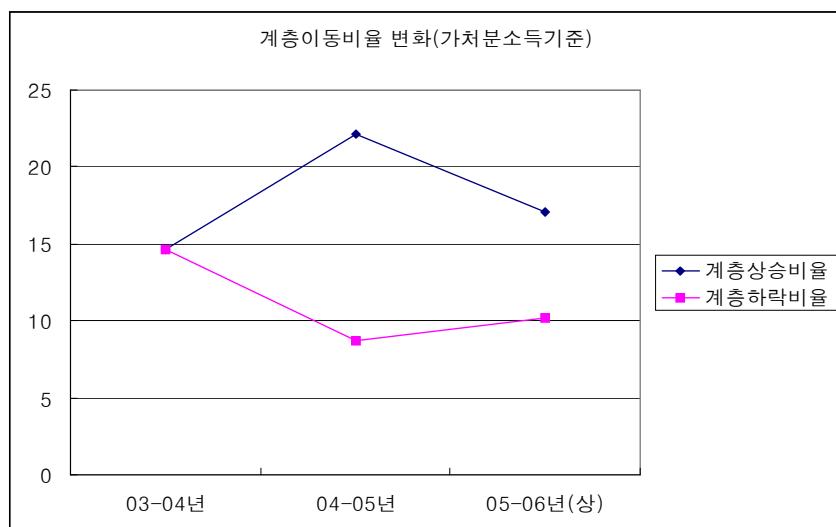
〈표 6-5〉 2004~2005년 가처분소득계층간 이동비율 변화

백분율 행 백분율 칼럼 백분율	빈곤층	중하층	중간층	상류층	계	계층상승비율		계층하락비율	
						계층내	전체내	계층내	전체내
빈곤층	8.5	2.29	1.42	0.13	12.34	31.13	12.21	-	-
	68.87	18.55	11.51	1.07				-	-
	64.47	19.33	2.72	0.58				-	-
중하층	2.68	5.31	4.73	0.08	12.81	37.58	4.81	20.94	2.68
	20.94	41.48	36.96	0.62					
	20.36	44.89	9.07	0.35					
중간층	1.92	4.13	41.19	5.08	52.31	9.7	5.08	11.56	6.05
	3.67	7.89	78.73	9.7					
	14.57	34.89	78.89	22.29					
상류층	0.08	0.11	4.87	17.49	22.54	-	-	22.41	5.06
	0.35	0.47	21.59	77.6					
	0.6	0.89	9.32	76.79					
계	13.18	11.84	52.21	22.78	100	평균	합계	평균	합계
						26.14	22.10	18.30	8.73

〈표 6-6〉 2005~2006년 가치분소득계층간 이동비율 변화

백분율 행 백분율 칼럼 백분율	빈곤층	중하층	중간층	상류층	계	계층상승비율		계층하락비율	
						계층내	전체내	계층내	전체내
빈곤층	7.68	3.31	1.51	0.07	12.57	38.9	4.89	-	-
	61.1	26.37	12.01	0.52				-	-
	65.73	29.11	2.99	0.25				-	-
중하층	2.53	5.05	4.76	0.1	12.43	39.05	4.86	20.32	2.53
	20.32	40.63	38.26	0.79					
	21.63	44.38	9.41	0.37					
중간층	1.48	2.95	41.17	7.35	52.95	13.88	7.35	8.37	4.43
	2.79	5.58	77.76	13.88					
	12.64	25.94	81.44	27.86					
상류층	0	0.07	3.12	18.86	22.05	-	-	14.44	3.19
	0	0.3	14.14	85.57					
	0	0.58	6.16	71.52					
계	11.68	11.38	50.56	26.38	100	평균	합계	평균	합계
						30.61	17.10	14.38	10.15

[그림 6-2] 가치분소득 계층이동비율 변화



<표 6-7>에서 <표 6-9>는 소비지출을 기준으로 구분한 계층의 이동양상을 보여준다. 경상소득이나 가처분소득의 경우에 비해 소비지출의 계층이동 경험비율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중하층과 중하층의 계층하락비율이 소득의 경우보다 크게 낮다. 또한, 빈곤층과 중하층의 계층상승비율은 소득의 경우보다 높아 상대적으로 계층이동이 바람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6-7〉 2003~2004년 소비지출 기준 계층이동

백분율 행 백분율 칼럼 백분율	빈곤층	중하층	중간층	상류층	계	계층상승비율		계층하락비율	
						계층내	전체내	계층내	전체내
빈곤층	2.48	1.13	0.36	0.06	4.03	38.43	1.55	-	-
	61.58	28.08	8.87	1.48					
	57.08	11.49	0.59	0.23					
중하층	1.39	4.37	3.73	0.06	9.55	39.71	3.79	14.55	1.39
	14.55	45.74	39.09	0.62					
	31.96	44.35	6.2	0.23					
중간층	0.48	4.27	49.28	7.96	61.98	12.84	7.96	7.65	4.75
	0.77	6.88	79.51	12.84					
	10.96	43.35	81.84	31.09					
상류층	0	0.08	6.85	17.52	24.45	-	-	28.32	6.93
	0	0.32	28	71.67					
	0	0.81	11.37	68.45					
계	4.35	9.84	60.21	25.6	100	평균	합계	평균	합계
						30.33	13.30	16.84	13.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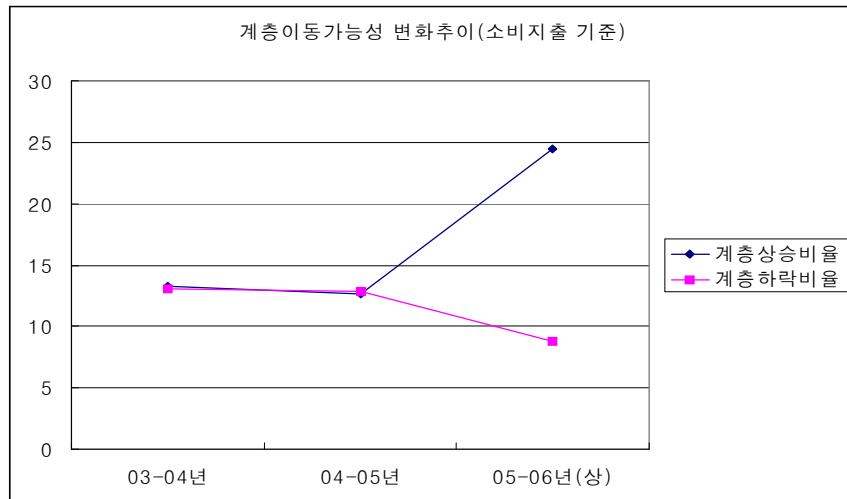
〈표 6-8〉 2004~2005년 소비지출 기준 계층이동

백분율 행 백분율 칼럼 백분율	빈곤층	중하층	중간층	상류층	계	계층상승비율		계층하락비율	
						계층내	전체내	계층내	전체내
빈곤층	2.89	0.97	0.47	0.08	4.42	34.52	1.52	-	-
	65.48	22.02	10.71	1.79					
	56.41	9.76	0.82	0.29					
중하층	1.58	4.47	3.52	0.11	9.68	37.5	3.63	16.3	1.58
	16.3	46.2	36.41	1.09					
	30.77	44.85	6.14	0.38					
중간층	0.66	4.39	47.34	7.55	59.94	12.59	7.55	8.43	5.05
	1.1	7.33	78.98	12.59					
	12.82	44.06	82.49	27.44					
상류층	0	0.13	6.05	19.78	25.96	-	-	23.81	6.18
	0	0.51	23.3	76.19					
	0	1.32	10.54	71.89					
계	5.13	9.97	57.39	27.51	100	평균 28.20	합계 12.7	평균 16.18	합계 12.81

〈표 6-9〉 2005~2006년 소비지출 기준 계층이동

백분율 행 백분율 칼럼 백분율	빈곤층	중하층	중간층	상류층	계	계층상승비율		계층하락비율	
						계층내	전체내	계층내	전체내
1	3.25	1.12	0.52	0	4.89	33.56	4.89	0	0
	66.44	22.82	10.74	0					
	57.89	15.25	1.04	0					
2	1.44	3.22	5.38	0.2	10.24	54.48	5.58	14.1	1.44
	14.1	31.41	52.56	1.92					
	25.73	43.95	10.62	0.54					
3	0.79	2.85	41.31	14.04	58.99	23.8	14.04	6.17	3.64
	1.33	4.84	70.02	23.8					
	14.04	39.01	81.54	38.56					
4	0.13	0.13	3.44	22.18	25.89	0	0	14.33	3.7
	0.51	0.51	13.31	85.68					
	2.34	1.79	6.8	60.9					
계	5.61	7.32	50.66	36.42	100	평균 37.28	합계 24.51	평균 11.53	합계 8.78

[그림 6-3] 소비지출 계층이동비율 변화



제2절 계층간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빈곤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 절에서는 계층간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계층간 이동 경험은 '03년부터 '06년 상반기까지 전 기간을 대상으로 패널화된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이 결과 1778가구가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이 절의 결과에 대해서는 패널화의 과정에서 저소득층의 탈락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아래의 <표 6-10>은 4년간 한번이라도 빈곤을 경험할 확률에 대한 로짓분석의 결과이다. 모형 I은 가구원수, 취업가구원수의 비율, 여성가구주 여부, 배우자 유무 여부, 연령, 학력 등을 변수로, 모형 II는 여기에 가구주의 산업군을 더미변수로 추가하고, 다시 모형 III은 여기에 다시 직업군을 더미로 추가한 것

이다. 산업의 경우 제조업이, 직업의 경우 단순노무직이 기준집단이다.

모형 I에 따르면 분석결과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빈곤을 경험할 확률이 감소하며, 특히 취업자의 비율 증가는 빈곤경험확률을 빠르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가구는 남성가구에 비해, 배우자가 없는 가구는 배우자가 있는 가구에 비해 빈곤경험확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있다. 연령효과를 비선형을 추정한 결과, 가구주의 연령이 작거나 또는 고령층으로 갈수록 빈곤경험 확률은 높아졌고,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빈곤경험확률은 감소하였다. 여성과 연령이 빈곤경험에 미치는 효과는 빈곤층에서 여성 및 노인가구주의 비율이 높다는 기존 연구의 정태적 분석결과와도 (유경준·김대일 2002)와도 대체로 일치한다.

가구주의 종사 산업을 고려하여 분석한 모형II에서도, 가구원수, 취업자 비율, 성별, 배우자 유무, 연령, 교육수준이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제조업 종사자와 비교하여 건설업과 도소매·숙박업, 민간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종사가구의 빈곤경험확률이 높았고, 반대로 공공서비스업 종사가구의 빈곤경험확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종사산업뿐만 아니라 직종까지를 고려한 모형III에서 가구주성별이 빈곤경험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종사자의 비율이 높은 직종과 여성종사자의 비율이 높은 직종이 서로 구분됨에 따른 현상으로 추정된다. 직종별로는 전문관리직과 사무직 종사자의 빈곤경험확률이 단순노무직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반대로 서비스 종사자의 빈곤경험확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종변수가 추가됨에 따라 도소매·숙박업과 민간서비스업 등 산업변수의 설명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6-10〉 빈곤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수	모형 I		모형 II		모형 III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상수	5.9688	1.2018***	5.6281	1.2252***	5.2312	1.2439***
가구원수	-0.1556	0.0695**	-0.1382	0.0712*	-0.1424	0.0721**
취업자비율	-2.3107	0.2633***	-2.265	0.3369***	-2.3472	0.3448***
여성	0.4662	0.163***	0.3652	0.1763***	0.2322	0.1864
무배우자	0.3288	0.197*	0.3358	0.1999*	0.3442	0.2012*
연령	-0.2046	0.0444***	-0.1986	0.0452***	-0.1947	0.0455***
연령제곱	0.00217	0.000422***	0.00207	0.000429***	0.00202	0.000431* **
교육수준	-0.4767	0.0607***	-0.4537	0.0621***	-0.3384	0.0678***
농어광업			0.5574	0.7078	0.7551	0.8438
건설업			0.5005	0.2126**	0.7821	0.3093**
도소매·숙박업			0.4506	0.1889**	0.3937	0.3051
운수·통신업			-0.0989	0.2667	-0.013	0.3555
금융·보험업			-0.9678	0.6701	-0.6594	0.7107
부동산·임대업			0.6395	0.3607*	0.7192	0.4204*
공공서비스업			-1.3615	0.4891***	-1.4662	0.5145***
민간서비스업			0.3608	0.1891***	0.4582	0.2746*
기타			0.3334	0.2319	-0.7539	1.5875
전문관리직					-1.0845	0.42***
기술준전문직					-0.3119	0.3566
사무종사자					-0.8319	0.3972**
서비스종사자					0.551	0.3116*
판매종사자					0.1392	0.3491
농림어업종사자					-0.0008	1.264
기능원					-0.2407	0.3135
장치기계종사자					0.0578	0.3131
기타					1.222	1.5961
-2LL	1533.071		1494.18		1466.53	

주: 산업은 제조업, 직업은 단순노무직이 준거집단

자료: 통계청 가계조사연결자료('03~'06상반기)

2. 계층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다음의 <표 6-11>과 <표 6-12>는 '03년부터 '06년 상반기까지 계층이동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보여주고 있다. 계층구분은 앞과 동일한 기준을 이용했으며, 경상소득을 이용하였다. '03~'04년간의 계층이동과 '04~'05년간의 계층이동, '05~'06상반기간의 계층이동을 각각 독립적인 사례로 간주하여 계층상승과 하락,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항로짓(multinomial logit)분석을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계층을 유지하는 것을 기준이 되는 범주로 하여 계층하락 경험가구와 계층상승경험가구를 각각 비교하였다.

분석은 모두 세 가지 모형을 이용하였는데, 모형Ⅰ은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과 관련된 변수이다. 위의 빈곤경험확률에 대한 분석에서와 달리 배우자유무 더미변수를 제외하였으며, 학력변수를 연속변수로 간주하지 않고 초졸 이상 중졸 이하의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하여 집단간 비교를 하였다. 모형Ⅱ에는 가구주의 종사산업 더미를 추가하였고, 모형Ⅲ에는 가구주의 직종 더미를 추가하였다.

먼저 계층하락 가구를 계층을 유지한 가구들과 비교한 결과, 모형Ⅰ에 따르면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취업가구원의 비율이 높을수록 계층하락을 경험할 확률이 낮았다. 앞서 빈곤경험확률에 대한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취업가구원수가 계층하락확률을 낮추는 효과 또한 매우 크게 나타났다. 연령효과를 보면 고연령층이거나 저연령층에서 계층하락 경험확률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인다. 학력 면에서는 중졸 가구주에 비해 거의 모든 학력이 계층유지보다는 계층하락을 경험할 확률이 높았는데, 학력이 높을수록 확률은 떨어져서 대학이상의 학력을 가진 가구의 경우 계층하락확률은 기준집단의 약 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종사산업을 추가한 모형Ⅱ에서도 이러한 가구특성의 영향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산업적 특성을 보면 준거집단인 제조업종사가구에 비해 건설업, 도소매·숙박업, 부동산·임대업, 민간서비스업이 계층하락확률이 높게 나타났고, 반면 공공서비스업이 계층하락확률이 낮게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임대업과 건설업은 제조업에 비해 계층하락확률이 두 배 이상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6-11〉 계층이동요인에 대한 다항로짓추정결과(계층하락: 유지)

	모형 I	모형 II	모형 III
	계수추정치(표준오차)	계수추정치(표준오차)	계수추정치(표준오차)
상수	2.1469 (.5271)***	1.6331 (.5387)***	1.7313 (.5514)***
가구원수	-0.0888 (.0351)**	-0.0895 (.0351)**	-0.0937 (.0352)***
취업가구원수비율	-1.5611 (.172)***	-1.5981 (.1758)***	-1.6048 (.1765)***
여성	0.3961 (.0805)***	0.3817 (.0857)***	0.3345 (.09)***
연령	-0.1149 (.0207)***	-0.106 (.0211)***	-0.1063 (.0213)***
연령제곱	0.0012 (.0002)***	0.0011 (.0002)***	0.0011 (.0002)***
초졸	-0.2271 (.1207)*	-0.2449 (.1211)**	-0.2525 (.1217)**
고졸	-0.3664 (.0949)***	-0.3302 (.0954)***	-0.3276 (.0965)***
전문대	-0.4135 (.1434)***	-0.3685 (.1452)**	-0.3548 (.1504)**
대학이상	-0.7991 (.11)***	-0.7629 (.1132)***	-0.7266 (.128)***
농어광업		0.2603 (.3944)	0.4984 (.418)
건설업		0.7017 (.1089)***	0.6565 (.1149)***
도소매숙박업		0.4604 (.1029)***	0.2863 (.1359)**
운수통신업		0.2484 (.1269)*	0.2887 (.1321)**
금융보험업		0.1235 (.211)	0.035 (.2214)
부동산임대업		0.7813 (.1901)***	0.7111 (.1974)***
공공서비스업		-0.328 (.1842)*	-0.4481 (.1961)**
민간서비스업		0.4242 (.1034)***	0.3616 (.112)***
기타		0.4705 (.1616)***	0.3667 (.5379)
전문관리직			-0.1233 (.1613)
기술준전문직			0.0245 (.1531)
사무종사자			-0.0733 (.1523)
서비스종사자			0.213 (.1432)
판매종사자			0.1634 (.1597)
농림어업종사자			-1.476 (1.0632)
기능원			0.00557 (.1334)
장치기계종사자			-0.1443 (.1409)
기타			0.0568 (.5429)
관측치	10652	10652	10652
-2LL	15995.337	15908.377	15885.133

주: 학력은 중졸, 산업은 제조업, 직업은 단순노무직이 준거집단
 자료: 통계청 가계조사자료('03~'06상반기)

가구주의 종사 직종까지 고려한 모형Ⅲ을 보면 빈곤경험확률을 분석한 경우와는 달리 직종군의 설명력이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난다.

한편 계층상승을 경험한 가구를 계층을 유지한 가구와 비교한 결과를 보이는 것이 아래의 <표 6-12>이다. 모형 I의 분석결과가 보여주는 주요한 특징은 취업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계층상승경험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는 <표 6-11>에서의 취업가구원수비율 효과와 정반대임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여성가구일수록 계층상승확률이 높아진다는 사실이다. <표 6-11>에서 여성변수의 효과에 비해 그 크기는 작지만, 여성은 계층하락요인뿐만 아니라 계층상승 요인으로도 작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여성가구주의 경우 소득의 불안정성이 심하며 그에 따라 계층상승과 하락을 자주 반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양상은 연령효과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된다. 가구주의 연령층이 고령층에 가까워지거나 반대로 20대에 가까워질수록 계층상승확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점 역시 이 연령대의 소득불안정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학력의 경우, <표 6-12>는 <표 6-11>과 달리 유의도가 떨어지는 범주가 존재한다. 고졸과 대학이상의 가구에서 기준집단에 비해 계층상승확률이 떨어지는 것은 이들 집단의 계층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안정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가구주 종사산업의 측면에서 보면 농어업 및 광업 등 1차산업 종사가구의 계층상승확률이 제조업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이 계층하락경우와 다른 점이다. 건설업과 부동산·임대업의 계층상승확률이 제조업에 비해 높은 것도 이들 산업부문 종사자의 소득불안정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가구주의 종사직업을 보면, <표 6-11>과는 달리 유의미한 효과가 발견되는 직종이 있다. 전문 관리직과 기능직의 계층상승확률이 단순노무직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점은 산업의 경우 농어업 종사자들의 계층상승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데 반해 직종면에서 농림어업종사자들의 계층상승확률은 낮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는 준거집단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즉, 산업의 경우 제조업에 비해서는 농림어업의 불안정이 더하지만, 직종면에서는 단순노무직의 소득불안정성이 농림어업에 비해 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표 6-12〉 계층이동요인에 대한 다항로짓추정결과(계층상승: 유지)

	모형 I	모형 II	모형 III
	계수추정치(표준오차)	계수추정치(표준오차)	계수추정치(표준오차)
상수	-0.2577 (.4988)	-0.4685 (.5057)	-0.431 (.5159)
가구원수	0.0486 (.0309)	0.0492 (.031)	0.0487 (.0311)
취업가구원수비율	0.367 (.136)***	0.3908 (.139)***	0.3916 (.1397)***
여성	0.3071 (.0751)***	0.3045 (.0794)***	0.2876 (.0823)***
연령	-0.0666 (.0199)***	-0.0609 (.0201)***	-0.0547 (.0203)***
연령제곱	0.000678 (.0002)***	0.0006 (.0002)***	0.00053 (.0002)**
초졸	0.0224 (.1078)	0.00412 (.1083)	-0.0144 (.1087)
고졸	-0.1968 (.0868)**	-0.1832 (.0872)	-0.166 (.0884)*
전문대	-0.1426 (.1311)	-0.1219 (.132)	-0.0846 (.1366)
대학이상	-0.3877 (.0985)***	-0.3612 (.1012)***	-0.2921 (.1145)**
농어광업		0.6826 (.2812)**	0.8345 (.3111)***
건설업		0.2388 (.0985)**	0.2921 (.1042)***
도소매숙박업		0.1342 (.0889)	0.1087 (.1199)
운수통신업		0.0521 (.1073)	0.00563 (.1116)
금융보험업		-0.0463 (.1836)	-0.0682 (.1921)
부동산임대업		0.3708 (.1724)**	0.325 (.1786)*
공공서비스업		-0.126 (.1388)	-0.1746 (.1502)
민간서비스업		0.072 (.0896)	0.0824 (.0969)
기타		0.3236 (.1523)**	0.1206 (.4362)
전문관리직			-0.3469 (.1418)**
기술준전문직			-0.1796 (.1345)
사무종사자			-0.1882 (.1317)
서비스종사자			-0.1837 (.1318)
판매종사자			-0.143 (.1433)
농림어업종사자			-1.0323 (.589)*
기능원			-0.3045 (.1181)***
장치기계종사자			-0.1295 (.1183)
기타			0.0581 (.4375)
관측치	10652	10652	10652
-2LL	15995.337	15908.377	15885.133

주: 학력은 중졸, 산업은 제조업, 직업은 단순노무직이 준거집단
 자료: 통계청 가계조사자료('03~'06상반기)

제7장 분야별 불평등 실태

제1절 소득분위별 건강·영양상태의 분포

1. 분석대상 자료에 대한 기술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하여 우리 국민의 건강과 영양에 관한 기초통계를 산출하고자 전국의 표본인구를 대상으로 매3년마다 실시되는 조사이다. 조사내용에는 질병의 이환 여부, 활동제한, 사고로 인한 손상, 의료이용, 보건의식행태, 영양상태 등이 포함되는 포괄적인 조사이다.

1998년 조사는 전국의 200개 조사구의 13,523가구의 가구원 전원을 대상으로 1998년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실시되었다. 각 조사구는 약 60가구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건강면접조사는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고, 그 중 3분의 1은 연계조사구역으로 건강면접조사와 보건의식행태조사가 가장 먼저 실시된 뒤 영양조사와 건강검진조사가 각각 실시되었다. 건강면접조사, 성인 보건의식행태조사, 영양조사 중 식품섭취량조사, 검진조사의 완료율은 각각 90.83%, 82.2%, 76.0%, 73.6%였고 표본에 포함된 인구수는 각각 39,060명, 8,823명, 11,525명, 9,771명이었다.

2001년에는 전국의 600개 조사구로 조사구수를 확대한 대신 전체 표본 가구 수는 1998년과 비슷하게 유지하였다. 즉, 각 조사구에서 22가구씩 추출하여 전체 13,200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1998년과 마찬가지로 가구원 전원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고, 조사기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였다. 건강면접조사는 600개 조사구 전체에 시행되었고, 보건의식행태조사, 영양조사, 검진조사는 200개 조사구에서만 시행되었다. 건강면접조사, 보건의식행태조사, 영양조사, 검진조사의 완료율은 각각 92.30%, 88.45%, 80.79%, 77.25%였고, 표본에 포함된 인

구수는 각각 37,769명, 9,170명, 10,051명, 9,770명이었다.

2005년 조사는 600개 조사구에서 13,345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조사되었고, 12,001가구가 조사에 참여하였다. 조사체계는 과거와 동일하여 건강면접조사 및 보건의식행태조사, 영양조사, 검진조사 순으로 실시가 되었다. 각각의 조사 참여자는 33,848명, 8,835명, 9,047명, 7,597명이었다.

모든 연도에서 소득은 월평균 가구소득으로 가구원 중 1인이 응답하였다. 다른 건강과 관련된 변수들은 1998년과 2001년은 가구원 1인이 다른 가구원에 대해서까지 응답하였고, 2005년에는 성인의 경우는 응답자 개인면담을 통해서 조사되었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가구원수의 제곱근을 나눈 것으로 사용하여 생산에 참여하는 가구원수를 조금이라도 보정하도록 하였다.

소득별 건강수준의 차이를 보기위한 건강지표로 건강수준이 양호한 인구의 비율, 연간 침상와병일수, 평균 만성질환 개수, 남성 흡연율, 지난 2년간 건강검진율, 연간 입원율, 지난 2주간 외래이용률 등이 선정되었다. 건강지표의 선정 기준은 첫째, 보건학적으로 의미가 큰 것, 둘째,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2회 이상 측정되어 시계열 비교가 가능한 것 등 두 가지였다.

모든 분석에는 표본가중치가 적용되어 가중합계표본이 사용되었다.

2. 각 연도별 소득분포 관련 기본 분석

<표 7-1>은 국민건강영양조사의 3개 연도별 월평균 가구소득 10분위 분포를 보여준다. 각 분위에 속한 표본수가 균등해야 하지만 어떤 분위는 10%가 넘고 어떤 분위는 10%가 안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가구소득의 분포가 50만 원 단위에 몰려있는 경향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표 7-1〉 각 연도별 월평균 가구소득의 10분위 분포

(단위: %(평균소득: 만원))

연도	n	mean	median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1998	39,060	70.80	60.00	10.10	10.45	9.47	12.65	8.10	8.86	9.85	12.46	8.08	9.97
				(8.31)	(27.3)	(38.32)	(48.14)	(57.25)	(67.3)	(77.31)	(94.46)	(115.67)	(181.06)
2001	35,434	98.72	86.60	10.85	10.82	8.82	12.05	7.86	13.98	8.04	7.48	10.33	9.78
				(21.97)	(45.68)	(58.89)	(72.)	(83.05)	(96.28)	(111.19)	(127.53)	(152.57)	(238.25)
2005	33,738	131.17	115.47	10.24	9.72	10.26	8.08	13.71	8.96	10.09	8.98	9.96	10.00
				(27.73)	(52.97)	(71.9)	(88.7)	(106.54)	(127.3)	(146.85)	(170.34)	(207.95)	(317.99)

3. 소득분위별 건강-영양상태 분포 변화 추이

① 건강수준이 양호한 인구비율(20세 이상)

건강수준이 양호한 인구의 비율은 “당신의 건강이 얼마나 좋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좋음” 혹은 “좋음”이라고 응답한 인구의 비율을 말한다. 이것은 국민이 주관적으로 평가한 본인의 전반적인 건강수준을 의미하는 지표가 된다.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19세 이상을 성인으로 정의하였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건강수준이 양호한 비율을 요약하면 <표 7-2>와 같다. 먼저 남자보다(52.92%) 여자(40.82%)에서 양호한 비율이 낮았는데 이것은 10세 단위 연령의 모든 계층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건강이 양호한 인구의 비율이 낮았고, 이 또한 전 연령계층에서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직업별로는 주부, 무직 등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무직자들과 농어업 종사자의 건강이 양호한 비율이 가장 낮았고, 기능단순노무직 및 판매서비스직이 그 다음으로 높았고, 전문행정관리직과 사무직에서 건강이 양호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7-2〉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건강수준이 양호한 인구의 비율 (2005년): 19세 이상
(단위: %(표준오차))

	전체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전체	46.82	(0.49)	65.84	(0.93)	54.78	(0.82)	47.33	(0.79)	34.82	(0.89)	23.56	(0.89)	15.43	(0.90)
성														
남자	52.92	(0.58)	70.41	(1.24)	58.29	(1.09)	52.10	(0.96)	41.63	(1.26)	32.23	(1.39)	20.96	(1.63)
여자	40.82	(0.56)	60.91	(1.08)	51.07	(1.04)	42.43	(1.04)	28.00	(1.07)	15.97	(1.00)	12.20	(0.97)
교육수준														
초등학교 미만	14.42	(0.84)	22.30*	(15.88)	26.12*	(15.53)	31.59	(6.69)	17.65	(2.65)	14.78	(1.34)	12.28	(1.03)
초등학교	24.99	(0.87)	49.32	(12.84)	46.45	(7.15)	35.14	(2.15)	26.36	(1.49)	20.62	(1.45)	14.92	(1.52)
중학교	34.49	(1.04)	52.70	(6.98)	46.52	(3.69)	36.95	(1.78)	32.13	(1.73)	25.31	(2.25)	22.04	(3.48)
고등학교	53.54	(0.72)	65.45	(1.23)	53.28	(1.15)	48.17	(1.08)	42.17	(1.75)	34.54	(2.53)	25.16	(3.73)
대학교 이상	59.35	(0.73)	67.74	(1.16)	57.18	(1.17)	56.91	(1.36)	48.37	(2.67)	44.85	(3.86)	33.96	(5.32)
직업														
전문행정관리직	60.67	(1.17)	67.93	(2.06)	61.49	(1.92)	57.89	(1.99)	51.35	(3.16)	39.79	(7.28)	55.81	(15.13)
사무직	61.87	(1.14)	66.30	(1.94)	61.52	(1.89)	58.97	(2.20)	49.06	(4.32)	56.34	(12.53)	26.42	(16.79)
판매서비스직	50.77	(1.00)	65.91	(2.34)	52.75	(1.85)	49.42	(1.65)	39.37	(2.11)	33.78	(3.20)	32.08	(7.91)
농어업	27.19	(1.37)	71.21	(11.33)	64.12	(6.17)	37.79	(2.88)	25.79	(2.47)	21.43	(1.88)	15.39	(2.39)
기능단순노무직	45.99	(0.83)	60.74	(2.60)	52.72	(1.64)	46.04	(1.27)	36.34	(1.70)	30.67	(2.33)	24.86	(4.73)
기타 (주부, 무직)	35.95	(0.65)	61.54	(1.62)	49.65	(1.34)	39.78	(1.42)	29.03	(1.40)	19.49	(1.12)	14.27	(0.92)

출처: 송현종·강은정·남정자·김나연·박미형·이난희, 『국민건강영양조사 제3기(2005)-성인 이환』,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표 7-3〉 건강수준이 양호한 인구의 소득분위별 비교: 20세 이상

(단위: %)

년도	n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1998	8,823	42.57	34.67	36.53	36.24	46.05	39.56	43.92	41.72	47.39	42.82	52.00
2001	7,454	44.26	29.73	38.74	37.65	40.83	45.41	47.29	44.07	47.04	54.42	56.31
2005	24,575	46.52	22.08	33.76	40.74	47.01	49.00	51.59	54.03	54.98	56.70	56.18

1998년에 42.57%, 2001년에 44.26% 건강수준이 양호한 인구의 비율이 증가했다가 2005년에 46.52%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1분위에서는 지속적으로 건강수준이 양호한 인구의 비율이 감소하였고 2분위에서도 1998년보다 2005

년에 건강수준이 양호한 인구 비율이 감소하였다.

2005년 자료에 한해서 가구소득을 다시 중위값의 50% 미만인 자와 그 이상인 자로 구분하여 건강수준이 양호한 비율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중위값의 50% 미만 집단의 25.73%만이 건강수준이 양호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나머지 인구 집단의 50.75%가 건강수준이 양호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과 대조적이었다($p<0.0001$).

② 연간 침상와병일수

침상와병이란 신체 및 정신적 질병이나 손상으로 한나절 이상 활동을 하지 못하고 침상에 누워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리하여 인구 1인당 연간 침상와병일수는 국민의 질병이나 손상으로 인한 손실 혹은 부담을 의미한다.

<표 7-4>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남자보다 여자가,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기타 직업 및 농어업 종사자가 다른 직업 종사자에 비해 침상와병일수가 길어서 앞서 건강수준이 양호한 인구의 비율에서 보았던 경향과 동일한 경향이 나타난다 는 것이다.

〈표 7-4〉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연간 침상와병일수 (200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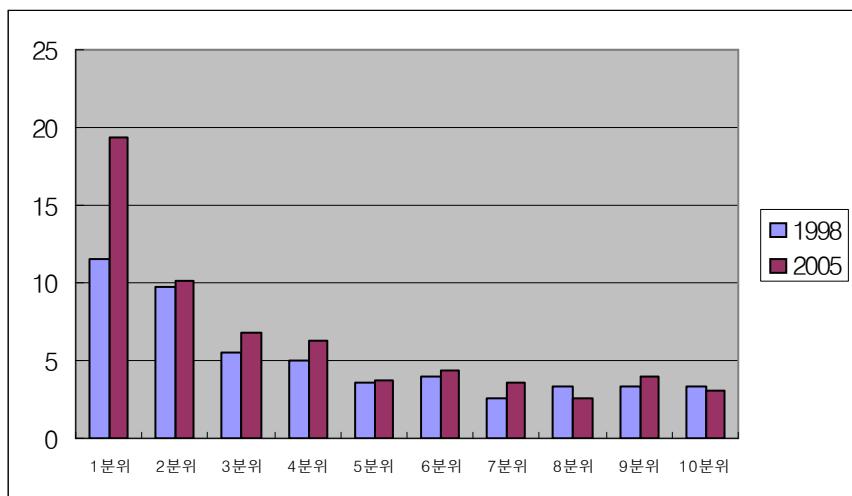
(단위: %(표준오차))

	전체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전체	6.24	(0.23)	3.23	(0.27)	1.42	(0.16)	2.74	(0.29)	3.31	(0.31)	5.38	(0.43)	9.97	(0.82)	13.63	(0.92)	29.26	(1.95)
성																		
남자	5.08	(0.27)	3.49	(0.38)	1.43	(0.24)	2.29	(0.40)	2.64	(0.49)	4.16	(0.56)	8.65	(1.05)	10.68	(1.35)	29.86	(3.35)
여자	7.42	(0.31)	2.97	(0.29)	1.41	(0.19)	3.20	(0.44)	4.02	(0.38)	6.56	(0.63)	11.22	(1.09)	16.48	(1.31)	29.03	(2.45)
교육수준																		
미취학	4.48	(0.40)	4.48	0.40	0.00*	(0.00)	-	-	-	-	-	-	-	-	-	-	0.00*	(0.00)
초등학교 미만	12.19	(0.78)	1.60	0.20	1.70	(0.43)	0.00*	(0.00)	3.39*	(3.11)	29.09*	(10.57)	20.48	(5.01)	20.09	(2.24)	33.28	(2.67)
초등학교	9.88	(0.71)	0.00*	0.00	1.34	(0.23)	18.89*	(13.10)	12.17*	(7.73)	9.56	(1.95)	12.99	(1.58)	13.49	(1.57)	22.84	(3.66)
중학교	6.20	(0.55)	-	-	1.29	(0.23)	6.27*	(3.27)	3.97*	(1.24)	5.87	(1.15)	9.16	(1.47)	10.49	(1.96)	32.43	(8.35)
고등학교	4.35	(0.26)	-	-	1.43*	(0.42)	2.87	(0.45)	3.95	(0.44)	4.97	(0.55)	6.70	(1.18)	7.68	(1.74)	19.45*	(5.86)
대학 이상	3.15	(0.26)	-	-	0.00*	(0.00)	2.30	(0.36)	2.03	(0.25)	3.06	(0.58)	7.94	(1.94)	8.84*	(3.77)	26.69*	(10.34)
직업																		
전문행정관리직	1.64	(0.23)	-	-	0.00*	(0.00)	1.79	(0.50)	1.60	(0.31)	1.69	(0.46)	1.13	(0.54)	2.49*	(1.16)	0.00*	(0.00)
사무직	1.16	(0.20)	-	-	0.74*	(0.73)	1.29	(0.38)	1.05	(0.21)	1.00*	(0.45)	1.16*	(0.50)	7.40*	(7.00)	0.00*	(0.00)
판매서비스직	3.40	(0.36)	-	-	3.53*	(2.09)	2.78*	(1.07)	1.88	(0.32)	3.14	(0.61)	6.49	(1.24)	5.28	(1.65)	5.52*	(3.38)
농어업	7.04	(0.84)	-	-	-	-	0.43*	(0.44)	5.05*	(3.14)	6.16	(1.73)	5.44	(1.11)	7.41	(1.25)	10.66	(2.26)
기능단순노무직	3.68	(0.31)	-	-	3.77*	(2.10)	3.16	(0.83)	2.47	(0.55)	3.27	(0.51)	5.46	(0.87)	4.66	(1.02)	8.13*	(3.05)
기타(만14세 이하, 주부, 무직)	10.35	(0.46)	3.24	(0.26)	1.47	(0.22)	5.25	(0.94)	6.84	(0.94)	12.43	(1.46)	19.41	(2.04)	20.37	(1.60)	34.26	(2.41)

〈표 7-5〉 연간 침상와병일수의 소득분위별 비교

년도	n	mean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1998	39,059	5.05	11.51	9.77	5.54	5.03	3.54	3.94	2.57	3.27	3.28	3.39
2005	33,458	6.24	19.36	10.09	6.77	6.28	3.77	4.34	3.57	2.58	3.92	3.04

[그림 7-1] 소득 10분위별 연간 침상와병일수의 변화



1998년과 비교할 때 2005년에 연간 침상와병일수가 다소 증가하여 국민의 질병 혹은 손상으로 인한 부담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표 7-5). 이는 노인 인구 및 만성질환자의 증가와 관련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소득분위별로 보면 1분위에서 연간 침상와병일수의 증가폭이 가장 컸다[그림 7-1].

소득의 중간값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최저 소득 계층의 경우 연간 침상와병일수는 16.06일이었고, 나머지 계층에서는 4.38일보다 훨씬 길었다($p<0.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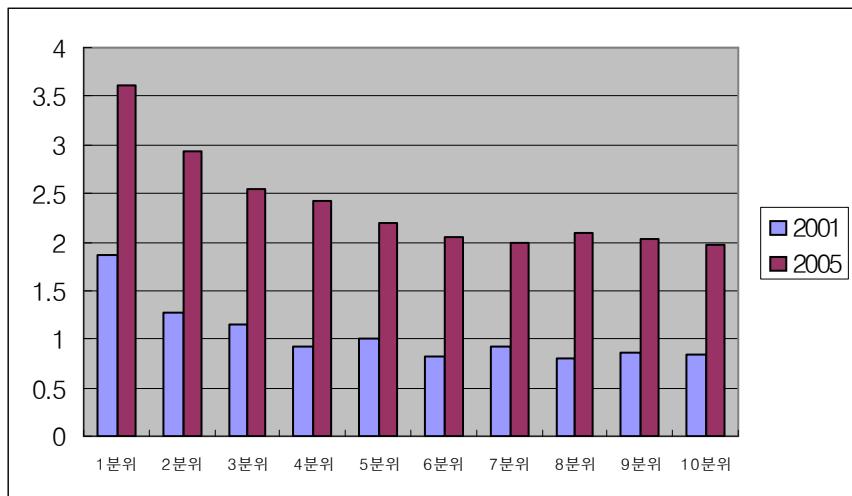
③ 평균 만성질환 개수

평균수명이 증가하면서 만성질환의 유병률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암, 고혈압, 당뇨, 뇌졸중 등의 만성질환은 개인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의료비 등을 통해 개인과 사회에 부담을 주게 된다. 만성질환은 보통 연령이 증가하면서 유병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가지므로 연령을 고려한 계층간 비교가 반드시 필요하다.

〈표 7-6〉 평균 만성질환 개수의 소득분위별 비교: 20세 이상

년도	n	mean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01	25072	1.07	1.87	1.27	1.14	0.93	1.01	0.82	0.92	0.80	0.86	0.84
2005	24593	2.39	3.61	2.94	2.54	2.42	2.20	2.06	1.98	2.09	2.04	1.96

[그림 7-2] 소득 10분위별 평균 만성질환 개수의 변화: 20세 이상



2001년에는 20세 이상 인구 1인당 1.07개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었던 데 비해 2005년에는 2.39개로 늘어났다(표 7-6 참조). 낮은 소득분위에 속한 인구에서 평균 만성질환개수가 더 높은 것은 2001년과 2005년에 동일하게 나타났고, 각 소득분위별로 큰 차이 없이 만성질환개수가 약 두 배 가량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의 중간값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최저 소득 계층의 경우 앓고 있는 만성질환 개수는 3.36개로, 나머지 계층의 2.16개보다 1개 이상이 많았다 ($p<0.0001$).

④ 남성흡연율

흡연율은 평생 100개비 이상의 담배를 피운 적이 있으면서 현재 가끔 혹은 매일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비율을 말한다. 2001년 한국 남성의 흡연율은 61.8%로 OECD 30개 국가 가운데 최고였다. 비록 2005년 남성 흡연율은 52.3%로 눈에 띄게 감소하였지만 흡연은 암, 심혈관질환, 당뇨 등 많은 만성질환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어 지속적인 흡연율의 감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연령별로는 30대가 60.02%로 가장 높고, 20대와 40대가 각각 55.62%와 55.17%로 그 다음으로 높았다. 학력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흡연율이 57.17%로 가장 높았고, 초등학교 미만의 학력자들에서 가장 낮았는데 이것은 초등학교 미만 졸업자들의 상당수가 노인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직업별로는 기능단순노무직과 판매서비스직의 흡연율이 각각 61.95%와 57.90%로 가장 높았다.

〈표 7-7〉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남성 흡연율 (2005년)

(단위: %(표준오차))

	전체 (N)	현재 흡연율						과거 흡연자		비흡연자	
		소 계		매일		가끔					
전체	100.00 (3,510)	52.30	(1.01)	49.30	(1.01)	3.00	(0.33)	26.40	(0.81)	21.30	(0.79)
연령											
19~29세	100.00 (583)	55.62	(2.22)	52.07	(2.23)	3.55	(0.78)	9.36	(1.25)	35.02	(2.09)
30~39세	100.00 (812)	60.02	(2.13)	56.27	(2.16)	3.75	(0.84)	21.72	(1.45)	18.26	(1.46)
40~49세	100.00 (872)	55.17	(1.88)	51.81	(1.98)	3.36	(0.61)	29.30	(1.79)	15.53	(1.21)
50~59세	100.00 (579)	47.62	(2.21)	45.89	(2.19)	1.73*	(0.53)	36.55	(2.27)	15.82	(1.92)
60~69세	100.00 (445)	38.26	(2.63)	36.57	(2.57)	1.69*	(0.69)	41.21	(2.76)	20.52	(2.14)
70세 이상	100.00 (219)	27.47	(3.19)	26.26	(3.12)	1.21*	(0.61)	57.56	(3.43)	14.97	(2.83)
교육수준											
초등학교 졸업 미만	100.00 (129)	38.51	(4.93)	37.53	(4.73)	0.98*	(0.68)	47.52	(4.65)	13.97	(2.98)
초등학교	100.00 (397)	48.57	(2.67)	47.15	(2.72)	1.42*	(0.62)	36.48	(2.41)	14.95	(2.21)
중학교	100.00 (376)	46.58	(3.08)	44.87	(3.13)	1.71*	(0.72)	34.82	(2.99)	18.59	(1.95)
고등학교	100.00 (1,449)	57.17	(1.48)	54.68	(1.51)	2.49	(0.42)	21.65	(1.24)	21.19	(1.30)
대학 이상	100.00 (1,094)	48.96	(1.85)	44.29	(1.80)	4.67	(0.71)	26.26	(1.34)	24.79	(1.41)
직업											
전문행정관리직	100.00 (450)	45.35	(2.57)	41.48	(2.41)	3.88	(1.12)	28.15	(2.43)	26.49	(2.11)
사무직	100.00 (394)	48.24	(2.87)	42.14	(2.91)	6.10	(1.25)	31.11	(2.63)	20.65	(2.16)
판매서비스직	100.00 (502)	57.90	(2.66)	55.95	(2.66)	1.94*	(0.66)	25.89	(2.22)	16.21	(1.78)
농어업	100.00 (260)	41.16	(3.40)	39.68	(3.29)	1.48*	(0.59)	43.09	(3.27)	15.75	(2.44)
기능단순노무직	100.00 (1,086)	61.95	(1.56)	59.58	(1.60)	2.37	(0.47)	22.15	(1.39)	15.90	(1.18)
기타(미취학, 주부, 무직)	100.00 (625)	48.17	(2.06)	45.98	(2.05)	2.19*	(0.67)	31.28	(2.00)	20.54	(1.67)

2005년의 경우 소득의 중간값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최저 소득 계층의 경우 남성 흡연율은 49.19%이었고, 나머지 계층에서는 53.48%여서 최저 소득 계층의 남성 흡연율이 더 낮았다($p<0.0001$).

소득과 남성 흡연율과의 관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소득 10분위별 남성흡연율을 시계열로 비교해 보았다.

〈표 7-8〉 남성 흡연율의 소득분위별 비교: 20세 이상

년도	n	%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1998	4110	66.99	69.71	68.13	63.46	70.59	65.56	64.95	67.64	67.18	66.87	65.30
2001	3409	61.43	55.29	72.13	63.55	64.89	62.16	66.22	59.47	58.85	58.99	53.75
2005	3411	52.84	47.87	53.32	58.67	54.98	56.98	54.85	53.69	50.05	49.64	47.00

전체적으로 남성 흡연율은 1998이래로 꾸준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모든 소득분위계층에서 이러한 감소 경향이 나타났다.

⑤ 지난 2년간 건강검진율

건강검진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조기에 치료를 함으로써 건강이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고 의료비를 절약할 수 있다. 2005년 현재 19세 이상 성인의 47.35%가 건강검진을 받았고, 여자(41.98%)의 건강검진율이 남자(52.79%)의 건강검진율보다 낮았다. 연령대별로는 50대에서 가장 높았고, 40대와 60대가 그 뒤를 이었다. 교육수준별로는 대학이상의 학력자들에게서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 졸업자들에게서 가장 낮았다. 이처럼 교육수준별로 건강검진율이 선형적인 관계를 보이지 않는 것은 각 계층에서의 연령분포가 다르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직업별로는 무직자 및 주부를 포함한 기타군에서 가장 낮았고 판매서비스직이 그 다음으로 낮아 이들의 건강검진율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7-9〉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지난 2년간 건강검진율 (2005년): 19세 이상
(단위: %(표준오차))

	전체			남자			여자		
	N	%		N	%		N	%	
전체	7,800	47.35	(0.82)	3,509	52.79	(1.11)	4,291	41.98	(0.97)
연령									
19~29세	1,336	31.08	(1.36)	583	30.43	(1.97)	753	31.78	(2.01)
30~39세	1,741	46.06	(1.51)	812	57.55	(2.07)	929	33.89	(1.76)
40~49세	1,878	55.67	(1.54)	872	62.87	(1.95)	1,006	48.26	(1.99)
50~59세	1,229	58.30	(1.74)	579	61.40	(2.39)	650	55.20	(2.06)
60~69세	969	55.46	(1.96)	444	57.73	(2.51)	525	53.47	(2.61)
70세 이상	647	44.35	(2.48)	219	55.71	(4.13)	428	37.73	(2.66)
교육수준									
초등학교 졸업 미만	683	43.90	(2.41)	396	53.94	(4.56)	554	41.31	(2.68)
초등학교	1,056	52.64	(1.92)	376	55.74	(2.90)	660	50.67	(2.12)
중학교	852	50.21	(2.09)	1,449	51.97	(3.21)	476	48.66	(2.80)
고등학교	3,042	40.08	(1.08)	1,094	45.25	(1.37)	1,593	34.26	(1.50)
대학 이상	2,029	56.43	(1.39)	450	63.40	(1.88)	935	46.98	(1.66)
직업									
전문행정관리직	743	65.59	(2.00)	394	72.11	(2.42)	293	54.72	(2.91)
사무직	725	69.05	(1.98)	235	78.44	(2.40)	331	56.87	(3.00)
판매서비스직	1,186	43.15	(1.79)	502	47.37	(2.54)	684	39.29	(2.25)
농어업	499	55.93	(2.75)	260	56.39	(2.81)	239	55.37	(3.78)
기능단순노무직	1,595	52.24	(1.49)	1,085	53.90	(1.62)	510	47.98	(2.71)
기타(주부, 무직)	2,703	37.93	(1.14)	625	37.67	(2.22)	2,078	38.02	(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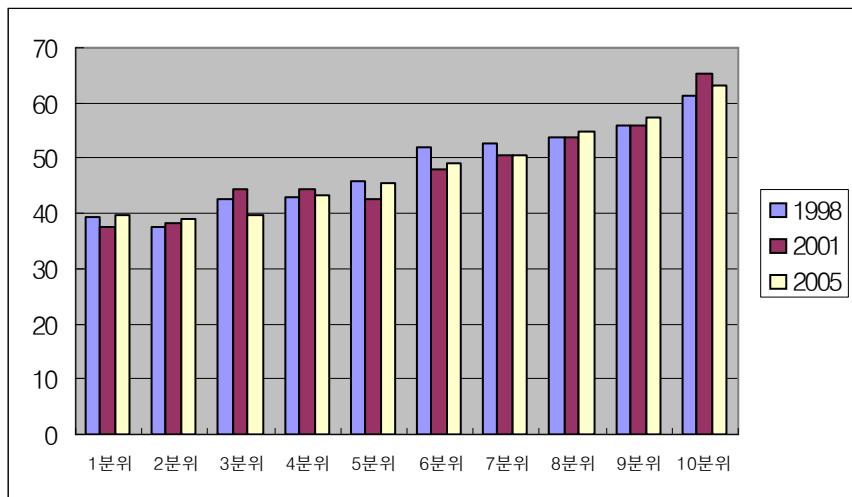
2005년에 소득의 중간값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최저 소득 계층의 경우 건강검진율은 39.70%이었고, 나머지 계층에서는 49.88%여서 최저 소득 계층의 건강검진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01$).

소득과 건강검진율과의 관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소득 10분위별 건강검진율을 시계열로 비교해 보았다.

〈표 7-10〉 지난 2년간 건강검진율의 소득분위별 비교: 20세 이상

년도	n	%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1998	8823	48.77	39.41	37.59	42.49	42.81	45.72	52.09	52.84	53.61	55.76	61.36
2001	7915	47.74	37.46	38.24	44.51	44.43	42.64	48.14	50.40	53.85	55.91	65.47
2005	7606	48.12	39.79	38.88	39.74	43.14	45.61	49.20	50.69	54.67	57.31	63.31

[그림 7-3] 소득 10분위별 지난 2년간 건강검진율의 변화: 20세 이상



건강검진율은 성인 전체로 볼 때나 각 소득분위별로 볼 때나 1998년 이래로 증가하지 않았다. 다만 높은 소득분위에 속할수록 건강검진율이 높은 경향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⑧ 연간 입원이용률

입원 및 외래와 같은 의료이용 지표는 질병이나 손상으로 인한 부담의 척도이기도 하면서, 질병이나 손상이 있는 국민이 치료를 얼마나 잘 받았는지, 즉, 치료의 접근성을 나타내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후자는 질병이나 손상의 유병률과 대비하여 분석하여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초 통계로서 입원과 외래 이용률을 가지고 질병이나 손상의 부담을 보여주고자 한다.

입원은 10대에서 최저의 비율을 가지며, 그 이후로는 연령의 증가와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가진다. 20대와 30대에서 40대보다 입원율이 다소 높은 것은 여성의 출산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7-11〉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연간 입원이용률 (2005년)

(단위: %(표준오차))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전체	6.90 (0.43)	3.22 (0.27)	8.53 (0.46)	8.72 (0.40)	7.56 (0.35)	9.64 (0.53)	13.17 (0.66)	16.12 (0.89)
성								
남자	7.43 (0.60)	3.93 (0.43)	6.78 (0.58)	6.34 (0.49)	8.20 (0.52)	9.18 (0.70)	12.90 (0.99)	16.71 (1.47)
여자	6.33 (0.55)	2.42 (0.33)	10.40 (0.68)	11.23 (0.64)	6.90 (0.50)	10.10 (0.78)	13.41 (0.88)	15.78 (1.09)
교육수준								
미취학	9.83 (0.69)	-	-	-	-	-	-	-
초등학교 미만	3.09 (0.42)	3.16 (0.54)	-	9.39* (9.03)	19.95 (5.24)	11.26 (2.07)	13.93 (1.35)	16.42 (1.21)
초등학교	-	3.03 (0.43)	9.11* (6.38)	6.17* (3.49)	9.58 (1.24)	10.85 (1.02)	13.76 (1.09)	16.94 (1.72)
중학교	-	3.42 (0.53)	7.35* (3.90)	10.16 (2.18)	9.07 (1.01)	10.14 (1.09)	11.82 (1.56)	18.72 (3.10)
고등학교	-	3.41 (0.89)	9.22 (0.68)	8.94 (0.53)	7.46 (0.50)	9.32 (0.93)	13.11 (1.67)	11.80 (2.49)
대학 이상	-	-	7.77 (0.69)	8.47 (0.62)	5.69 (0.62)	7.01 (1.21)	7.98 (2.06)	13.63 (3.72)
직업								
전문행정관리직	-	-	-	5.56 (1.05)	7.57 (1.05)	6.70 (1.02)	3.95 (1.10)	1.20 (1.21)
사무직	-	-	5.99* (5.92)	5.37 (0.82)	6.74 (0.84)	4.55 (0.88)	6.60* (2.29)	-
판매서비스직	-	-	11.43* (6.48)	8.27 (1.36)	6.92 (0.91)	5.48 (0.70)	7.12 (1.27)	11.48 (2.30)
농어업	-	-	-	11.29* (10.77)	2.50* (1.79)	11.18 (1.94)	9.25 (1.37)	12.82 (1.52)
기능단순노무직	-	-	16.51* (14.38)	9.30 (1.47)	7.65 (0.81)	8.36 (0.65)	9.12 (0.94)	7.75 (1.32)
기타(만14세 이하, 주부, 무직)	6.90 (0.43)	3.08 (0.33)	15.29 (1.24)	12.67 (0.85)	9.11 (0.80)	12.78 (1.01)	15.82 (0.91)	17.03 (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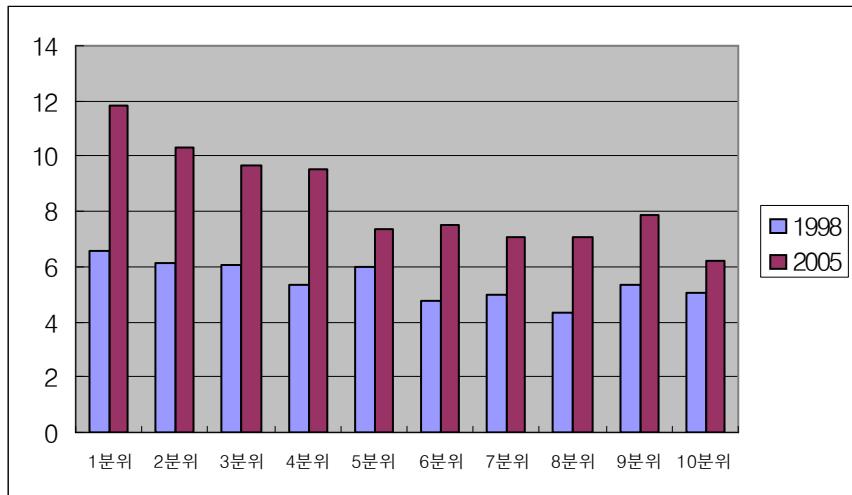
2005년에 소득의 중간값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최저 소득 계층의 경우 연간 입원이용률은 11.17%이었고, 나머지 계층에서는 7.8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0.0001$). 이것은 입원할 정도의 중증 질환에 있어서 최저 소득 계층의 높은 질병 및 그로 인한 의료비 부담으로 해석될 수 있다.

소득과 입원이용률과의 관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소득 10분위별 입원이용률을 시계열로 비교해 보았다.

〈표 7-12〉 연간 입원이용률의 소득분위별 비교

년도	n	%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1998	39,060	5.39	6.60	6.10	6.04	5.37	6.01	4.77	4.95	4.35	5.36	5.02
2005	33,463	8.39	11.86	10.34	9.69	9.52	7.35	7.54	7.04	7.10	7.86	6.23

[그림 7-4] 소득 10분위별 연간 입원이용률의 변화



연간 입원을 1회 이상한 인구의 비율은 1998년의 5.39%에 비해 2005년에 8.39%로 증가하였다. 모든 소득분위 계층에서 입원이용률이 증가하였지만, 1분위에서 4분위까지의 저소득계층에서의 증가폭이 나머지 계층에 비해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그림 7-4]. 결과적으로 소득분위간 차이는 1998년에 비해 더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⑨ 2주간 외래이용률

2주간 외래이용률은 20대에서 가장 낮은 U자형 분포를 보였다. 20대부터는 여자가 남자보다 외래이용률이 높았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대체로 외래이용률이 낮았고, 직업별로는 뚜렷한 경향을 찾을 수는 없었다.

〈표 7-13〉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2주간 외래이용률 (2005년)

(단위: %(표준오차))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전체	38.31	(0.99)	16.80	(0.66)	14.84	(0.58)	19.28	(0.60)	23.50	(0.65)	32.67	(0.85)	47.35	(0.94)	52.41	(1.25)
성																
남자	38.73	(1.20)	16.45	(0.87)	10.41	(0.73)	16.16	(0.75)	20.32	(0.82)	27.20	(1.12)	39.93	(1.38)	48.96	(1.89)
여자	37.84	(1.32)	17.21	(0.92)	19.57	(0.89)	22.58	(0.86)	26.76	(0.86)	38.17	(1.18)	53.84	(1.19)	54.42	(1.51)
교육수준																
미취학	46.56	(1.33)	-	-	-	-	-	-	-	-	-	-	-	-	-	-
초등학교 미만	27.48	(1.16)	19.43	(1.35)	-	-	79.75	(13.26)	41.49	(6.51)	40.04	(3.32)	51.74	(1.74)	51.47	(1.67)
초등학교	100.0	(0)	16.60	(1.02)	30.20*	(11.22)	27.22	(6.74)	30.55	(2.11)	38.16	(1.54)	49.57	(1.54)	54.32	(2.31)
중학교	-	-	17.56	(1.12)	14.80*	(5.17)	20.96	(2.99)	25.80	(1.64)	34.66	(1.69)	45.04	(2.60)	54.71	(4.00)
고등학교	-	-	12.55	(1.47)	15.13	(0.80)	19.34	(0.81)	22.12	(0.86)	28.21	(1.48)	44.54	(2.41)	51.62	(4.40)
대학 이상	-	-	-	-	14.82	(0.87)	18.52	(0.82)	21.52	(1.18)	25.40	(2.10)	33.05	(3.86)	47.14	(6.14)
직업																
전문행정관직	-	-	26.42*	(22.50)	14.26	(1.57)	18.19	(1.49)	21.70	(1.76)	25.70	(2.52)	34.14	(6.45)	29.00*	(14.72)
사무직	-	-	8.91*	(8.53)	15.03	(1.40)	16.67	(1.32)	20.71	(1.90)	25.09	(3.59)	41.93*	(13.03)	73.58	(16.79)
판매서비스직	-	-	19.30*	(10.36)	15.94	(1.74)	19.96	(1.39)	23.00	(1.41)	32.01	(2.02)	40.32	(3.24)	56.77	(8.91)
농어업	-	-	-	-	34.16*	(12.26)	19.14	(5.02)	28.39	(3.31)	36.64	(2.59)	49.82	(2.13)	53.42	(3.17)
능단순노무직	-	-	40.49*	(13.48)	13.42	(1.75)	16.21	(1.20)	21.45	(1.03)	26.66	(1.39)	38.54	(2.49)	56.75	(5.90)
기타(14세 이하, 주부, 무작)	38.31	(0.99)	17.49	(0.84)	17.90	(1.26)	23.24	(1.10)	27.51	(1.27)	39.02	(1.49)	50.92	(1.29)	51.88	(1.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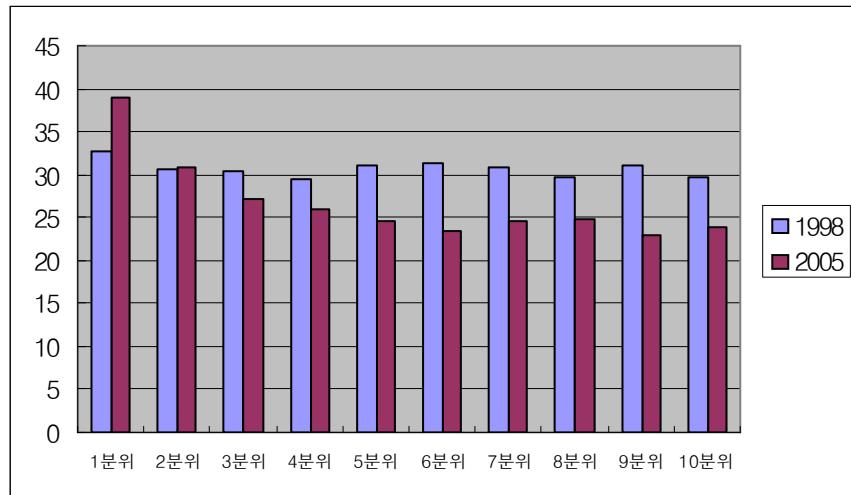
입원이용률과 마찬가지로 2005년에 소득의 중간값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최저 소득 계층의 경우 2주간 외래이용률은 36.21%였고, 나머지 계층에서는 24.8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01$). 이것은 경증 질환에 대해서도 최저 소득 계층은 높은 질병 및 그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소득과 외래이용률과의 관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소득 10분위별 외래 이용률을 시계열로 비교해 보았다.

〈표 7-14〉 2주간 외래이용률의 소득분위별 비교

년도	n	%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1998	39060	30.61	32.77	30.72	30.29	29.45	31.04	31.29	30.95	29.80	31.01	29.76
2005	33452	26.63	39.01	30.87	27.22	26.02	24.60	23.33	24.63	24.90	23.07	23.78

[그림 7-5] 소득 10분위별 2주간 외래이용률의 변화



조사 당시 지난 2주간 외래를 1회 이상 이용한 인구의 비율은 1998년에 비해 전체적으로는 감소하였다. 하지만 소득분위별로는 서로 다른 변화 양상을 나타내었다. 소득 3분위 이상은 2주간 외래이용률이 모두 감소하였으나, 1분위계층에서는 2주간 외래이용률이 오히려 증가하였고 2분위계층도 1998년과 비슷한 외래 이용률이 나타났다. 그리하여 1998년에 비해 2005년에 양극단 소득분위 계층간 외래이용률 격차는 더 커지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제2절 주거부문의 불평등

1. 분석의 목적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40년간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급속한 도시화와 핵가족화로 인해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고, 가격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하

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주택문제의 본질이 주택의 양적 부족에 있다 고 판단하고 정책의 초점을 주로 신규주택 공급에 두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2002년을 기점으로 100%를 넘기 시작하여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물량 위주의 공급정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소외계층의 주거문제는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 이는 주택의 여유가 있더라도 주택을 구입할만한 능력이 없거나, 임대료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계층에게는 배분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전국의 자가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소득이 낮을수록 자가점유율이 낮아지고 여전히 최저주거기준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상당수 존재하며, 최근 주택매매가격의 상승뿐만 아니라 매매가격대비 전세가격의 비율과 월세이율수준이 높아져 소득이 낮아질수록 주거비부담 과중한 현실이다. 또한 주택자산의 불평등이 소득불평등보다 더욱 심각한 상태이며,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

이처럼 주택의 양적 문제가 개선되어도 질적, 불평등 문제는 악화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주택의 총량적인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주택소비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주택시장에서 소외되는 저소득층의 상대적 박탈감 문제는 오히려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관심이 집중되는 양극화와 결부해서 주거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주거양극화 실태를 보여주는 만족스러운 자료는 아직 미비한 것이 사실이나, 사회양극화라는 측면에서 주거부문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다시 말해 주거부문에서 불평등이 완화되고 있는가, 악화되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 변화를 파악하고자 한다.

2. 분석자료 및 분석틀

가. 분석자료

이론적인 요구와는 다르게 실제로 주거실태 특히 주거불평등을 충분히 보여

줄 만한 자료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주거비부담이나 주거형평성을 분석하는데 필요한 주택가격, 주택자산에 대한 조사 자료는 더욱 미미하다.

이에 본 분석에서는 통계청의 '00년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와 '06년 상반기 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해 추이를 보여주고, 통계청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지표에 대한 정보는 '03년의 실태를 담고 있는 '차상위계층 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²⁶⁾. 단, 앞의 3~5장에서 활용한 '03 국민생활실태 조사 자료(차상위 1차 조사)가 차상위계층 실태파악을 위해 1차로 실시한 전국 30,000 가구 조사 자료를 활용했다면, 본 분석은 1차 판별조사와 2차 심층조사를 가구ID별로 결합하여 사용하였다며(이는 '주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2차 심층조사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가구소비실태 및 가계조사 자료와 대상을 일치시키기 위해 가구유형특성 중 농어가가구(350가구)를 제외한 3,151가구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나. 분석틀: 주거관련 지표

그동안 주거양극화라는 측면에서 주거관련 지표의 검토는 미미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그동안 선행연구들에서 다루어진 지표를 바탕으로 주거의 질, 주거안정성, 주거비부담, 주거형평성 등을 통해 주거양극화 실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인당 주거면적은 주거의 질 영역으로, 자가점유율은 주거안정성 영역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제시하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최저주거기준이 '물리적 주거기준'에 주안점을 둔 것을 반영하여 '주거의 질'이라는 영역으로 배분하였다. 또한 주거형평성은 지니계수와 주택자산점유율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주26) 참고로 통계청의 가구소비실태조사나 가계조사 외에 우리나라의 주택 관련 실태분석 자료로는 5년 단위로 생산되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가 있으나, 이는 주거의 양적, 질적, 안정성 측면의 분석은 가능하나 주거비부담이나 주거형평성의 문제는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표 7-15〉 분석틀

영역	지표
주거의 질	① 1인당 주거면적 ②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③ 전용시설 미구비 가구율 ④ 3인 이상 단칸방 거주가구 비율
주거안정성	① 자가점유율 ② 거주위치
주거비부담	① PIR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② RIR(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③ 주거비지불능력 미달가구 비율 ④ 최저주거비부담 과다가구 비율
주거형평성	① 주택자산 분위수 배율 및 점유율 ② 1인당 주거면적·주택자산 지니계수

또한 위의 지표 분석 시에는 소득계층별, 성별, 지역별 등으로 나누어 보다 세밀한 주거양극화 실태를 살펴보도록 하며, 이때 계층구분은 OECD(1995)와 유경준·김대일(2002)의 계층구분²⁷⁾, 그리고 소득10분위로 계층을 구분한다. OECD 기준을 활용한 소득계층 구분은 주로 지표별 변화추이 비교 시 활용하였으며, 소득10분위 계층 구분은 특정 연도의 보다 상세한 실태를 보여주기 위해 사용하였다. 지역별 주거양극화 실태는 사용 자료의 지역구분 기준이 달라서 그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워 특정 연도의 실태 위주로 살펴본다.

3. 주거양극화 실태

가. 일반적 주거특성

주거양극화를 지표별로 분석하기에 앞서 일반적인 주거특성의 변화를 보여주

주27) 중위소득의 50% 이하를 빈곤층으로, 50~70%를 중하층으로, 70~150%를 중간층, 150% 이상을 상류층으로 구분

는 주택유형과 점유형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주택유형

주택유형의 변화를 보면 전체적으로 2000년에는 단독주택 거주가구 비율이 절반을 넘었다면, 2006년에는 절반 이하로 다소 줄어들고, 아파트의 경우는 2000년 전체 가구의 약 30% 정도에서 2006년 약 40%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인다.

이를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빈곤층의 경우 단독주택 거주가구는 11.5%p 줄고, 아파트 거주가구는 10.4%p 증가하였고, 상류층의 경우 단독주택 거주가구는 5.4%p 줄고, 아파트 거주가구는 7.5%p 증가하였다. 중하위층과 중간층의 경우 단독주택은 대략 7.5%p 줄고, 아파트는 대략 9.7%p 증가하였다. 전반적으로 빈곤층의 경우 단독주택 거주가구가 아파트와 연립 및 다세대로 이동하고, 중하위층 이상의 경우 아파트로 이동하는 경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16〉 OECD 기준 소득계층별 주택유형

(단위: %)

		빈곤층	중하위층	중간층	상류층	전체
단독	2000	72.7	62.7	51.1	37.2	52.2
	2006	61.2	55.2	43.5	31.8	45.3
아파트	2000	14.7	19.5	30.4	48.0	31.2
	2006	25.1	29.2	40.2	55.5	39.8
연립 및 다세대	2000	10.5	14.1	15.3	11.2	13.4
	2006	12.3	14.4	15.3	11.7	13.6
기타	2000	2.1	3.7	3.2	3.6	3.2
	2006	1.4	1.3	1.1	1.1	1.2

주: 기타는 영업용 건물 내 주택, 오피스텔 등

‘차상위 실태조사’(2003) 자료를 활용해 지역별 주택유형을 살펴보면, 대도시의 경우 아파트 거주가구가 전체의 40%인데 반해 농어촌은 절반 이상이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립(빌라) 및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는 대도시에 많이 나타났다. 또한 중소도시의 경우 아파트 거주가구 비율이 대도시보다 약간 높고, 단독주택 거주가구도 약 30%대로 나타난다.

〈표 7-17〉 지역별 주택유형

(단위: %)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전체
단독	30.3	31.0	60.2	33.2
아파트	42.4	51.9	20.4	44.4
연립 및 다세대	21.0	10.1	8.2	15.5
기타	6.2	7.0	11.2	7.0

② 점유형태

점유형태의 변화를 보면, 전체적으로 자가 비율이 5.4%p 다소 증가하고, 전세가구 비중은 6.7%p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소득계층별로 상류층의 자가 비율은 약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자가 비율이 다소 높은 특징을 보이고, 2006년도에는 자가 비율이 높아지는 특징이 있다. 또한 중간층의 자가 비율이 2000년 약 50%에서 2006년 약 57%로 높아져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이 중간층의 자가 소유를 어느 정도 촉진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빈곤층과 중하위층에서도 자가 비율이 높아지지만 여전히 전체 평균에는 다소 못 미침을 알 수 있다.

〈표 7-18〉 OECD 기준 소득계층별 점유형태

(단위: %)

		빈곤층	중하위층	중간층	상류층	전체
자가	2000	45.5	41.9	50.2	63.0	51.7
	2006	51.0	49.1	57.2	65.2	57.1
전세	2000	25.9	30.9	31.0	26.4	29.1
	2006	20.4	23.0	23.8	21.2	22.4
월세	2000	21.7	22.7	15.8	8.0	15.6
	2006	20.8	21.7	15.2	9.4	15.6
기타	2000	6.9	4.5	3.0	2.6	3.7
	2006	7.8	6.2	3.8	4.2	4.9

‘차상위 실태조사’(2003) 자료를 활용해 지역별 점유형태를 보면, 자가 거주 가구는 지역 모두에서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소도시의 자가 비율이 다소 높은 경향성을 보였다. 전세는 대도시에서 높게 나오고, 월세 비중은 2.9%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월세는 농어촌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무상 거주를 포함한 기타 주거형태는 농어촌에서 가장 높고, 중소도시의 경우도 약 12%대로 나타났다.

〈표 7-19〉 지역별 점유형태

(단위: %)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자가	54.7	57.2	54.3
전세	24.3	15.2	16.7
보증부월세	14.0	12.6	8.9
월세(사글세 포함)	2.9	3.2	5.2
기타(무상 등)	4.1	11.7	14.9

나. 「주거의 질」 관련 지표

① 1인당 주거면적

1인당 주거면적은 2000년 6.92평에서 2006년 7.71평으로 약 0.8평 증가하였다. 빈곤층의 2000년 1인당 주거면적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2006년에도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대개 빈곤층이 거주하는 건물의 노후도에 대한 추가분석이 필요하지만 저소득층의 지역, 연령, 주택특성 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7-20〉 OECD 기준 소득계층별 1인당 주거면적

(단위: 평)

	빈곤층	중하위층	중간층	상류층	전체
2000	8.17	6.69	6.10	7.83	6.92
2006	9.13	7.32	7.03	7.94	7.71

1인당 주거면적의 분위수 배율은 아래와 같으며, 전반적으로 1인당 주거면적에 관한 분배가 개선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표 7-21〉 1인당 주거면적 기준 분위수 배율

(단위: 배)

구분	1인당 주거면적		
	P90/10	P90/50	P80/20
2000	4.167	2.174	2.400
2006	3.611	2.000	2.222

지역별로는 2003년도 1인당 주거면적은 농어촌이 약 8.1평,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약 7.6~7.7평 정도로 나타나 농어촌 지역이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보

다 저밀도의 주거생활을 영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22〉 지역별 1인당 주거면적

(단위: 평)

	대도시	중소도시	전체	
2003	7.73	7.60	8.09	7.71

② 최저주거기준²⁸⁾ 미달가구

차상위실태조사(2003) 분석 결과 최저주거기준 요건 중에 하나라도 미달하는 경우로 정의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1분위에서 가장 높고, 2~5분위의 경우 해당 소득계층에 속한 가구의 약 1/3정도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에 속하는 9분위 이상의 경우에도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약 4~6% 사이로 나타난다.

〈표 7-23〉 소득계층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단위: %)

	침실미달	면적미달	시설미달	모두미달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¹⁾
1분위	7.3	9.8	40.3	1.9	46.7
2분위	11.7	11.1	23.8	2.2	33.7
3분위	20.0	12.4	14.9	1.9	33.7
4분위	22.3	6.1	9.6	1.2	30.2
5분위	21.4	3.7	7.8	1.0	29.2
6분위	22.4	1.0	1.9	0.0	24.4
7분위	12.7	0.3	1.6	0.0	12.7
8분위	14.4	4.7	6.6	4.7	16.6
9분위	4.4	2.5	2.5	2.5	4.4
10분위	1.0	0.0	5.2	0.0	6.1

주: 1)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침실, 면적, 시설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함.

주28) 2004년 6월 15일 설정·공고된 최저주거기준 적용

지역별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보면, 침실, 면적, 시설 중에 어느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농어촌에서 약 41%로 높게 나타나며, 중소도시의 경우는 전체가구의 약 1/4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대도시의 경우는 중소도시보다는 약간 낮아져 전체 가구의 약 1/5정도로 나타났다. 침실과 면적미달의 경우는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시설기준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과 같은 시설을 모두 구비한 주택이 농어촌지역으로 갈수록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준다.

〈표 7-24〉 지역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단위: %)

	침실미달	면적미달	시설미달	모두미달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¹⁾
대도시	13.3	5.4	7.0	1.1	19.7
중소도시	14.1	4.8	13.3	1.5	25.3
농어촌	14.5	5.2	29.0	3.0	40.5

주: 1)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침실, 면적, 시설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함.

③ 전용시설(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미구비 가구율

전용시설(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미구비에 초점을 두어 소득계층별로 전용시설 미구비 가구율을 분석한 결과 1분위의 경우 약 40%가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중의 하나라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장실과 목욕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소득 2분위에 속한 계층의 경우도 약 1/4이 전용시설 미구비 가구로 나타났으며, 이 경우도 화장실과 목욕시설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의 비중이 부엌을 갖추지 못한 경우보다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7-25〉 소득계층별 전용시설 미구비 가구율

(단위: %)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전용온수 목욕시설	전용시설 미구비 가구율 ¹⁾
1분위	15.6	34.6	35.6	41.3
2분위	6.6	19.4	20.0	24.4
3분위	5.7	12.1	13.3	15.6
4분위	0.6	8.4	8.4	9.6
5분위	2.2	7.8	8.0	8.7
6분위	0.0	1.9	1.9	1.9
7분위	0.0	1.6	0.0	1.6
8분위	3.1	6.6	5.6	6.6
9분위	0.0	0.0	2.5	2.5
10분위	0.0	4.2	1.3	5.2

주: 전용시설 미구비 가구율은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전용온수목욕시설 중 어느 하나라도 구비하지 못한 가구의 비율을 의미함.

지역별 전용시설(부엌, 화장실, 목욕시설)미구비 가구율을 살펴보면 화장실과 목욕시설을 미구비한 가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중소도시의 경우 전용시설 미구비 가구율은 13.5%인데, 이는 주로 화장실과 목욕시설을 미구비한 가구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보이며, 대도시의 경우 미구비 가구율은 7.4% 정도이고, 화장실보다는 목욕시설을 구비하지 못한 가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표 7-26〉 지역별 전용시설 미구비 가구율

(단위: %)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전용온수 목욕시설	전용시설 미구비 가구율 ¹⁾
대도시	2.6	5.2	6.7	7.4
중소도시	2.9	12.2	10.3	13.5
농어촌	10.4	24.9	24.9	29.4

주: 1) 전용시설 미구비 가구율은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전용온수목욕시설 중 어느 하나라도 구비하지 못한 가구의 비율을 의미함

④ 3인 이상 단칸방 거주가구 비율

3인 이상 단칸방 거주가구 비율을 분석한 결과 3인 이상 단칸방 거주가구는 전체가구의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로는 소득 8분위에 속한 가구의 4.7%가 3인 이상 단칸방 거주가구로 나타났고, 추가적으로 2003년 차상위 실태조사 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단칸방 거주가구 비율은 5.0%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분석에 활용된 차상위실태조사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소득 8분위에 속한 가구에서 가구원수가 3인 이상이면서 방이 하나인 경우의 비중이 다른 소득분위에 속한 가구보다 좀 더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단칸방 거주가구 비율은 1분위에서 1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3인 이상으로 한정한 경우는 1.6%에 불과해, 1분위에서 1인 가구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7-27〉 소득계층별 3인 이상 단칸방 거주가구 비율

(단위: %)

	1 분위	2 분위	3 분위	4 분위	5 분위	6 분위	7 분위	8 분위	9 분위	10 분위	전체
3인 이상 단칸방 거주가구비율	1.6	1.3	2.2	1.0	0.0	2.9	0.0	4.7	0.0	0.0	1.4
단칸방 거주가구비율	18.0	11.7	9.5	1.3	5.6	7.1	5.1	5.0	0.6	1.3	6.5

지역별로는 3인 이상이 단칸방에 거주하는 비율은 농어촌 지역이 높게 나타난 반면 단칸방 거주가구 비율은 대도시와 농어촌이 7~8% 대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대도시의 경우 1인 가구 비중이 높으므로 단칸방 거주가구 비율은 7.4%이지만 3인 이상으로 한정했을 때는 1.1%로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표 7-28〉 지역별 3인 이상 단칸방 거주가구 비율

(단위: %)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3인 이상 단칸방 거주가구 비율	1.1	1.4	2.6
단칸방 거주가구 비율	7.4	5.0	8.2

다. 주거안정성

① 자가점유율

소득계층별 자가점유율을 보면, 2000년의 경우 고소득층에 속하는 9~10분위만 자가점유율이 60%를 상회하였고, 1~6분위까지는 평균 자가점유율 51.7%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2006년도의 경우 7~10분위의 자가점유율이 6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동안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주택공급정책의 수혜가 일정정도 중상류층으로 집중되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반면 1~5분위까지의 자가점유율은 평균 자가점유율 57.1%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29〉 소득계층별 자가점유율

(단위: %)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2000	48.3	40.5	42.7	46.0	46.6	51.4	55.2	57.5	61.8	67.4	51.7
2006	52.1	49.9	49.1	50.1	54.8	59.6	61.6	61.7	66.1	66.0	57.1

지역별 자가점유율을 보면, 지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고, 중소도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인다.

〈표 7-30〉 지역별 자가점유율

(단위: %)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2003	54.7	57.2	54.3

② 거주위치

소득계층별 거주위치를 보면, 전반적으로 약 95% 이상의 가구가 지상층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05년도에 실시된 인구주택총조사의 거주위치에 대한 결과(주29)와 큰 차이가 없다.

주거가 상당히 열악한 지하에 거주하는 가구는 1~2분위에서 3.2% 정도 나타났고, 6분위 이상에서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이 거주위치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지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은 거주위치인 반지하 거주가구는 7분위를 제외한 소득계층에서 나타나고 있다.

〈표 7-31〉 소득계층별 거주위치

(단위: %)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지하	3.2	3.2	1.3	1.3	-	-	-	-	-	-	0.9
반지하	2.9	3.5	5.4	1.3	8.1	5.8	-	3.4	3.1	3.5	3.7
지상	94.0	93.0	93.0	97.4	91.9	94.2	100.0	96.6%	96.9	96.5	95.3
옥탑	-	0.3	0.3	-	-	-	-	-	-	-	0.1

지역별로 거주위치를 살펴보면, 지하 및 반지하에 거주하는 가구는 대도시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도시의 경우 주택에 대한 저소득층의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90년대 이후 다가구·다세대주택의 공급 확산이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지하·반지하 거주가구 비율도 중소도시나 농어촌에 비해 증가한 때

주29) 지하(반지하)가 3.7%, 옥상(옥탑)이 0.3%, 지상이 96%임

문으로 보인다.

〈표 7-32〉 지역별 거주위치

(단위: %)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하	1.2	0.6	0.7
반지하	6.1	1.6	-
지상	92.7	97.8	99.3
옥탑	0.1	-	-

라. 「주거비부담」 관련 지표

주거비부담은 대개 연소득대비 주택가격(Price to Income Ratio: 이하 PIR), 월 소득 대비 월임대료 (Rent to Income Ratio: 이하 RIR) 두 가지 지표로 측정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주거비지불능력 미달가구 비율과 최저주거비부담 과다가구 비율을 추가해 분석하고자 한다.

〈표 7-33〉 주거비 부담 관련 지표

지표	정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Price to Income Ratio; 이하 PIR)	주택지불능력(Affordability) 향상 측정에 사용하는데, 주택가격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로서 중위(median) 주택가격과 중위 소득을 사용하여 구함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Rent to Income Ratio; 이하 RIR)	지불능력을 측정하는 지표 중 대표적으로 사용한 지표는 RIR로써 중위(median) 임대료와 중위 소득을 사용하여 구함
주거비지불능력(housing affordability) 미달가구 비율	‘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이 소득의 30%를 초과하는 가구의 비율
최저주거비부담 과다가구 비율	‘소득 대비 최저주거비 비율’이 소득의 30%를 초과하는 가구로 최저주거비는 가구규모별 최저주거비를 적용함

①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PIR)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PIR)은 주택가격을 연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주택지불 능력(Affordability) 측정 시 주로 사용한다. 주거양극화 지표로 월소득 대비 월 임대료(PIR)을 사용할 때, 이것이 ‘자가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표임을 감 안해야 하며, 열악한 주거상태에 있는 가구라 하더라도 이들의 점유형태(자·차가)에 따라 ‘점유의 안정성’이 현저히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즉, 이러한 점을 고려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지원정책에서도 점유형태에 따라 차별적인 지원책을 실시해야 한다.

소득계층별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PIR)을 보면 2006년의 경우 빈곤층은 소득의 9.7배, 중하층의 경우는 소득의 5.1배를 지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개 적정 주택구입수준을 3~4배로 볼 때, 빈곤층과 중하층의 부담이 과도함을 알 수 있다.

〈표 7-34〉 소득계층별 PIR (경상소득 기준)

(단위: 배)

	빈곤층	중하층	중간층	상류층	전체
2000년	10.1	7.2	4.8	4.2	4.4
2006년 ¹⁾	9.6	5.1	3.6	2.8	3.5

주: 1) 2006년 가계조사는 자가의 경우에 주택가격을 월세로 환산한 평가액만 가능하므로 ‘월소득 대비 주택의 월세평가액’으로 PIR을 산정하였음. 따라서 ’00년과 ’06년의 직접적인 비교시 주의를 요함.

지역별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PIR)을 보면, 농어촌 < 중소도시 < 대도시 순으로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개 적정 주택구입수준을 3~4배로 볼 때, 아직은 지역별로 주택구입부담이 차이를 보인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표 7-35〉 지역별 PIR (경상소득 기준)

(단위: 배)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전체
2003	4.3	3.5	2.8	4.3

가구주 연령별 연소득대비 주택가격(PIR)을 보면, 대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연소득대비 주택가격(PIR)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소득수준에 비해 주택소비수준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2006년도의 경우 60세 이상에서 연소득대비 주택가격(PIR)이 5.3배로 가장 높게 나타나 노년층에 주거비부담이 과중함을 알 수 있다.

〈표 7-36〉 가구주 연령별 PIR (경상소득 기준)

(단위: 배)

구분	20세 미만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전체
2000	2.9	4.3	4.2	4.4	5.5	8.3	4.4
2006 ^{b)}	2.6	3.1	3.7	3.4	3.2	5.3	3.5

주: 1) 2006년 가계조사는 자가의 경우에 주택가격을 월세로 환산한 평가액만 가능하므로 ‘월소득 대비 주택의 월세평가액’으로 PIR을 산정하였음. 따라서 00년과 06년의 직접적인 비교 시 주의를 요함.

②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RIR)

소득계층별로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RIR)를 살펴보면 빈곤층에서 월소득의 40% 정도를 임대료로 지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임대료 부담이 과중하다고 판단하는 30% 기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차가의 경우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과중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중간층과 중하층의 경우도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20~25%로 나타났고, 상류층의 경우만 20% 미만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간층의 경우 2000년도에 월

소득 대비 월임대료(RIR)가 20% 이하였는데, 2006년에는 20% 이상으로 나타나 중간층의 임대료 부담이 다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표 7-37〉 소득계층별 RIR (경상소득 기준)

(단위: %)

	빈곤층	중하층	중간층	상류층	전체
2000년	42.9	28.2	19.0	13.0	18.1
2006년	42.9	25.6	22.0	15.9	20.8

지역별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RIR)는 대도시가 가장 높고 농어촌 > 중소도시 순으로 낮아지는데, 앞서의 소득계층별 살펴 볼 때보다 지역별로 볼 때 소득에서 월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30% 이하로 낮게 나타난다. 이를 통해 소득계층별 차이에 비해 지역별 차이는 아직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7-38〉 지역별 RIR (경상소득 기준)

(단위: %)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전체
2003	28.9	16.1	18.8	21.7

가구주 연령대별로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RIR)를 살펴보면 60세 이상의 경우 2000년 25.8%, 2006년 30.4%로 나타나 노년층으로 갈수록 소득이 감소하면서 임대료부담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차가의 임대료부담 완화를 위한 주거지원을 실시할 때 소득이 감소되는 노년층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표 7-39〉 가구주 연령별 RIR (경상소득 기준)

(단위: %)

구분	20세 미만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전체
2000	21.6	15.6	19.2	18.5	17.6	25.8	18.1
2006	21.6	15.3	21.4	19.8	16.9	30.4	20.8

③ 주거비지불능력 미달가구 비율

소득계층별로 주거비지불능력 미달가구 비율을 보면, 빈곤층의 경우 2000년 69%에서 2006년 52.3%로 16.7%p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보다 엄밀한 추가분석이 뒤따라야 하지만 빈곤층을 대상으로 주거지원제도의 빈곤층 보호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낸 결과라고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빈곤층의 절반 이상이 주거비지불능력 미달가구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간층의 경우 주거비지불능력 미달가구 비율이 2000년 19.1%에서 2006년 32.8%로 13.7%p 증가했다. 이는 중간층의 주거비부담이 과중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주거양극화의 한 단면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7-40〉 소득계층별 주거비지불능력 미달가구 비율

(단위: %)

	빈곤층	중하층	중간층	상류층	전체
2000년	69.0	45.6	19.1	19.4	28.8
2006년	52.3	43.7	32.8	21.7	34.7

지역별 주거비지불능력 미달가구 분포를 보면, 대도시와 농어촌에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중소도시의 경우는 2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도시의 경우 소득은 높으나 월임대료는 대도시에 비해 낮은 데서 연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역별로 주거비지불능력을 지표로 삼아 주거양극화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 볼 경우 중소도시보다는 대도시지역에서 주거비부담이 큰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7-41〉 지역별 주거비지불능력 미달가구 비율

(단위: %)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전체
2003	56.4	25.2	29.5	44.0

가구주 연령별로 주거비지불능력 미달가구 비율을 살펴보면, 2000년에는 40세 이상부터 미달가구가 30%를 넘는 경향성을 보인 반면, 2006년에는 연령층이 낮아져 30세 이상부터 미달가구가 30%를 넘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한창 왕성한 경제활동을 펼치는 30대에서 소득에 비해 주거비부담이 점점 더 과중해지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표 7-42〉 가구주 연령별 주거비지불능력 미달가구 비율

(단위: %)

구분	20세 미만 ¹⁾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전체
2000	19.5	14.8	26.5	32.1	32.7	55.4	28.8
2006	45.7	19.5	36.2	34.1	33.4	48.7	34.7

주: 1) 20세 미만의 2000년, 2006년 자료는 해석상의 주의를 요함. 2006년의 해당 연령층에 속하는 가구가 35가구에 불과하여 미달가구 비중이 높게 나타남.

④ 최저주거비부담 과다가구 비율

최저주거비부담 과다가구 비율은 가구원수를 고려한 최저주거비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가구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최저주거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저주거비를 의미하며, 인간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주거를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소득계층별로 최저주거비부담 과다가구 비율을 분석한 결과 빈곤층의 경우 최저주거비가 소득의 30%를 초과하는 경우가 전체의 절반이상으로 나타났다. 물론 2000년에 비해 2006년도에 5%p 낮아지긴 했으나 ‘최소한의 주거생활 영

위’라는 차원에서 주거불안정을 겪는 가구가 빈곤층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최저주거비부담 과다가구 비율은 상류층과 중간층에서는 없거나 아주 미미하게 나타났다.

〈표 7-43〉 소득계층별 최저주거비부담 과다가구 비율

(단위: %)

	빈곤층	중하층	중간층	상류층	전체
2000년	57.0	17.3	0.2	0.0	10.6
2006년	52.0	8.5	0.0	0.0	9.8

지역별로 소득 대비 최저주거비가 30%를 넘는 과다가구를 살펴본 결과, 대도시의 경우 전체 가구의 약 1/4이 최저주거비부담 과다가구로 나타났고, 중소도시의 경우는 약 14%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의 경우는 2.2%에 불과해 최저주거비기준 주거비부담 가구는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다.

〈표 7-44〉 지역별 최저주거비부담 과다가구 비율

(단위: %)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전체
2003	25.5	14.2	2.2	19.2

가구주 연령별로는 2000년에는 60세 이상에서 최저주거비부담 과다가구 비율이 전체 가구의 약 1/5정도로 나타났고, 이는 2006년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로써 연령이 높아질수록 소득이 낮아지고, 따라서 주거비부담이 커지는 경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45〉 가구주 연령별 최저주거비부담 과다가구 비율

(단위: %)

구분	20세 미만1)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전체
2000	4.0	4.7	10.4	9.1	6.5	22.3	10.6
2006	16.0	5.1	7.6	7.5	7.0	20.4	9.8

주: 1) 20세 미만의 2000년, 2006년 자료는 해석상의 주의를 요함. 2006년의 해당 연령층에 속하는 가구가 50가구에 불과하여 미달가구 비중이 높게 나타남.

마. 「주거형평성」 관련 지표

① 주택자산 분위수 배율 및 점유율

주택자산 중 비교가 가능한 주거용 자산의 분위수 배율을 분석할 결과 양극 단 차이의 변화를 보여주는 P90/10은 2000년 8.93에서 2006년 11로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P80/20의 경우는 2000년 3.88에서 2006년 4.0으로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주거용 자산의 경우 양 극단의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간층과 상위층간의 격차를 보여주는 P90/50의 경우 2000년 3.42에서 2006년 2.75로 낮아지는 데, 이는 중산층의 경우도 주택에 대한 투자를 통해 어느 정도 자산축적을 이루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7-46〉 주거용 자산 기준 분위수 배율

(단위: 배)

구분	주거용 자산		
	P90/10	P90/50	P80/20
2000	8.93	3.42	3.88
2006	11	2.75	4.0

거주용과 비거주용 주택자산의 파악이 가능한 ‘차상위실태조사(2003)’ 자료를 통해 소득계층별 주택자산 점유율을 분석해보았다.

거주용과 비거주용 자산을 합한 주택자산은 평균 1억 4천만 원 정도로 나타났는데 대략 5분위와 6분위 사이에서 주택자산의 간극이 두드러지며, 10분위의 평균 주택자산 규모가 아래 계층인 9분위에 비해서도 높은 특징을 보인다.

점유율로는 1~4분위까지의 소득계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3~4%인 반면, 9~10분위가 차지하는 비율은 46.3%로 전체 가구의 약 20%에 해당하는 가구가 전체 주택자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용 주택자산의 평균은 약 8천 7백만 원으로 나타났는데, 1~5분위까지의 거주용 평균 자산이 6천 6백 만원 이하로 나타났고, 소득 8분위 이상부터 1억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유율로는 1~4분위의 소득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략 4~6%대 인 반면, 9~10분위의 소득계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38% 정도로 나타나 전체 가구의 약 20%에 해당하는 가구가 가구비중의 약 2배에 해당하는 점유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거주용 주택자산의 평균은 약 5천 4백만 원 정도로 나타났고, 소득 5분위 까지의 비거주용 주택자산은 천 5백만 원 이하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 8분위 이상부터 비거주용 주택자산의 규모가 커지는 데, 특히 소득 10분위의 비거주용 자산 규모는 평균 약 2억 4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득 10분위에 속한 계층의 경우 비거주용 자산규모가 크고, 이것이 주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거주용 자산규모보다 큼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점유율에서도 나타나는데, 소득 1~5분위까지의 비율은 대략 1.5~2.6%인대 반해, 소득 10분위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44%에 달해 비거주용 자산의 불평등이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

〈표 7-47〉 소득계층별 주택자산

(단위: 만원)

	평균 자산			점유율		
	거주용 자산 ¹⁾	비거주용 자산 ²⁾	주택 자산	거주용 자산	비거주용 자산	주택 자산
1분위	3553.99	1069.81	4630.82	4.0	2.0	3.3
2분위	3934.28	1139.01	5077.81	4.5	2.1	3.6
3분위	5190.23	822.41	6012.63	5.9	1.5	4.2
4분위	4726.45	992.81	5720.71	5.3	1.8	4.0
5분위	6600.45	1394.16	7994.61	7.7	2.6	5.8
6분위	9920.49	4639.99	14560.48	11.1	8.4	10.1
7분위	8624.73	4628.58	13253.31	9.9	8.6	9.4
8분위	11461.29	7196.03	18657.32	13.3	13.5	13.4
9분위	15384.80	8260.97	23645.77	17.7	15.4	16.8
10분위	18077.88	24272.47	42350.36	20.4	44.2	29.5
전체	8748.58	5419.30	14174.74	100	100	100

주: 1) 거주용 자산은 자가의 경우 주택가격, 전세의 경우 전세금, 보증부월세의 보증금을 의미함.
 2) 비거주용 자산은 거주하는 집을 제외한 소유나 점유 부동산을 의미함.

지역별로 주택자산을 분석한 결과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평균 자산규모가 농어촌보다 크게 나타났다. 점유율로 파악할 때는 전체 주택자산의 90% 이상이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적 편중이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거주용 자산의 경우 대도시 평균이 약 1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소도시와 농어촌의 경우는 7천만 원 이하로 나타났고, 이를 점유율로 보면 대도시가 전체 거주용 자산의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거주용 자산의 경우 대도시는 가장 낮은 약 4천 2백만 원 정도로 나타났고, 중소도시와 농어촌의 평균 비거주용 자산규모가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점유율은 중소도시가 51.3%, 대도시가 39.4%로 전체 비거주용 자산의 90% 이상이 도시지역

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48〉 지역별 주택자산

(단위: 만원)

	평균 자산			점유율		
	거주용 자산	비거주용 자산	주택 자산	거주용 자산	비거주용 자산	주택 자산
대도시	10351.19	4182.75	14538.58	60.4	39.4	52.4
중소도시	7381.44	6883.32	14269.66	34.1	51.3	40.7
농어촌	5626.95	5883.75	11539.42	5.5	9.3	6.9
전체	8748.58	5419.30	14174.74	100	100	100

② 1인당 주거면적 및 주택자산 지니계수

주거불평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1인당 주거면적과 주택자산의 지니계수를 구해보았다. 주택자산의 경우는 주택자산의 측정방법에 따라 다르고, 실태조사를 실시한 기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아직 신뢰할 만한 연도별 추이를 제공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감안³⁰⁾하고 지니계수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 1인당 주거면적은 2000년 0.32에서 2006년 0.28로 불평등이 완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에서의 1인당 주거면적 분석에서도 알 수 있었듯이 이제 ‘주거의 질’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1인당 주거면적의 주거형평성은 상당히 개선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한편 거주용 주택자산의 경우 지니계수는 2000년 0.51에서 2006년 0.48로 아주 미미하게 줄어드는데, 측정방법의 차이가 있음을 감안하고 그 변화를 해석

주30) 국토연구원에서 제시한 1인당 주거면적의 지니계수는 0.35('93), 0.23('02), 0.32('05)로 본 연구의 분석결과와 대동소이하다.

하면 지니계수의 값이 약 0.5정도로 주거불평등이 심한 편임을 알 수 있다.

〈표 7-49〉 지니계수 변화 추이

구분	TS(단위: 배)	
	1인당 주거면적	주거용 자산
2000	0.32	0.51
2006	0.28	0.48

거주용과 비거주용 주택자산이 파악 가능한 ‘차상위실태조사2003’ 자료를 통해 주택자산의 지니계수를 구해보았다. 그 결과 전체 주택자산(거주용+비거주용)의 지니계수는 0.85로 우리사회의 주택자산의 불평등이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 거주용 자산의 지니계수도 0.81로 노동력 재생산과 재충전의 장소인 ‘거주’ 장소의 불평등 정도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주31)}.

〈표 7-50〉 주거면적 및 주택자산 지니계수

1인당주거면적	주택자산		
	거주용 자산		전체 (거주용+비거주용)
	자가	전체	
2003년	0.32	0.77	0.81
			0.85

4. 주거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이 연구의 목적이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려는 목적보다는 실태에 기초하여 정책의 방향, 다시 말해 사회양극화를 완화 또는 해소하기 위한 정책 방

주31) 주택자산 관련 지니계수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주택자산을 정확하게 조사하기 어려운 관계로 제공기관 및 사용 데이터에 따라 제각각인데, 국토연구원에서는 0.510('02)^{주1)}, 0.56('05)^{주1)}로 제시한 바 있고, 한국노동연구원의 2000년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부동산 소득의 지니계수는 0.66으로 나타났다

향을 제시하는데 그 우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거양극화도 그러한 측면에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주거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유형 및 수준별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지속적인 장기임대주택의 공급과 최저주거기준에 부합하도록 주택개량사업확대 및 최저주거기준이상의 주거로 주거수준향상 유도를 위한 임대료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주거상향이동(예. 월세 → 전세, 전세 → 자가) 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임차시장을 안정화시켜야 한다.

셋째, 주거비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공급 측면에서 저렴한 임대주택공급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수요 측면에서 저리의 전세자금대출 확대 및 임대료 보조제도 확대하고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주거불평등 완화를 위해 주택에 대한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를 강화함으로써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아닌 생활을 영위하는 터전이라는 주거의 기능이 우선시되어야한다.

제3절 의료비 부담의 불평등

1. 분석의 목적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된 의료보험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작된 의료보호제도가 지난 30년 동안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1988년 전 국민 의료보험 시대를 열었고,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최저 생계비 이하의 계층이 권리로써 기초의료보장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되어 운영되었던 의료보험은 하나의 보험자로 통합되면서 건강보험으로 거듭났다. 1997년 경제위기와 2000년 의약분업을 거치면서 2001년에 건강보험 재정위기가 도래하였고 위기극복을 위한 재정전환

특별법이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어 예정보다 빨리 2004년에 재정흑자기조로 돌아섰다. 재정안정을 위해 억제되었던 보장성 요구와 공급자들의 수가현실화 문제가 제기되었고 2007년부터는 새로운 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지난 30년간 우리나라는 세계에 유래가 없을 정도로 짧은 시간에 전 국민 보험 시대를 열었고 내실화 작업도 병행되었다. 그러나 1인당 국민소득 2만 불 시대를 앞둔 요즈음에도 경제적 능력이 취약하여 의료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계층이 적지 않다. 전 국민의 약 7.7%가 돈이 없어 치료가 필요함에도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저생계비 이하의 계층인 의료급여 수급자는 약 17.9%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자이지만 부양의무자 조건 등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의 약 20.9%가 경제적 능력의 한계 때문에 의료이용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현주, 2005). 소득기준 의료이용 행태 분석에서 최고소득자인 20분위의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132천 원인데 반해 최저소득자인 1분위의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45천원으로 나타났다(최병호, 2005).

저소득 취약계층(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계층)은 흡연, 음주, 비만 등 건강에 해로운 행태를 더 많이 가지며(윤태호, 2000), 주관적 건강수준과 질병이환율도 높고(남정자 등, 1996), 사망률도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조홍준 1997, 송윤미 외 2000). 이러한 사실들은 빈곤 규모의 확대와 심화가 불건강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더 많이 초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998년 국제보건회의(World Health Assembly)가 건강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감소가 모든 국가의 우선순위 문제여야 한다고 선언한 것과 공중보건에 관한 유럽연합 행동 계획(EU Action Programme)이 불리한 집단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우선순위를 부여한 것과(Graham H., 2000) 같은 정책변화는 의료서비스의 제한적인 역할과 건강을 결정하는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고려할 때, 의료보장에 국한된 논의만으로는 반복되는 저소득 빈곤층의 건강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없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시사한다. 그러나 소득계층별 의

료이용실태 및 부담정도도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 장에서는 실태 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향후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2.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관련 이론

국내의 의료비와 관련한 연구는 대부분 본인부담 수준을 측정하는 데 머물렀다. 요양기관 종별 또는 입원과 외래로 구분하여 총진료비 중 본인이 일부 부담정도를 측정하였다. 그러한 시도도 비급여가 광범위하여 요양기관 제출 자료에 근거하거나 수진자 내역조사를 통해 연구된 것이기 때문에 결과치에 대한 신뢰가 지극히 제한적이다. 더욱이 본인부담 절대액 크기는 질환의 종류에 따라 비슷할 수 있으나 부담하는 가구의 입장에서 체감하는 본인부담 규모는 소득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소득수준별 본인부담 정도에 대해서는 아직 정교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 소득수준 대비 의료비 부담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과부담 의료비(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가 정의되고 있다. Wyszewinski(1986a)는 교통사고나 후천성면역결핍증보다 훨씬 치료비용이 덜 드는 질환이더라도 그 가계가 가난할 경우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과부담의료비 지출’(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은 <표 7-51>에서 보듯이 고액의 치료비용이 가계에 재정적으로 심대한 부담을 주는 경우(a) 뿐만 아니라 고액의 치료비용은 아니지만 재정적으로 심대한 부담을 주는 경우(c)도 포함하여야 한다(Wyszewinski, 1986a). 똑같은 차원에서 고액의 치료비용이 소요되었지만 재정적으로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면(b) 과부담 의료비로 정의할 수 없다.

<표 7-51> 치료비용 규모와 재정적 부담간 관계

		재정적 부담	
		매우 부담	부담되지 않음
치료비용 규모	고비용 소요	a	b
	저비용 소요	c	d

Berki(1986)와 Stiglitz(1998)는 ‘과부담의료비 지출’을 한 가계의 의료비 지출로 인하여 현재 혹은 미래의 표준적인 생활수준(standard of living) 혹은 일상적 생활수준(customary standard of living)이 위협 받을 때라고 정의하였다. 즉, 소득 혹은 총 소비지출에서 의료비 지출의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증가된 상태는 가구의 의도와 상관없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며, 이는 그 가구의 소비지출이 평균적인 수준 이하로 떨어짐으로써 효용 수준이 감소하고 빈곤화의 가능성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세계보건기구(WHO, 2000)는 각 나라의 보건의료시스템 성과지표들 중의 하나로 보건의료재정의 공평성(fairness in financing contribution)을 측정하여 발표한 바 있다. 이 지표는 한 가구의 총 보건의료지출 비용을 그 가계의 지불능력으로 나누었다. 전자는 한 가계의 직접의료비 지출(out-of-pocket health expenditures)과 건강보험료(health insurance premiums)이며 후자는 총 소비지출 중 식료품비^{주32)}를 제외한 것이다. 이 지표가 50%를 초과할 경우 의료비지출로 인하여 빈곤화에 빠질 수 있다고 하였다. 그 이후 세계보건기구는 앞의 지표에서 의료비 지출이 40% 초과할 경우가 ‘과부담상태’(catastrophic status)이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으나, 각국의 보건의료상황에 따라 그 기준점을 더 높거나 낮을 수 있다고 하였다(Kawabata, Xu, and Carrin, 2002; Xu et al., 2003). 이와 관련한 개발도상국이나 중진국들의 연구들은 과부담의료비 지출 지표로 가구당 총소비지출 중 보건의료비 평균비중을 사용하여 소득계층간 부담수준을 비교하였으며, 특히 많은 문헌들이 가계의 본인부담지출(user fee)에 초점을 두었다 (Fabricant, Kamara, and Mills, 1999). 한편 유럽의 OECD 국가들은 의료관련 보장수준이 높아 과부담의료비 지출 관련 연구는 많지 않으며, 가계의 직접적인 의료비 지출을 kakwani 지수^{주33)}를 사용하여 소득계층간 형평성을 측정하였다 (Wagstaff et al., 1999). 반면 선진국이지만 본인부담이 높은 미국의 경우 과부담

주32) 한 가계의 생존에 필요한 기본비용을 식료품비로 대치하였다.

주33) 소득수준별로 보건의료에 지출된 금액의 누적분포지수(concentration index of payment)와 지니계수로(Gini coefficient)로 정의되는 보건의료비 지출 이전 소득의 누적분포지수간의 차 이로서, 보건의료부문의 지불능력에 있어 누진적으로 재원이 조달되었는지를 측정한다.

의료비 지출이 심각한 정책적 이슈로 다루어져 왔다. Feldstein(1971)은 위중한 질환에 대한 사회보험 설계시 한 가구의 연소득 중 의료비 지출(치료비용과 건강보험료)이 10%를 초과하는 가계를 재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Wyszewianski (1986b)는 한 가구의 연소득 중 의료비 지출(치료비용과 건강보험료) 비중을 5%, 10%, 20% 이상으로 나누어 그 발생빈도를 조사한 바 있다. 1997년 미국 국회예산처(Congress Budget Office, 1997)는 가구의 연소득 중 의료비(치료비용과 건강보험료)가 15% 이상 지출하는 가구를 보호해야 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 이후에도 의료보장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의 의료비 과부담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었다(Rice, Desmond, and Gabel, 1990; Cutler and Zeckhauser, 1999; Burtless and Siegel, 2001). 최근에 Waters · Anderson · Mays(2004)는 일년간 소득대비 의료비 지출(치료비용과 건강보험료) 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경우를 과부담상태로(catastrophic status) 규정하고 소득계층간 발생분포를 조사한 바 있다. Devadasan 외(2005)는 가계소득의 10%가 넘는 의료비 지출을 과부담 의료비로 정의하였다. Xu(2003)는 빈곤가구는 의료보장 체계의 본인부담비가 축소되면 의료비 지출 과부담과 재정적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였다. 의료비 부담의 형평성 문제와 의료욕구 대비 본인부담 크기 또는 보건의료재정분배의 역진성의 정도를 수치화하여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이와 같이 과부담의료비 지출의 측정지표나 기준은 아직 통일되어 있지 않으나 가구단위로 분석하며, 한 가구의 총소득 혹은 총소비 지출을 분모로 하고 건강과 관련된 지출을 분자로 하여 그 비중을 측정하며, 그 기준점은 각 나라가 처한 보건의료정책 상황(context)에 맞게 정하여 연구하는 경향을 띠었다.

〈표 7-52〉 과부담 의료비 지출에 대한 개념 정의

	개념 또는 정의
Wyszewinaski(1986)	치료비용 규모와 상관없이 가계 재정에 심대한 부담을 주는 경우
Berki(1986)와 Stiglitz(1998)	의료비 지출로 인하여 현재 혹은 미래의 표준적인 생활 수준이 위협 받을 수준
세계 보건 기구(2000)	보건의료지출 비용(의료비와 보험료)을 그 가계의 지불 능력(총 소비지출 중 식료품비 제외)으로 나눈 값이 40%를 넘는 경우
Feldstein(1971)	한 가구의 연소득 중 의료비 지출(치료비용과 건강보험료)이 10%를 초과하는 가계
미국 국회예산처(Congress Budget Office, 1997)	가구의 연소득 중 의료비(치료비용과 건강보험료)가 15% 이상 지출하는 가구
Waters · Anderson · Mays(2004)	일년간 소득대비 의료비 지출(치료비용과 건강보험료) 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Devadasan(2005)	가계소득의 10%가 넘는 의료비 지출

기존 연구에서 한 가구의 의료비 지출이 가계재정에 부담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가구의 소득수준이다(Berki, 1986; Wyszewianski, 1986b; Kawabata, Xu, and Carrin, 2002; 이수연, 1997). 또한 세계보건기구의 Kawabata · Xu · Carrin(2002)는 과부담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가구특성 요인으로 소득수준 이외에 가구 구성원들의 연령구조와 가구주의 취업 상태가 있으며, 특히 노인이나 만성질환자, 그리고 장애인이 있는 가구들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필요가 높고 노동력 손실에 따른 가구소득 감소로 인하여 과부담의료비의 지출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미국의 ‘국민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 실태 조사’(National Medical Care Utilization and Expenditure Survey)의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Dicker 와 Sunshine(1988)은 의료비 지출에 따른 가계재정부담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가구 소득수준과 의료보장 유형 유형이라고 보고하였으며, Waters · Anderson ·

Mays(2004)은 가구 소득수준과 만성질환자 수, 그리고 의료보장 유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하였다. Su(2006)는 부유층에 비교해서 아주 적은 의료비 지출액이라 할지라도 저소득층에게는 영향이 크다고 언급하면서 경제상태가 의료비 과부담의 핵심 결정요인이라고 하였다. 국내연구로 이수연(1997)의 연구에 따르면 가구원이 적을수록,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구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치료비 부담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부담의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가구특성 요인을 종합하면 가구소득 이외에 연령구조, 가구크기, 건강상태, 가구주의 취업상태이다.

3. 소득 계층별 의료 이용 실태 분석

소득계층별 의료이용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2001년과 2005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진료실적 자료가 이용되었다. 2000년에 의약분업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 자료는 진료건수나 진료비 규모 등에서 비교가 일관성을 갖기 어렵다. 따라서 자료의 이용가능한 범주내에서 두 시점간 소득계층별 의료이용실태의 변화를 보기위해 2001년과 2005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전수 자료는 분석하기에 자료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대상자와 의료급여대상자의 1%를 샘플링하였다. 건강보험 직장이나 지역의 보험료를 소득의 대리변수로 활용하여 추출하였으며, 추출방법은 직장과 지역을 구분하여 모든 가입세대를 보험료 순위로 나열하고 1%씩 계통수에 따라 계통 추출하였다. 의료급여의 경우는 모두 최저생계비 이하의 세대이므로 소득수준을 하나의 집단으로 판단하여 전체 의료급여 세대 중에서 1%를 무작위 추출하였다.

이렇게 추출된 세대에 속한 모든 구성원의 주민번호를 가지고 2001년과 2005년에 의료이용한 진료실적 자료를 추출하여 본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분석에서 사용된 세대구성과 진료건수는 다음과 같다.

〈표 7-53〉 분석데이터 분포

구분	2001년		2005년	
	표본세대수	진료건수	표본세대수	진료건수
지역	85,543	2,455,491	82,658	2,956,149
직장	76,729	2,550,087	95,368	4,096,095
의료급여	10,049	258,876	12,089	479,050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보험료를 Proxy로 활용하여 추정하였는데, 추정방식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가지고 세대를 추정하였다. 추정식은 다음 (식 7-1)과 같다.

$$\text{지역가입자 세대소득} = \text{세대보험료} \div \text{직장보험료율} \quad \text{-----(식 7-1)}$$

이때 소득의 추정시 지역가입세대의 부과보험료를 2005년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4.31% 혹은 2.155%로 나누어 구한다. 이는 일종의 소득의 대리변수(proxy)로 볼 수 있다. 여기서 4.31%는 직장의 사용주와 근로자의 부담률을 합산한 것이다. 그러나 2.105%는 근로자의 보험료부담률이다. 지역가입자의 부담 능력이 취약하여 정부가 지역가입자에 대해 지역보험지출의 대략半을 보조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담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부담의 1/2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추정하는 데에 2.155%를 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근로자 부담률을 적용하여 추정하였다.^{주34)} 2001년의 소득은 2001년 직장가입자 근로자부담 보험료율인 1.7%를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의료급여의 경우는 모두 최저생계비 이하의 세대로 국가로부터 최저생계비까지는 보전을 받으므로 세대규모별 최저생계비를 그 가구의 소득으로 산정하였

주34) 최병호(2005년)『국민건강보험의 형평성 실태와 정책과제』에서도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직장근로자 부담 보험료율로 추정하여 계산하였음.

다. 연도별 최저생계비 규모는 다음 표와 같다.

〈표 7-54〉 2001년과 2005년의 최저생계비 규모

(단위: 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01년 ¹⁾	333,731	552,712	760,218	956,250	1,087,256	1,226,868
2005년 ²⁾	368,226	609,842	838,796	1,055,090	1,199,637	1,353,680

주: 1)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당 130,000원씩 증가

2)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당 174,882원씩 증가

의료비지출 규모에서 비급여 본인부담은 건강보험의 경우 김정희(2006년) 연구결과인 입원시 비급여 본인부담률 28.6%와 외래 비급여 본인부담률 15.8%, 그리고 약국 2.7%를 적용하여 추정하여 계산하였다. 의료급여의 경우 입원은 신영석(2005년)자료의 1종 14.68%, 2종 14.18%를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그러나 의료급여 외래와 약국의 경우는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제시된 연구가 없어 김정희(2006년)의 건강보험 비급여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종별 진료비 및 본인부담 실태가 아래 표에 나와 있다. 2001년 의료급여 1종의 평균 소득은 42만원으로 추정되었고 평균진료비는 약 21만원, 비급여 포함 본인부담 의료비는 2.2만원으로 추정되었다. 본인부담 의료비는 소득 대비 약 5.2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종의 경우 평균 소득은 57만원으로 추정되었고 평균진료비는 약 11만원, 비급여 포함 본인부담 의료비는 1.9만원으로 추정되었다. 본인부담의료비는 소득 대비 약 3.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에는 의료급여 1종의 평균 소득은 49만원으로 추정되었고 평균진료비는 약 29만원, 비급여 포함 본인부담 의료비는 2.9만원으로 추정되었다. 본인부담의료비는 소득 대비 약 5.9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종의 경우 평균 소득은 65만원으로 추정되었고 평균진료비는 약 15만원, 비급여 포함 본인부담 의료비는 2.3만원으로 추정되었다. 본인부담의료비는 소

득 대비 약 3.4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에 비해 2005년에는 종별에 상관없이 평균소득이 늘어났으나 진료비는 소득 증가분 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비급여 포함 본인부담 지출도 소득 증가분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이 2001년에는 의료급여 수급자 전체 평균으로 약 4.39% 이던 것이 2005년에는 4.9%가 되었다.

〈표 7-55〉 의료급여 수급자의 종별 진료비 및 본인부담 실태(2001년)

(단위: 세대, 원, 건, %)

분위수	세대수	평균소득	평균 본인부담	평균 보험료	평균 진료비	평균 진료건수	(본인부담+보 험료)/평균소득
1종	6,265	422,767	22,234	0	214,199	26.76	5.26
2종	3,784	568,406	18,841	0	112,496	24.11	3.31
급여합계	10,049	477,608	20,956	0	175,902	25.76	4.39

〈표 7-56〉 의료급여 수급자의 종별 진료비 및 본인부담 실태(2005년)

(단위: 세대, 원, 건, %)

분위수	세대수	평균소득	평균 본인부담	평균 보험료	평균 진료비	평균 진료건수	(본인부담+보 험료)/평균소득
1종	7,836	493,951	29,296	0	286,503	41.71	5.93
2종	4,253	652,394	22,561	0	153,091	35.79	3.46
급여합계	12,089	549,692	26,927	0	239,568	39.63	4.90

유사하게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과부담의료비(의료비 지출이 소득의 10%를 넘는 가구) 정도에 대한 분석이 실시되었다. 2001년에 비해 2005년에 소득 보다 의료비 지출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여 과부담의료비 가구도 1, 2종 모두 증가하였다. 2001년에 수급자의 약 11.37%가 소득의 10%이상을 의료비로 지출 하였다. 2005년에는 13.03%가 의료비 과부담 가구로 나타났다. 특히 2종 수급자에 비해 1종 수급자의 비율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법정 본인부담이 없는 1종의 의료비 지출 증가폭이 2종 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는

것은 법정 급여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협소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즉, 비급여의 과도함이 최저생계를 위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7-57〉 의료급여 수급자의 종별 과부담 의료비 분석자료(2001년)

(단위: 세대, %)

분위수	세대수	10% 이상		15% 이상		20% 이상	
		세대수	백분율	세대수	백분율	세대수	백분율
1종	6,265	877	14.00	649	10.36	523	8.35
2종	3,784	266	7.03	174	4.60	121	3.20
급여합계	10,049	1,143	11.37	823	8.19	644	6.41

〈표 7-58〉 의료급여 수급자의 종별 과부담 의료비 분석자료(2005년)

(단위: 세대, %)

분위수	총세대수	10% 이상		15% 이상		20% 이상	
		세대수	백분율	세대수	백분율	세대수	백분율
1종	7,836	1,258	16.05	945	12.06	723	9.23
2종	4,253	317	7.45	220	5.17	162	3.81
급여합계	12,089	1,575	13.03	1,165	9.64	885	7.32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 분위별 진료비 및 본인부담 실태가 아래 표에 나와 있다. 2001년의 경우 소득이 증가할수록 평균진료비, 진료건수 그리고 비급여 포함 본인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2분위와 3분위 사이에서 그 차이가 현격하다. 분위별 소득 차이는 진료비, 진료건수, 비급여 포함 본인부담 수준의 차이보다 더 크게 나타나 소득대비 의료비 지출(비급여 포함 본인부담+보험료) 비율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고 있다. 평균보험료의 경우 1분위가 약 9 천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반해 10분위는 10.7만원을 부담하고 있어 10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진료건수에서는 10분위가 평균적으로 1년에 42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반해 1분위는 12건으로 나타나 약 3.5배 더 진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따라서 진료비도 10분위가 평균 약 24만원으로 1분위의 7.6만원에 비해

3.15배를 보이고 있다. 즉, 소득이 높을수록 의료이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2001년에는 소득의 5.16%를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다.

2005년에도 소득이 증가할수록 평균진료비, 진료건수 그리고 비급여 포함 본인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2001년에는 2분위와 3분위 사이에서 그 차이가 현격했으나 2005년에는 3분위와 4분위간 의료이용의 차이가 현격하다. 이는 의료비 관점에서 2001년에는 한계 계층이 2분위와 3분위 사이에 존재했지만 2005년에는 3분위와 4분위 사이로 이동했을 개연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2005년도에도 2001년처럼 분위별 소득 차이는 진료비, 진료건수, 비급여 포함 본인부담 수준의 차이보다 더 크게 나타나 소득대비 의료비 지출(비급여 포함 본인부담+보험료) 비율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고 있다. 평균보험료의 경우 1분위가 약 8천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반해 10분위는 15만원을 부담하고 있어 18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진료건수에서는 10분위가 평균적으로 1년에 55.6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반해 1분위는 18.92로 나타나 약 2.93배 더 진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따라서 진료비도 10분위가 평균 약 33.4만원으로 1분위의 11.3만원에 비해 2.92배를 보이고 있다. 즉, 2005년에도 2001년처럼 소득이 높을수록 의료이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2005년에는 소득의 6.27%를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다. 2001년에 비해 소득이 늘어남에도 의료비는 소득보다 훨씬 빨리 증가하여 소득대비 의료비 지출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표 7-59〉 건강보험 소득 분위별 진료비 및 본인부담 실태(지역, 2001년)
 (단위: 세대, 원, 건, %)

분위수	세대수	평균소득	평균 본인부담	평균 보험료	평균 진료비	평균 진료건수	(본인부담+보 험료)/평균소득
1	10,112	536,857	40,095	9,127	76,308	12.03	9.17
2	7,145	768,604	38,881	13,066	74,090	12.46	6.76
3	8,430	1,047,270	53,371	17,804	102,363	18.81	6.80
4	8,652	1,369,638	70,053	23,284	134,500	25.63	6.81
5	8,602	1,696,349	81,647	28,838	156,781	30.27	6.51
6	8,487	2,067,411	92,522	35,146	177,964	33.81	6.18
7	8,495	2,500,625	92,975	42,511	179,917	35.73	5.42
8	8,552	3,037,280	100,933	51,634	195,417	37.68	5.02
9	8,524	3,842,864	105,522	65,329	205,498	38.95	4.45
10	8,544	6,294,682	123,069	107,010	240,336	42.05	3.66
합계	85,543	2,308,698	79,852	39,247	154,206	28.70	5.16

〈표 7-60〉 건강보험 소득 분위별 진료비 및 본인부담 실태(지역, 2005)
 (단위: 세대, 원, 건, %)

분위수	세대수	평균소득	평균 본인부담	평균 보험료	평균 진료비	평균 진료건수	(본인부담+보 험료)/평균소득
1	10,115	373,630	58,981	8,052	112,652	18.92	17.94
2	6,925	639,396	52,868	13,779	101,345	17.39	10.42
3	8,593	930,533	58,252	20,053	112,678	22.06	8.42
4	9,033	1,339,581	84,310	28,868	161,825	30.15	8.45
5	8,212	1,768,463	92,760	38,110	179,298	35.33	7.40
6	7,512	2,222,873	101,036	47,903	196,210	40.11	6.70
7	9,250	2,778,528	116,149	59,877	224,761	44.25	6.34
8	6,563	3,393,342	125,576	73,127	243,489	47.25	5.86
9	8,588	4,268,149	139,761	91,979	271,777	50.52	5.43
10	7,867	7,006,131	171,688	150,982	334,101	55.63	4.61
합계	82,658	2,410,757	99,143	51,951	191,839	35.76	6.27

유사하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과부담의료비(의료비 지출이 소득의 10%를 넘는 가구) 정도에 대한 분석이 실시되었다. 2001년에 비해 2005년에 소

득보다 의료비 지출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여 과부담의료비 가구도 모든 소득 분위에서 증가하였다. 2001년에는 1분위의 경우 21.16%가 소득의 10%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었지만 2005년에는 37.01%로 증가하였다. 10분위 계층도 3.2%에서 5.14%로 증가하였다.

〈표 7-61〉 건강보험 소득 분위별 과부담 의료비 분석자료(지역, 2001년)
(단위: 세대, %)

분위수	세대수	10% 이상		15% 이상		20% 이상	
		세대수	백분율	세대수	백분율	세대수	백분율
1	10,112	2,140	21.16	1,455	14.39	1,054	10.42
2	7,145	1,107	15.49	666	9.32	427	5.98
3	8,430	1,414	16.77	790	9.37	480	5.69
4	8,652	1,512	17.48	716	8.28	421	4.87
5	8,602	1,344	15.62	579	6.73	315	3.66
6	8,487	1,085	12.78	448	5.28	253	2.98
7	8,495	809	9.52	303	3.57	175	2.06
8	8,552	628	7.34	273	3.19	171	2.00
9	8,524	417	4.89	207	2.43	128	1.50
10	8,544	273	3.20	147	1.72	88	1.03
합계	85,543	10,729	12.54	5,584	6.53	3,512	4.11

〈표 7-62〉 건강보험 소득 분위별 과부담 의료비 분석자료(지역, 2005년)
(단위: 세대, %)

분위수	세대수	10% 이상		15% 이상		20% 이상	
		세대수	백분율	세대수	백분율	세대수	백분율
1	10,115	3,744	37.01	2,825	27.93	2,251	22.25
2	6,925	1,600	23.10	1,073	15.49	787	11.36
3	8,593	1,760	20.48	1,036	12.06	672	7.82
4	9,033	1,906	21.10	1,056	11.69	670	7.42
5	8,212	1,417	17.26	697	8.49	402	4.90
6	7,512	1,077	14.34	480	6.39	269	3.58
7	9,250	1,120	12.11	501	5.42	290	3.14
8	6,563	595	9.07	266	4.05	169	2.58
9	8,588	678	7.89	323	3.76	206	2.40
10	7,867	404	5.14	212	2.69	123	1.56
합계	82,658	14,301	17.30	8,469	10.25	5,839	7.06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대한 소득 분위별 진료비 및 본인부담 실태가 아래 표에 나와 있다. 2001년의 경우 지역처럼 소득이 증가할수록 평균진료비, 진료 건수 그리고 비급여 포함 본인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과 달리 2분 위부터 8분위 까지 소득대비 의료비 지출 비율이 감소하지 않는다. 이는 중간 계층에서 소득 차이보다 의료비 지출 차이가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2분위의 소득대비 의료비 지출률이 약 8.22이나 8분위의 경우 8.33%로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보험료의 경우 1분위가 약 20천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반해 10분위는 12.2만원을 부담하고 있어 6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다. 지역의 경우에 비해 1분위와 10분위간 보험료 격차는 심하지 않다. 진료건수에서는 10분위가 평균적으로 1년에 54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반해 1분위는 16건으로 나타나 약 3.29배 더 진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따라서 진료비도 10분위가 평균 약 31.6만원으로 1분위의 8만원에 비해 3.95배를 보이고 있다. 즉, 소득이 높을 수록 의료이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에 비해 평균적으로 진료건수, 진료비, 비급여 포함 본인부담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평균적으

로 2001년에는 소득의 8.42%를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어 지역가입자의 5.16%에 비해 월등하게 의료비 지출을 많이 하고 있다.

2005년에도 소득이 증가할수록 평균진료비, 진료건수 그리고 비급여 포함 본인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단 1분위, 2분위, 3분위 사이에는 이러한 경향이 맞지 않는다. 1분위가 의료이용도 많고 비급여 포함 본인부담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도에도 2001년처럼 3분위부터 8분위까지 소득대비 의료비 지출율 비율이 감소하지 않는다. 즉, 소득차이보다 의료비 지출 차이가 작게 나타나고 있다. 평균보험료의 경우 1분위가 약 3만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반해 10분위는 26만원을 부담하고 있어 8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진료건수에서는 10분위가 평균적으로 1년에 71.8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반해 1분위는 41.71건으로 나타나 약 1.72배 더 진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따라서 진료비도 10분위가 평균 약 41.5만원으로 1분위의 11.9만원에 비해 3.48배를 보이고 있다. 즉, 2005년에도 2001년처럼 소득이 높을수록 의료이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2005년에는 소득의 9.34%를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다. 2001년에 비해 소득이 늘어남에도 의료비는 소득보다 훨씬 빨리 증가하여 소득대비 의료비 지출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표 7-63〉 건강보험 소득 분위별 진료비 및 본인부담 실태(직장, 2001년)

(단위: 세대, 원, 건, %)

분위수	세대수	평균소득	평균 본인부담	평균 보험료	평균 진료비	평균 진료건수	(본인부담+보 험료)/평균소득
1	10,983	600,509	40,775	20,004	80,094	16.45	10.12
2	5,903	810,000	39,830	26,783	77,870	15.60	8.22
3	10,509	1,009,138	49,445	32,855	95,814	18.14	8.16
4	4,486	1,200,000	58,855	38,145	113,933	21.66	8.08
5	8,604	1,403,742	75,753	43,143	146,201	27.37	8.47
6	7,730	1,685,175	95,670	48,443	185,886	36.79	8.55
7	6,934	1,990,092	118,438	55,979	230,050	45.62	8.76
8	7,881	2,398,611	135,718	64,183	262,643	51.17	8.33
9	7,438	3,005,198	151,815	78,286	295,051	55.21	7.66
10	6,261	4,784,863	162,865	121,983	316,666	54.20	5.95
합계	76,729	1,791,795	89,896	60,921	174,568	33.23	8.42

〈표 7-64〉 소득 분위별 진료비 및 본인부담 실태(직장, 2005)

(단위: 세대, 원, 건, %)

분위수	세대수	평균소득	평균 본인부담	평균 보험료	평균 진료비	평균 진료건수	(본인부담+보 험료)/평균소득
1	13,636	700,901	61,068	30,423	119,296	24.27	13.05
2	9,591	953,432	58,819	41,421	115,115	23.53	10.51
3	8,030	1,152,930	59,911	49,832	117,729	25.13	9.52
4	7,068	1,347,218	73,205	57,796	142,323	28.57	9.72
5	12,872	1,654,831	89,469	69,902	173,764	34.32	9.63
6	7,043	2,045,353	108,892	83,407	211,925	42.10	9.40
7	8,674	2,425,102	131,810	94,687	256,436	51.01	9.34
8	10,641	3,026,364	175,631	112,952	339,900	64.66	9.54
9	8,770	3,910,409	193,149	142,743	374,906	70.34	8.59
10	9,043	6,320,987	213,479	263,694	415,011	71.89	7.55
합계	95,368	2,284,647	114,823	98,468	223,276	42.95	9.34

유사하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대한 과부담 의료비(의료비 지출이 소득의 10%를 넘는 기구) 정도에 대한 분석이 실시되었다. 2001년에 비해 2005년에 소득보다 의료비 지출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여 과부담 의료비 기구도 평균적으로 증가하였

다. 그러나 6, 7, 8분위에서는 과부담 의료비 기구비율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2001년에는 1분위의 경우 22.78%가 소득의 10%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었지만 2005년에는 26.75%로 증가하였다. 10분위 계층도 9.06%에서 10.54%로 증가하였다.

〈표 7-65〉 건강보험 소득 분위별 과부담 의료비 분석자료(직장, 2001년)

(단위: 세대, %)

분위수	세대수	10% 이상		15% 이상		20% 이상	
		세대수	백분율	세대수	백분율	세대수	백분율
1	10,983	2,502	22.78	1,614	14.70	1,111	10.12
2	5,903	917	15.53	562	9.52	378	6.40
3	10,509	1,703	16.21	951	9.05	575	5.47
4	4,486	736	16.41	408	9.09	254	5.66
5	8,604	1,562	18.15	809	9.40	472	5.49
6	7,730	1,587	20.53	758	9.81	417	5.39
7	6,934	1,517	21.88	713	10.28	347	5.00
8	7,881	1,501	19.05	639	8.11	357	4.53
9	7,438	1,146	15.41	480	6.45	284	3.82
10	6,261	567	9.06	245	3.91	152	2.43
합계	76,729	13,738	17.90	7,179	9.36	4,347	5.67

〈표 7-66〉 소득 분위별 과부담 의료비 분석자료(직장, 2005)

(단위: 세대, %)

분위수	세대수	10% 이상		15% 이상		20% 이상	
		세대수	백분율	세대수	백분율	세대수	백분율
1	13,636	3,648	26.75	2,431	17.83	1,711	12.55
2	9,591	1,927	20.09	1,132	11.80	732	7.63
3	8,030	1,453	18.09	832	10.36	498	6.20
4	7,068	1,366	19.33	747	10.57	456	6.45
5	12,872	2,385	18.53	1,273	9.89	756	5.87
6	7,043	1,350	19.17	688	9.77	395	5.61
7	8,674	1,693	19.52	837	9.65	468	5.40
8	10,641	2,086	19.60	1,014	9.53	608	5.71
9	8,770	1,425	16.25	681	7.77	399	4.55
10	9,043	953	10.54	441	4.88	276	3.05
합계	95,368	18,286	19.17	10,076	10.57	6,299	6.60

4. 의료비부담의 불평등 실태 분석에 따른 정책 과제

앞 절에서 분석된 소득계층별 의료이용 실태 분석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소득증가보다 의료비 지출 증가가 훨씬 심하다. 진료비, 진료건수, 본인부담 등 모든 지표의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은 IMF 경제위기를 일정부분 극복하는 과정에서 잠재되었던 의료 수요가 현재화 되었던 시기로 알려져 있다. 2001년이 특별히 의료이용을 자제했던 시기가 아니므로 2001년 대비 2005년의 의료비 지출 증가는 필요에 의해 소비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둘째, 고소득자가 저소득자에 비해 의료이용을 많이 하고 있다. 저소득층이 의료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있고 질환율도 높다는 많은 선행연구의 결과를 감안하면 저소득자들이 의료이용 욕구가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경제적 능력부족으로 의료이용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저소득층의 소득대비 의료비 부담률이 고소득층에 비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지역가입자 중 1분위 계층은 2001년에 평균적으로 소득의 9.17%를 의료비로 지출하였으나 2005년에는 17.94%를 사용하고 있다. 반면 10분위에 있는 계층은 3.66%에서 4.61%로 증가하여 1분위 증가속도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넷째, 2001년에는 소득기준 2분위와 3분위간 의료이용량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났으나 2005년에는 3분위와 4분위간 차이가 두드러지고 있다. 2001년에는 전 국민의 약 20%에 해당되는 저소득층과 나머지 계층간 의료이용의 차이가 발생하였으나 2005년에는 전국민의 약 30%와 나머지 계층으로 분리되고 있다. 의료이용측면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의 증가가 아닌가 판단된다.

위와 같은 결과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의료이용 측면에서 2001년과 2005년 사이 의료측면에서 양극화가 심화되지는 않았다.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의료비 지출이 늘어났고 절대 이용량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상대적인 관점에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심화되었고 향후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해도 의료비 증가속도는 소득 증가보다 빠를 것이다. 더욱이 노령인구가 급속히 늘어나는 현실에서 의료비 증가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현재 건강보험의 급여율이 대략 60% 내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보장성의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이 저소득층의 생계를 심각하게 위협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보험료를 인상하더라도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 빈곤으로 추락하는 가장 큰 이유가 중질환 때문에 발생하는 의료비임이 실태조사 결과 드러났다. 사전적인 예방이 중요하지만 일단 질환이 발생(위험이 현실화) 되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기본적인 의료서비스가 보장되어야 한다. 사회보험의 기본원리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OECD 선진국도 약 80%의 급여율을 보이고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제8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사회양극화를 구성하는 다양한 현상들에 대해 실증적 검토를 수행하였다. 1996년부터 2006년 상반기까지 1인가구와 농어촌 가구를 포함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소득과 소비지출의 분배구조 변화를 분석한 결과,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은 빈곤의 확대와 심화였다. 빈곤율은 절대적 기준과 상대적 기준을 적용한 경우 모두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빈곤격차비율도 증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양극화라는 새로운 쟁점이 제기되는 것과 무관하게 빈곤의 해소라는 전통적 과제가 여전히 중요함을 시사한다.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빈곤율은 물론 빈곤격차비율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빈곤층의 생활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정책적 노력의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화 방지기능과 탈빈곤 촉진기능이 취약하다는 것인 이미 많은 연구에서 지적되어 온 사실이나, 빈곤격차비율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빈곤층의 기본적 생활보장기능마저도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매우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소득분배의 불평등은 최근 들어 다소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경제위기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소비지출의 불평등은 오히려 최근 들어 급속히 확대되고 있었다. 소득 및 소비지출의 분위간 불평등도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는데, 전체 구간을 10분위로 구분하였을 경우 5분위 이하에서는 점유율의 하락이, 6분위 이상에서는 점유율의 상승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하위 1, 2분위의 점유율 하락이 두드러졌다. 하위분에서는 점유율의 하락과 함께 분위 내 불평등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양극화를 빈곤의 심화로만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물론 앞서 언급

한대로 빈곤의 심화는 부인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이지만, 빈곤층 이외의 계층에서도 분배상태의 악화가 관측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 계층의 소득점유율 위축과 계층 내 분배상태 악화에 대해서는 노동시장과 고용조건 등 추가적 사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고용과 소득의 불안이 일차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정확한 실태파악과 대응책 마련을 위해서는 소득 하위계층의 종사산업과 고용지위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중산층의 규모변화를 추정한 결과, 지난 10년간 중산층은 가구비중 측면에서나 소득 및 소비지출 점유율 측면에서 볼 때 모두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산층의 위축은 울프슨지수의 변화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축소된 중산층이 어느 계층으로 귀속되었는지를 추정해 보면, 가구비중의 경우 빈곤층으로 편입된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가구소득의 점유율 면에서는 상류층의 점유율이 상승하였다. 이는 중산층이 상향이동했을 가능성보다는 하향이동했을 가능성이 높음을 강하게 시사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양극화대책이란 기준의 빈곤대책 뿐만 아니라 중산층의 소득안정과 빈곤화방지를 위한 대책을 포괄하는 것이어야 한다.

에스테반과 레이의 양극화지수를 통해 파악한 우리나라의 극화경향은 전반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구체적인 양상은 변수별로, 그리고 패러미터 값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 양극화지수의 지속적 심화로 표현되기는 어려운 모습을 보였다. 소득의 경우 양극화보다는 3극화의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게 관측되었고, 2000년 이후에는 소득보다는 소비에서 극화현상이 더욱 두드러졌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양극화지수를 통해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이해하려는 시도가 갖는 문제점을 보여준다. 현실에서 극화현상은 상당히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전체 인구를 평균값을 기준으로 양분화하여 고찰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균집화의 가능성이 있는 소득구간을 중심으로 한 원인파악과 대응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2003년부터 2006년 상반기까지 계층이동양상을 분석한 결과, 경상소득을 기

준으로 계층을 구분했을 때 계층상승비율은 늘어나고 계층하락비율은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 계층구분에서는 반대의 양상이 확인되었다. 전체적으로 중하층의 계층이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 계층의 소득불안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과는 앞의 분석과는 달리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우리 사회의 계층이동의 동태적 양상을 보여주기에는 일정한 한계를 갖는다. 그러나 데이터의 한계를 인정하더라도 빈곤경험과 계층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으로부터는 일정한 함의를 도출해낼 수 있다. 빈곤경험에 취업가구원수비율과 여성가구주여부, 가구주의 연령과 교육수준이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고 있었는데, 특히 취업가구원수의 비율의 설명력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취업가구원수는 계층의 상승이동 경험에는 정(+)의 영향을, 하방이동 경험에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해 구분되었다. 결국 빈곤의 예방과 계층상승을 위해서는 고용기회의 제공과 이를 통한 안정적 소득획득이 가장 중요함이 다시 확인된 셈이다. 한편 여성과 연령 변수는 계층의 상승 및 하락에 모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가구와 고령자가구의 소득불안이 심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가구주의 산업과 직업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건설업, 도소매·숙박업, 민간서비스업 종사자가 특히 취약한 집단임이 드러났다. 대체로 이 산업분야에서 영세자영업 비중이 높음을 감안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이 산업 부문 종사자의 소득안정을 위한 대책이, 장기적으로는 해당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영양상태의 불평등을 분석한 결과, 취약계층에서 건강 및 영향상태가 양호한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교육수준과 소득이 낮을수록 침상와병일수나 만성질환의 개수가 높았다. 반대로 높은 소득 분위일수록 흡연율은 낮고 건강검진율이 높은 등 계층간 불평등이 건강 및 영양상태에도 그대로 반영되는 양상이었다. 건강 및 영양상태는 국민 개인의 노동능력 상태를 의미하며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인적자원과 직결된다는 점을

의미하면, 저소득층의 건강 및 영양상태 개선을 위한 제도적 모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거문의 불평등 분석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각종 양적, 질적 지표에서 저소득층의 절대적 상태는 개선되었지만 소득분위간 주거상태의 불평등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었다. 특히 빈곤층의 월소득대비 임대료의 비율이 과다한 것으로 드러났고, 주거비 지불능력 미달가구나 최저주거비부담 과다가구의 비율도 절반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인당 주거면적과 주거용 자산의 지니 계수는 개선되었지만, 상하위분위간 주거용 자산의 분위수배율은 2000년에 비해 2006년 상반기에 더욱 확대된 양상을 보였다. 저소득층의 주거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최저주거 기준 미달가구에 대해 유형별 및 수준별 정책목표를 설정하여야 하며, 최저주거기준에 부합하는 장기임대주택의 공급 사업과 주택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의료비부담의 측면에서 소득간 불평등 구조를 분석한 결과는 양극화라는 단어 보다는 저소득층의 부담 증가로 요약될 수 있다. 2001년과 2005년 사이에 의료비지출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전 계층에서 빠르게 증가하였다. 소득의 증가속도에 비해 의료비 지출의 증가속도가 모든 계층에서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단, 소득대비 의료비부담율의 증가속도를 보면,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훨씬 빠른 것으로 드러났다. 저소득자는 고소득자에 비해 의료이용을 자제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향이 관측된다는 것은 의료보장의 확대가 시급함을 입증하는 것이다. 향후 노령인구의 비율이 더욱 증가할 것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건강보험제도와 같은 본인부담구조 하에서는 저소득층의 의료비지출이 생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정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볼 때, 양극단간 격차의 확대와 중산층의 축소라는 관점에서 파악한 양극화는 뚜렷한 진행 양상을 보였다. 반면 일반적 의미의 불평등과 양극화지수로 표현되는 불평등은 일관된 모습보다는 다소 복잡한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분명한 것은 저소득층의 소득불안이 심해지고 있

다는 사실이었다. 이는 빈곤층뿐만 아니라 중산층의 일부에도 해당되는 현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계층의 소득불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인지는 우리나라의 산업 및 고용구조 변화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면밀한 분석이 수반되어야 파악될 수 있겠으나, 우선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사회보장정책의 대상 집단이 빈곤층뿐만 아니라 그 위의 계층으로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상당한 비중의 계층이 소득불안을 경험하고 있는 만큼 현재 빈곤층이 아닌 집단에 대해서도 빈곤화의 위험을 방지하고 계층의 상향이동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신욱, 「양극화와 언론보도-빈부격차」, 『신문과 방송』, No.424. 한국언론재단, pp.24~29.
- 강혜정, 「농가소득 양극화, 그 실태와 정책과제」, 『농업·농촌의 양극화: 진단과 대응』, 농정연구센터 심포지엄시리즈13, 농정연구센터, 2006.
- 건설교통부, 『주택정책전환에 따른 통계기반구축 연구』, 2004.
- 국민경제자문회의,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 국민경제자문회의.
- 남찬섭, 「사회양극화와 사회복지의 과제」, 『상황과 복지』 제22호, 2006. pp.29~70.
- 김혜승 외, 『임대료보조제도 확대도입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04.
- 김홍종 외, 『전 세계적 양극화 추세와 해외 주요국의 대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양극화 해결을 위한 ‘동반성장’전략 개발』, 2005.
- 민승규 외, 『소득양극화의 현황과 원인』, 삼성경제연구소, 2006.
- 신광영, 「한국의 불평등 구조와 추이」,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제9호, 한울, 2006.
- 신영석 외, 『기초보장 급여체계 합리화 방안-의료급여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 안종범·석상훈, 「양극화의 정치왜곡과 정책부실」, 『한국경제의 양극화현상: 진단과 정책과제』, 한국응용경제학회 6차정책세미나 발표논문집, 2006.
- 유경준·김대일, 『소득분배 국제비교와 빈곤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03.

- 유팔무·김원동·박경숙, 『중산층의 몰락과 계급양극화』, 소화, 2005.
- 윤주현·김근용·박천규, 『지역간·계층간 주거서비스 격차 완화방안 연구(I): 주거서비스 지표의 개발 및 측정』, 국토연구원, 2005
- 윤진호, 「소득양극화의 원인과 정책대응 방향」, 서울사회경제연구소 편, 『한국경제: 세계화, 구조조정, 양극화를 넘어』, 한울아카데미, 2005.
- 윤진호, 「노동시장양극화의 추세와 정책과제」, 서울사회경제연구소 편,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정책: 금융, 노동시장, 부동산, 지역』, 한울아카데미, 2005.
- 윤태호, 「우리나라의 사회계층간 건강행태의 차이」,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 은기수, 「경제적 양극화와 자살의 상관성: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한국인구학』 제28권 제2호, 2005, pp.97~129.
- 이내황 외, 『경제양극화의 원인과 정책과제』, 한국은행, 2004.
- 이병훈·김유선, 「노동생활 질의 양극화에 관한 연구 - 정규·비정규의 분절성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제60호, 2003. pp.120~149.
- 이수연, 「도시근로자 소득수준간 의료서비스 이용 및 치료비 부담률의 형평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 이우현, 「제조업 산업간 성장 양극화와 남북경험」, 『국제경제연구』, 제4권 제3호, 1998.
- 이태진 외, 『저소득층 주거실태 및 주거급여 현실화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 이현주 외, 『차상위계층 실태분석 및 정책제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 임병인, 「KGSS 자료를 이용한 소득양극화 현상 분석」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심포지엄 자료집』, 2005, pp.107~125.
- 전병유·김혜원·신동균, 『노동시장 양극화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5.

정성진, 「세계적 양극화: 마르크스 가치론적 관점」,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제9호, 한울, 2006.

조홍준, 「공교 의료보험 피보험자의 사회계층별 사망률 차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1997.

최광·강석훈·안종범, 『국가정체성과 나라경제 바로보기: 양극화의 거짓과 진실』, 봉명, 2006.

최희갑, 「외환위기와 소득분배의 양극화」, 『국제경제연구』 제8권 제2호, 2002, pp.1~20.

최병호 외, 『국민의료의 형평성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한국개발연구원 편, 『양극화 극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경제정책제안』, 한국개발연구원, 2006.

Action, J. P., "Nonmonetary Factors in the Demand for Medical Services: Some Empirical Evidenc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3(3), 1975.

Aghevil, B. B. & F. Mehran, "Optimal Gourping of Income Distribution,"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Vol.76, No.373, 1981, pp.22~26.

Berki S. E., "A look at catastrophic medical expenses and the poor", *Health Affairs* 5(4), 1986, pp.139~145.

Burtless G, Siegel S., *Medical spending, health insurance, and measurement of American Poverty*, Brookings Institution, 2001.

Chakravarty, S & A. Majumder, "Inequality, Polarization and Welfare: Theory and Application," *Australian Economic Papers*, 40, pp.1~13.

Congressional Budget Office, *Catastrophic health insurance*, CBO, 1997.

Cowell, F. A. ed. *The Economics of Poverty and Inequality*, Edward Elga, 2003.

- Cutler D.M., Zeckhauser R. J., *The anatomy of health insurance*, National Bureau of Economic Working Paper, 1999.
- Devies, J. B. & A. F. Shorrocks, "Optimal Grouping of Income and Wealth Data," *Journal of Econometrics*, Vol.42, 1989, pp.97~108.
- Dicker M., Sunshine, J. H., *Determinants of financially burden-some family health expenses*, United States, 1980,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8.
- Duclos, J-Y., J. Esteban & D. Ray, "Polarization: Concepts, Measurement, Estimation," *Econometrica*, Vol.72, No.6, 2004. pp.1737~1772.
- Esteban, J., C. Gradin & D. Ray, "Extensions of a Measure of Polarization with an Application to the Income Distribution of Five OECD Countries," Working Paper No.218, Syracuse University, 1999.
- Esteban, J. & D. Ray, "On the Measurement of Polarization," *Econometrica*, Vol.62, no.4, 1994, pp.819~851.
- Fabricant S. J., Kamara C.W., and Mills A., "Why the poor pay more: household curative expenditures in rural Sierra Leone",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Planning and Management* 14(3), 1999. pp.179~199.
- Feldstein M. S., "A new approach to national health insurance", *The Public interest* 23, 1971.
- Graham H. "From science to policy; options for reducing health inequalities", in *Poverty, Inequality and Health: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edited by Leon D. and Walt G., New York: Oxford, 2001.
- Jenkins, S. P. "Did the Middle Class Shrink during the 1980s? UK Evidence from Kernel Density Estimates," *Economic Letters*, Vol.49, 1995, pp.407~413.
- Kawabata K., Xu K., and Carrin G., "Preventing impoverishment through protection against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Bulletin of World Health Organization*

- Organization 80(8), 2002.
- Parker S. W., Wong R., "Household income and health care expenditures in Mexico", *Health Policy* 40(1), 1997, pp.245~248.
- Quah, D., "Empirics for Growth and Distribution: Stratification, Polarization, and Convergence Clubs," *Journal of Economic Growth*, 2, 1997, pp.27~59.
- Ravillion, M., "Measuring Social Welfare with and without Poverty Line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84, No.2, 1994, pp.359~364.
- Rice T., Desmond K., and Gabel J., "The Medicare Catastrophic Coverage Act: A post-moterm", *Health Affairs* 9(3), 1990, pp.76~87.
- Ruso G., Herrin A. N., *The determinants of household health care expenditures in the Philippines*, East-West Center, 1993.
- Stiglitz J. E., *Economics of the Public Sector*(2nd ed), W.W. Norton & Company; New York, 1988.
- Wagstaff A., Doorslaer E. V., "Catastrophe and impoverishment in paying for health care with applications to Vietnam 1993~1998", *Health Economics* 12(11), 2003, pp.921~934.
- Wagstaff A., van Doorslaer E., van der Berg H., Calonge S., Christianen T., and Citoni G., "Equity in the finance of health care: some further international comparisons", *Journal of Health Economics* 18, 1999, pp.263~290.
- Wang, Y-Q & K-Y Tsui, "Polarization Orderings and New Classes of Polarization Indices," *Journal of Public Economic Theory*, Vol.2, No.3, 2000, pp.349~363.
- Waters H. R., Anderson G. F., and Mays J., "Measuring financial protection in health in the United States", *Health Policy*, 69(3), 2004, pp.339~349.
- Wolfson, M. "Conceptual Issues in Normative Measurement: When Inequality

- Diverg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84, No.2, 1994, pp.353~358.
- World Health Organization, The World Health Report 2000, *Health System: Improving Performance*,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0.
- Wyszewinski L, "Financially catastrophic and high-cost cases: definitions, distinctions, and their implication for policy formulation", *Inquiry* 21, 1986a, pp.617~634.
- _____, "Families with catastrophic health care expenditures", *Health Services Research* 21(5), 1986(b), pp.617~623.
- Xu K., Evans D. B., Kawabata K., Zeramini R., Klavus J., and Murray C. J. L., "Household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a multicountry analysis", *Lancet* 362(9378), 2003, pp.111~117.
- Zhang, X., & R. Kanbur, "What Differences Do Polarization Measures Makes? An Application to China," *The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Vol.37, No.3, 2001, pp.85~98.
- Zeger S. L., Liang K. Y., Albert. P. S., "Models for longitudinal Data: 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 Approach." *Biometrika* 44, 1988, pp.1049~1060.

부 록

〈부표 1〉 계층별 가구구성의 변화 - 가구주 성

	빈곤층		중하층		중간층		상류층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996	48.9	51.1	72.1	27.9	85.0	15.0	88.0	12.0
2000	54.9	45.1	73.6	26.4	83.3	16.7	88.5	11.5
2003	58.1	41.9	75.6	24.4	86.8	13.2	90.6	9.4
2006상	52.6	47.4	66.0	34.0	80.5	19.5	86.0	14.0

〈부표 2〉 계층별 가구구성의 변화 - 가구주 연령

	빈곤층					중하층					중간층					상류층				
	29-	30	40	50	60+	29-	30	40	50	60+	29-	30	40	50	60+	29-	30	40	50	60+
1996	12.3	17.3	15.0	13.7	41.6	18.8	33.1	21.8	13.4	12.9	15.8	37.3	26.5	14.9	5.4	11.5	31.1	28.0	22.4	7.0
2000	7.0	16.8	18.2	13.1	44.8	11.9	28.1	27.0	15.2	17.8	11.5	30.9	30.8	17.7	9.1	8.1	25.4	34.4	23.7	8.5
2003	2.8	11.4	19.0	14.1	52.7	6.3	22.2	28.1	18.1	25.4	8.8	32.4	29.9	17.8	11.1	7.2	31.9	34.8	19.2	6.9
2006상	4.8	13.2	19.0	15.5	47.4	6.6	23.6	29.1	17.5	23.2	6.4	28.3	34.6	19.9	10.8	4.5	25.1	38.2	24.0	8.2

〈부표 3〉 계층별 가구구성의 변화 - 가구주 학력

	빈곤층					중하층					중간층					상류층				
	초	중	고	전	대+	초	중	고	전	대+	초	중	고	전	대+	초	중	고	전	대+
1996	49.3	14.8	26.3	3.1	6.6	20.7	20.0	43.4	5.5	10.5	10.5	16.2	48.0	6.8	18.6	5.4	9.9	38.1	7.0	39.5
2000	47.2	16.4	24.5	5.6	6.3	21.7	19.2	41.9	9.1	8.1	12.8	13.9	44.2	11.6	17.6	5.8	7.3	33.7	11.2	42.1
2003	50.4	14.3	25.6	1.9	7.7	24.5	18.2	42.9	3.7	10.7	10.7	12.8	44.6	7.6	24.3	3.6	5.5	30.7	6.6	53.5
2006상	40.8	17.4	28.9	3.6	9.2	19.3	16.9	42.3	7.9	13.7	8.8	12.8	44.4	9.5	24.5	4.7	7.6	32.8	9.6	45.4

〈부표 4〉 계층별 가구구성의 변화 - 가구원수

	빈곤층							중하층							중간층							상류층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996	30.9	27.6	16.9	16.7	5.7	1.7	0.5	14.0	18.0	21.7	31.8	10.0	3.5	1.0	9.7	14.2	22.5	37.3	11.5	3.5	1.3	10.2	17.5	23.5	33.7	10.0	3.7	1.4
2000	33.9	26.6	16.1	16.7	5.2	1.2	0.3	14.6	20.9	23.5	29.7	8.1	2.7	0.6	10.7	15.7	23.8	35.7	10.7	2.6	0.8	9.8	18.5	25.2	34.1	8.9	2.6	0.8
2003	34.8	30.5	16.5	13.5	3.5	1.0	0.2	14.8	26.1	22.1	26.7	7.4	2.4	0.4	10.1	15.9	24.5	36.3	10.4	2.5	0.4	9.4	15.6	23.7	38.9	9.5	2.5	0.4
2006 상	33.3	31.0	16.8	12.8	4.8	1.0	0.4	14.8	26.3	22.5	26.8	7.5	1.9	0.2	10.2	18.1	25.0	35.7	8.4	2.1	0.4	9.5	20.7	27.5	33.2	7.0	1.4	0.8

〈부표 5〉 경상소득 양극화지수 관련 통계량

	중위값/평균	L(m)	L(mean)	지니계수	p1	p2
1996	0.8852	0.31082	0.40770	0.28039	0.64376	0.35624
2000	0.8385	0.27147	0.39549	0.34594	0.67643	0.32357
2003	0.8572	0.26231	0.35218	0.34936	0.62947	0.37053
2006상	0.8922	0.26809	0.34485	0.33707	0.61843	0.38157

〈부표 6〉 가처분소득 양극화지수 관련 통계량

	중위값/평균	L(m)	L(mean)	지니계수	p1	p2
1996	0.8913	0.30981	0.40581	0.28110	0.64189	0.35811
2000	0.8431	0.27380	0.39771	0.34328	0.67281	0.32719
2003	0.8633	0.26472	0.35586	0.34698	0.62833	0.37167
2006상	0.8975	0.27014	0.34306	0.33388	0.61349	0.38651

〈부표 7〉 소비지출 양극화지수 관련 통계량

	중위값/평균	L(m)	L(mean)	지니계수	p1	p2
1996	0.8312	0.28899	0.42672	0.32246	0.68543	0.31457
2000	0.8935	0.33071	0.43039	0.24896	0.65438	0.34562
2003	0.9091	0.31074	0.39294	0.27623	0.62390	0.37610
2006	0.8460	0.28903	0.41264	0.31861	0.66959	0.33041

〈부표 8〉 경상소득 3극화지수 관련 통계량

	c1	c2	p1	p2	p3	mean1	mean2	mean3	L(p1)	L(p2)	G-G(ρ)
1996	0.7220	1.2323	0.3848	0.3999	0.2153	0.4927	0.9426	1.7705	0.2000	0.5910	0.0204
2000	0.6681	1.2535	0.4064	0.3999	0.1937	0.4198	0.9204	1.9413	0.1865	0.5890	0.0396
2003	0.6509	1.2845	0.3590	0.3534	0.1936	0.3764	0.9298	1.9319	0.1613	0.5535	-0.0393
2006	0.6667	1.3097	0.3778	0.3945	0.2277	0.3694	0.9515	1.9305	0.1462	0.5395	0.0133

〈부표 9〉 가치분소득 3극화지수 관련 통계량

	c1	c2	p1	p2	p3	mean1	mean2	mean3	L(p1)	L(p2)	G-G(ρ)
1996	0.7225	1.2290	0.3788	0.4037	0.2175	0.4890	0.9416	1.7625	0.1953	0.5959	0.0216
2000	0.3433	1.2503	0.4023	0.4049	0.1928	0.4247	0.9244	1.9348	0.1861	0.5937	0.0411
2003	0.6557	1.2819	0.3537	0.3565	0.1959	0.3776	0.9315	1.9195	0.1587	0.5532	-0.0388
2006	0.6691	1.3003	0.3700	0.3971	0.2330	0.3682	0.9495	1.8983	0.1426	0.5371	0.0146

〈부표 10〉 소비지출 3극화지수 관련 통계량

	c1	c2	p1	p2	p3	mean1	mean2	mean3	L(p1)	L(p2)	G-G(ρ)
1996	0.7172	1.3031	0.4328	0.4056	0.1616	0.4930	0.9565	2.1729	0.2240	0.6314	0.0300
2000	0.7417	1.1830	0.3856	0.3980	0.2164	0.5413	0.9359	1.6374	0.2231	0.6212	0.0219
2003	0.7059	1.2005	0.3325	0.3626	0.2110	0.4625	0.9291	1.6667	0.1826	0.5825	-0.0518
2006	0.7061	1.2844	0.4145	0.4059	0.1796	0.4677	0.9495	2.0412	0.2048	0.6122	0.0249

〈부표 11〉 경상소득 4극화지수 관련 통계량(1)

	c1	c2	c3	p1	p2	p3	p4
1996	0.6171	0.9497	1.4560	0.2758	0.3301	0.2657	0.1284
2000	0.5464	0.9209	1.5098	0.2946	0.3232	0.2667	0.1155
2003	0.5191	0.9340	1.5497	0.2655	0.2840	0.2348	0.1218
2006 ^상	0.5283	0.9616	1.5708	0.2779	0.3133	0.2667	0.1421

〈부표 12〉 경상소득 4극화지수 관련 통계량(2)

	mean1	mean2	mean3	mean4	L(p1)	L(p2)	(Lp3)	G-G(ρ)
1996	0.4229	0.7794	1.1612	2.0657	0.1231	0.3946	0.7201	0.0022
2000	0.3478	0.7275	1.1552	2.3286	0.1120	0.3691	0.7059	0.0182
2003	0.3034	0.7209	1.1918	2.2397	0.0961	0.3405	0.6745	-0.0589
2006 ^상	0.2865	0.7428	1.2187	2.2316	0.0834	0.3273	0.6678	-0.0087

〈부표 13〉 가치분소득 4극화지수 관련통계량(1)

	c1	c2	c3	p1	p2	p3	p4
1996	0.6169	0.9499	1.4517	0.2703	0.3322	0.2681	0.1293
2000	0.5536	0.9228	1.5052	0.2890	0.3280	0.2680	0.1150
2003	0.5268	0.9423	1.5509	0.2642	0.2861	0.2358	0.1200
2006상	0.5317	0.9628	1.5564	0.2725	0.3140	0.2693	0.1443

〈부표 14〉 가치분소득 4극화지수 관련통계량(2)

	mean1	mean2	mean3	mean4	L(p1)	L(p2)	L(p3)	G-G(ρ)
1996	0.4169	0.7796	1.1609	2.0547	0.1188	0.3918	0.7199	0.0033
2000	0.3505	0.7327	1.1555	2.3204	0.1103	0.3720	0.7094	0.0198
2003	0.3057	0.7309	1.1988	2.2429	0.0959	0.3444	0.6803	-0.0584
2006상	0.2842	0.7464	1.2152	2.1932	0.0810	0.3263	0.6687	-0.0074

〈부표 15〉 소비지출 4극화지수 관련 통계량(1)

	c1	c2	c3	p1	p2	p3	p4
1996	0.6063	0.9543	1.6015	0.3122	0.3400	0.2581	0.0897
2000	0.6457	0.9356	1.3652	0.2738	0.3233	0.2674	0.1355
2003	0.5962	0.9358	1.4012	0.2442	0.2866	0.2416	0.1337
2006상	0.5911	0.9511	1.5633	0.3033	0.3319	0.2600	0.1049

〈부표 16〉 소비지출 4극화지수 관련 통계량(1)

	mean1	mean2	mean3	mean4	L(p1)	L(p2)	Lp3)	G-G(ρ)
1996	0.4279	0.7702	1.1967	2.7659	0.1403	0.4152	0.7395	0.0092
2000	0.4792	0.7867	1.1157	1.8577	0.1402	0.4121	0.7310	0.0061
2003	0.3942	0.7684	1.1345	1.8832	0.1143	0.3757	0.7011	-0.0678
2006상	0.4011	0.7648	1.1888	2.4913	0.1286	0.3969	0.7237	0.0042

연구보고서 2006-11

사회양극화의 실태와 정책과제 A Study on Social Polarization in Korea

발행일 2006년 12월 일 값 6,000원
저자 강신욱 외
발행인 김용문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산42-14(우: 122-705)
대표전화: 02) 380-8000
<http://www.kihasa.re.kr>
등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쇄 예원기획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ISBN 978-89-8187-401-8 93330